

◆ KINU 연구총서 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 양문수

◆ KINU 연구총서 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 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인 쇠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5 (팩시밀리) 02-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인 쇠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BN 978-89-8479-772-7 93340

가 격 ₩9,0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xi
I. 서론	1
II.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일반적 논의와 세계적 추세	7
1. 비공식 경제의 개념	9
2.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29
III.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	39
1. 시장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41
2. 사유화의 진전과 기업가의 출현	56
IV.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 비공식 경제 (I): 기본적 성장요인	69
1.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	71
2. 기업가 활동의 전개	96
V.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 비공식 경제 (II): 분야별 성장요인	119
1.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121
2. 대외무역과 비공식 경제	139
3. 교통·통신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	151

VI. 결론	171
참고문헌	18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9

표 목 차

<표 II-1>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2경제 및 제3경제의 정의 ...	11
<표 II-2>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2경제/비공식 경제의 주요 내용	14
<표 II-3>	비공식 부문 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15차 ICLS 결의)	21
<표 II-4>	비공식 부문과 비공식 고용의 구성부분	24
<표 II-5>	북한경제의 구조 이해를 위한 도식	26
<표 II-6>	세계 지역별 개도국 연평균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 추이	33
<표 II-7>	주요 개도국의 1인당 소비 연평균 증가율 (1990~2006년)	34
<표 II-8>	주요 개발도상 지역별 인간개발지수 추이	35
<표 II-9>	세계 지역별 비공식 부문의 비중 추이 (조사대상 국가 평균치)	36
<표 III-1>	A시의 여성 자전거 이용자 수 증가 추이	47
<표 III-2>	생산수단의 사유화 수준에 관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58
<표 IV-1>	국가 그룹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평균 (2010년)	74
<표 IV-2>	한국의 산업별 생산구조	75

<표 IV-3>	북한의 산업별 생산구조(2013년): 한국은행 추정치	86
<표 IV-4>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업종별 취업자 비중: 인구 센서스 결과	87
<표 IV-5>	비공식 경제활동(농축산 제외)의 종류	89
<표 IV-6>	비공식 소득의 업종별 비중	90
<표 IV-7>	북한 거주 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의 비중	90
<표 IV-8>	국영기업의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92
<표 IV-9>	북한시장 판매 상품의 중국산 대 북한산 비율 추정치	94
<표 IV-10>	인도 비공식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과 월 소득수준	100
<표 IV-11>	인도 비공식 취업자의 직업별 자기 평가 결과	102
<표 IV-12>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참여도	110
<표 V-1>	개도국 주요 도시의 비공식 식품경제 종사자 비중 (2000년)	126
<표 V-2>	16세 이상 인구의 자가소비용 가내 경제활동 참가율	131
<표 V-3>	16세 이상 인구의 자가소비용 가내 경제활동 주당 투입시간 구성 비율	132

<표 V-4>	평양 당상, 해주, 회령 등 3개 시장 상인의 취급상품별 구성 비율	136
<표 V-5>	비공식 국경무역의 유형	140
<표 V-6>	아프리카의 비공식 국경무역 거래 품목 주요 유형	143
<표 V-7>	북한주민 단동 방문자 수 추이	150
<표 V-8>	주요 저소득 개도국 인구 1천 명당 자동차 수	153
<표 V-9>	주요 개도국 대도시의 대중교통(여객수송) 분담 비율	154
<표 V-10>	주요 저소득 개도국의 이동전화 보급률 추이	156
<표 V-11>	아프리카 주요국 비공식 기업가 중 비즈니스 목적의 전화 사용자 비율	158
<표 V-12>	북한의 대중국 및 대일본 자동차 수입 대수 추이 (1992~2013년)	162

그림 목 차

KINU 연구총서 14-03

<그림 II-1>	비관측 경제와 비공식 부문	20
<그림 II-2>	북한경제의 구조	28
<그림 II-3>	주요 개도국의 전체 비농업 고용에서 비공식 경제 고용의 비중	38
<그림 III-1>	중국산 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	53
<그림 III-2>	개인이 운영하는 도인민위원회 석탄기지 조직도	60
<그림 IV-1>	인도의 부문별 비공식 경제 비중	72
<그림 IV-2>	인도 비공식 경제의 부문별 구성	73
<그림 IV-3>	한국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	76
<그림 IV-4>	인도와 아프리카의 GDP 중 서비스업 비중 추이	78
<그림 IV-5>	인도와 아프리카의 서비스업 및 제조업 성장지수 추이	79
<그림 IV-6>	주요 체제전환국의 GDP 중 서비스업 비중 추이	82
<그림 IV-7>	비공식 경제활동의 구성	88
<그림 IV-8>	기업가 활동과 소득수준 간의 U자형 관계 (2010년)	98
<그림 V-1>	공식/비공식 경제와 대외경제 간 관계 개념도	139
<그림 V-2>	북한과 한·중·일 3국 간의 교역 추이	145

<그림 V-3>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성장 효과	159
<그림 V-4>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166
<그림 V-5> 북한의 대중국 휴대폰 수입 대수 추이	167

요 약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공식 경제는 북한의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을 공식·비공식 경제의 주된 구분 기준으로 삼으며,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유형은 부차적 기준으로 간주한다. 즉 비공식 경제의 본질적 내용은 사경제·사기업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영기업·국가기관의 활동은 시장 거래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로 공식 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국영기업·국가기관의 명義, 자산, 조직을 활용한다 해도 사실상 개인 사업가에 의한 이익 추구 활동이라면 비공식 경제로 본다.

각종 자료와 정보 및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대체로 성장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소비재 시장을 필두로 생산재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이 발달해 왔으며, 이러한 시장을 무대로 많은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어 소득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전되고 기업가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국영기업의 일부로 위장하거나 국영기업과 거래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제도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덕분일까?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등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북한에서 나타난 각종

현상들을 해석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이다.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또한 비공식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둘째는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의 힘이다. 기업가 활동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기업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비공식 기업가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더 수준 높은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는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이다.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과 식량배급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대다수 농민과 상당수 도시 주민들은 사경기(텃밭, 폐기밭, 다락밭 등)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영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포함)은 비공식 유통업자들과 운수업자들에 의해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비공식 식품가공업과 음식숙박업도 발전하였다.

넷째는 대외무역의 확대이다. 대외무역은 공식 기업에 의한 공식 무역과 비공식 기업에 의한 비공식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경제에 속하지만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비공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비공식 무역과 국내 비공식 경제는 상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통·통신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현대적 교통·통신수단의 이용 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공식 교통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비공식 운수업자들이 출현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 발명·보급된 이동전화는 최근 세계 최빈국 및 북한에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 기업가들에게 요긴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제약요인 때문에 북한경제는 과거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장기적 고도 성장 궤도로 올라서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 의한 위로부터의 근본적 개혁이 실행되어 사경제·사기업 활동이 공식화되어야만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비공식 경제, 서비스 주도 성장, 기업가 활동

Abstract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 Yang, Moon-Soo

In this study, we collect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has been growing, and examine main factors allowing this phenomenon. Informal economy means private economic activity which is at odds with formal socialist institutions and ideology. It seems that the main driving forces of informal economy are service-led growth and entrepreneurship. After the partial collapse of traditional socialist economic system, many North Koreans started private businesses in the service sector, and this growth of service allowed new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the other sectors. The food situation has improve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l food sector which are composed of private agriculture, informal food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atering. Expanding foreign trade, informal transport and mobile communication have also had positive impact on the informal economy.

Keywords: Informal Economy, Service-led Growth, Entrepreneurship



I. 서론

1990년대 초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머지않아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 이후로는 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흔히 두 가지가 거론된다.¹ 하나는 대외경협(원조, 무역, 투자)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성장(시장화와 사유화의 진전)이다. 이 중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언뜻 생각하면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자명해 보인다. 북한의 공식 경제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며 비공식 경제란 여기에서 벗어나는 부분, 즉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을 가리킨다.² 다시 말해서 비공식 경제는 비사회주의적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결함이 많은 실패한 체제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번영을 보장해 주는 성공한 체제라는 통념적 시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비공식 경제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북한경제를 가리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거나 또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체제전환 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1. 김석진,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2. 북한경제에서 출현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는 시장(부문), 비공식 부문/경제, 비계획 부문/경제, 비국가 부문, 제2경제(2차경제), 사경제, 암시장, 지하경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비공식 경제 개념을 사용한다. 제II장에서는 비공식 경제의 개념 정의 문제를 더 엄밀하고 상세하게 논의한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 통념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 시장 거래와 사경제 활동은 분명 자본주의적인 요소이지만, 그런 요소들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갖춰지고, 그 결과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어야 비로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의 북한에는 그런 법률과 제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비공식적이다.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비공식 경제, 즉 시장 및 사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들은 무엇일까? 비공식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경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조사·논의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다.

북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선행연구³가 이제까지 연구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규모, 비중, 업종 특성, 성장 추세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제도적 성격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북한 체제의

3. 북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대표적 문헌으로는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과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참조. 제Ⅱ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논의와 관련해 관련 문헌을 더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즉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경제체제론 및 정치체제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으며, 경제성장론 또는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비공식 경제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성장을 가능케 한 주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시론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오늘의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공식 경제가 일반적인 저소득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으로 약칭)의 비공식 경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률과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비공식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활동의 구체적 내용도 북한과 저소득 개도국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

비공식 경제는 과거에는 경제발전예 따라 사라질 후진적 부분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개도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경제가 성장의 주된 동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식 경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 및 배경은 나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개도국 일반의 공통적 성격과 경제발전의 보편적 논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크다. 북한도 역시 저소득 개도국이라는 점, 북한의 비공식 경제와 저소득 개도국 비공식 경제 간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 개도국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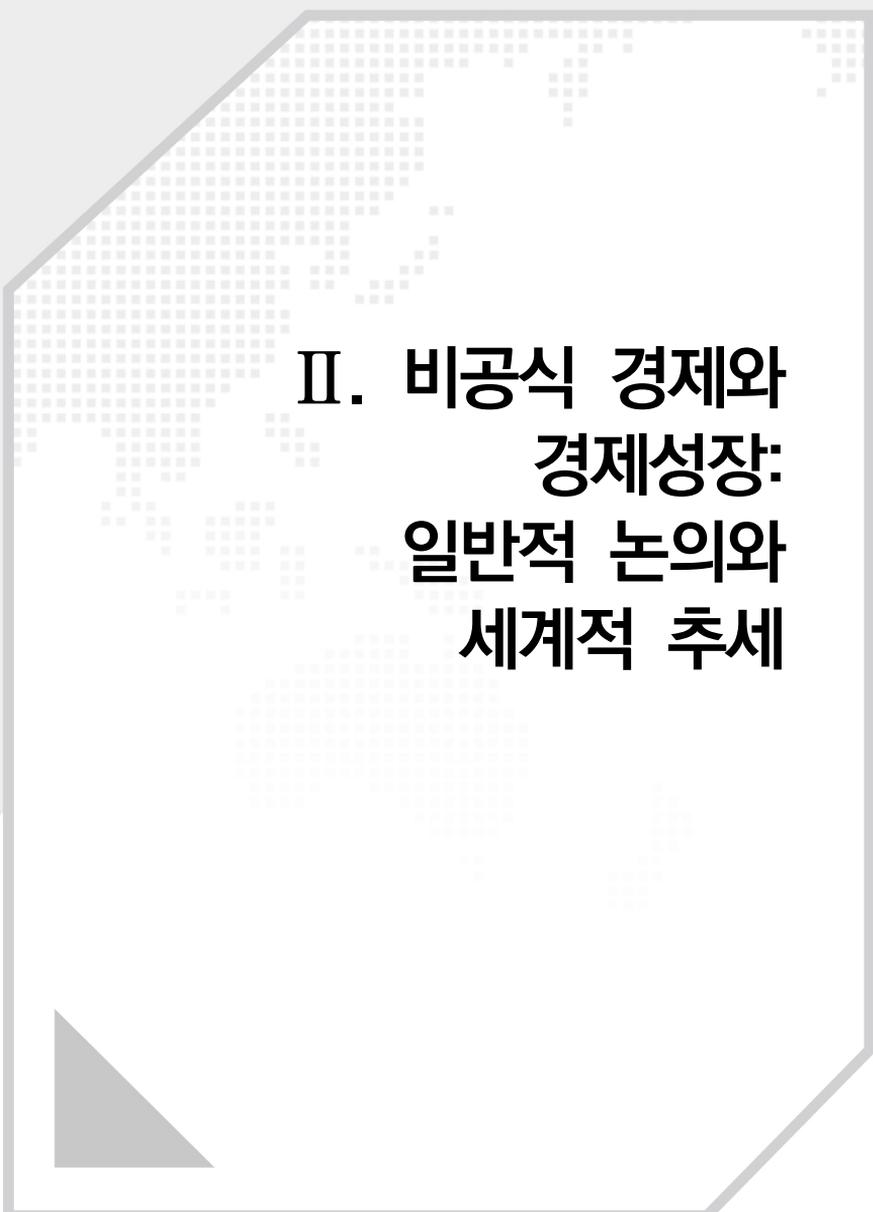
V

VI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을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산업구조의 변화), 기업가 활동의 전개,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대외무역 확대, 교통·통신의 발전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는 경제 전체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요인이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특정 분야 또는 업종에 해당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성장요인은 비공식 경제의 제도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성장요인 분석에 앞서 비공식 경제의 개념과 경제체제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또 개도국 비공식 경제에 대한 국제 학계의 선행연구 중 이 보고서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도 함께 소개한다.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도 선행연구결과를 보완하여 성장요인 분석과 접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리한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자료와 정보의 발굴을 통한 실증 분석이 아니라 기존 자료와 정보의 재해석을 통한 이론적·개념적 논증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경제 연구에서는 항상 실증적 증거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 이 보고서도 역시 자료 부족 때문에 엄밀하고 상세한 실증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하며, 다만 개략적이고 간접적인 증거 제시에 그친다.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북한 내 소식통에게서 나온 정보(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 등), UN 기구 및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 북한의 공식 매체가 전하는 정보 등이다. 참고로, 이 보고서의 제 I, II, IV, V, VI장은 김석진, 제Ⅲ장은 양문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Ⅱ.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일반적 논의와 세계적 추세

1. 비공식 경제의 개념

북한경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널리 확산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시장(부문)’이라 부르고, 북한경제의 제도적 변화를 ‘시장화’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 대신에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한다. 이 장에서는 왜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는지, 비공식 경제의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화가 성장요인 분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적 부분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부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두 부분으로 경제가 이중화되는 현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국(오늘의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중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 학계가 개발한 개념과 분석 틀을 살펴보고 북한 연구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한다.⁵

4. 초기의 대표적 연구들은 ‘제2경제’(또는 ‘2차경제’), ‘비계획 경제’, ‘비국가 부문’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지하경제’, ‘비공식 부문’, ‘사경제’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었다.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8);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 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0); Keun Lee and Hong-Tack Chun, “Secrets for Survival and the Role of the Non-State Sector in North Korean Economy,” *Asian Perspectives*, Vol. 25, No. 2 (June 2001), pp. 199~226.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 문헌들은 대부분 ‘시장’ 또는 ‘시장화’라는 용어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관련 주요 쟁점” 참조.

5. 이러한 논의는 김석진,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개념적 검토,”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패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에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며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검토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논지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에서

I
II
III
IV
V
VI

가. 사회주의국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제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제2경제(2차경제, second economy)’⁶였으며, 그 외에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나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연구의 경우와 달리 ‘시장’이나 ‘시장화’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출현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켜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어떤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생산적 자산의 소유제도 또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이 두 개의 기준에 근거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기업(자영업/자영농 포함)과 시장이 지배적인 체제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영기업(집단소유제 기업 및 집단농장 포함)과 계획(행정적 명령)이 지배적인 체제이다.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기준 중에서 자원배분 메커니즘보다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을 더 중시하였다(<표 II-1>). 예를 들면, 제2경제 연구를 주도한 그로스먼(Gregory Grossman)은 제2경제를 “직접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모든 생산 및 교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⁷ 대표적인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인 코르나이(Janos

기준의 검토를 대폭 수정·보완 및 재정리한다.

6.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제2경제위원회’로 부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 제2경제는 군수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2경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국의 경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7. 그로스먼은 “현행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행해지는 활동”도 제2경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활동은 제2경제의

Kornai)는 제2경제를 ‘사경제(private economy)’ 또는 ‘사경제(사유) 부문(private sector)’과 동일시하였으며, 이를 ‘비공식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표 II-1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2경제 및 제3경제의 정의

	제2경제	제3경제
그레고리 그로스먼 (Gregory Grossman)	사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 또는 명백히 불법적인 활동	-
에드 휴잇 (Ed A. Hewett)	사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 또는 명백히 불법적인 활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영기업의 계획 외 활동
마이클 엘만 (Michael Ellman)	사적인 생산 또는 (재)분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영기업 간 계획 외 거래
야노슈 코르나이 (Janos Kornai)	사경제 부문	-
데니스 오헌 (Dennis O'Hearn)	계획화 시스템 바깥의 활동(즉 시장 및 자가소비용 생산)	-

자료: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September 1977), pp. 25~40; Ed A.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8), p. 177; Michael Ellman, *Socialist Plan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32~33;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85~86, 452; Dennis O'Hearn, "The Consumer Second Economy: Size and Effects," *Soviet Studies*, Vol. 32, No. 2 (April 1980), p. 218.

주: 휴잇은 제3경제 대신에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코르나이는 제2경제와 비공식 경제를 동의어로 사용했음.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 이는 공적인 목적(즉 계획 수행)의 계획 외 활동은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라면 제2경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오헌(Dennis O'Hearn)은 그로스먼의 정의를 비판하면서 제2경제를 “계획화 시스템 바깥의 활동”,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계획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또는 국민경제의 일부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활동”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헌이 말하는 제2경제는 합법적인 자가소비용 농업생산도 포함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 활동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2경제를 시장과 동일시한 오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무렵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나온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주요 교과서적 저작들(<표 II-1>의 휴잇, 엘만, 코르나이)은 제2경제를 설명할 때 대체로 그로스먼의 정의 또는 그와 비슷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제2경제를 정의할 때 소유제도를 중시해야 하느냐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언뜻 생각하면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다. 소유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 사이에는 강한 친화성이 있어서 사경제와 시장이 짝을 이루고 국가/집단경제와 계획(명령)이 짝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옛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제2경제도 사경제적 성격과 시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사경제 활동과 시장 활동은 겹치는 부분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제2경제를 사경제로 정의하든 시장으로 정의하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에서 소유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연결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영기업 및 집단소유제 기업(집단농장 포함)이 시장 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어디에 분류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을 소유제도로 할 것인지,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무엇을 분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제2경제로 지칭되는 연구대상의 범위가 달

라진다. 또한 제2경제의 정의 문제는 연구대상의 범위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중대한 의견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적인 목적, 즉 계획 또는 명령 수행을 위한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 경제체제의 구분 기준에서 자원배분 메커니즘보다 소유제적 성격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적인 이익을 위한 시장 활동은 국영기업의 자산과 조직 및 명의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경제 활동에 해당하며 비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계획(즉 상부 기구의 명령) 수행을 위한 활동은 시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게다가 계획 수행을 위한 국영기업의 활동은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관료적 명령 시스템 아래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획과 시장이 결합된 활동이고 둘 중에서 계획이 우위에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국영기업들이 계획 수행을 위해 시장 거래 또는 계획 외 거래를 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이런 경우를 제2경제와 구별하여 ‘제3경제(third economy)’ 또는 ‘사회주의 부문 내의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within the socialist sector)’로 정의하기도 하였다(<표 II-1>). 이렇게 제3경제를 제외하고 제2경제 또는 비공식 경제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이에 속하는 경제 활동의 실제적 내용은 아래 <표 II-2>와 같이 사경제 부문의 활동과 국영 부문 내의 사적인 경제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제2경제/비공식 경제의 본질적 내용은 사경제라는 뜻이다.

I

II

III

IV

V

VI

● 표 II-2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2경제/비공식 경제의 주요 내용

사경제 부문	국영 부문 내의 사적인 활동
1. (집단농장 해체 후의) 소규모 가족농	1. 국유자산의 절취 (및 시장 판매)
2. (집단농장 소속 농민의) 부업적 농업 생산	2. 국유자산을 이용한 (부업적인) 사적인 생산, 판매
3. 소규모 가족 단위 비즈니스 (소매업, 음식업, 수리업, 운수업, 건설업 및 기타)	3. 국영기업/공유기업으로 등록한 (사실상의) 사기업
4. (국영 부문 취업자의) 비농업 분야에서의 부업적인 사경제 활동	4. 뇌물 수수
5. (가족 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기업	
6. 국유자산 임차를 통한 비즈니스	
7. 혼합소유제 기업	
8. 개인재산에서 얻는 소득	

자료: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 435~444;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p. 25~4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 사회주의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이라고 해서 실제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계획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계획은 끊임 없이 변경·위반되었으며 국영기업들은 계획되지 않은 활동과 거래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제관리를 맡은 관료들은 사전적 계획과 상관없는 행정적 지시와 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조정하였다. 이 때문에 전통적 사회주의를 계획경제보다는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계획 시스템의 이런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계획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즉 경제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와 명령경제는 동

의어로 사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영기업의 계획 외 거래, 즉 제3경제도 넓은 의미에서는 계획경제 즉 명령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국영기업들이 시장을 활용하거나 계획 외 거래를 하더라도 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관료들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제2경제/비공식 경제의 개념 정의 배후에 있는 견해 차이는 북한경제 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북한경제의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공통적으로 시장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연구 내용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보다는 사경제 활동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치학자들은 사경제 활동보다는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⁸ 북한 국영기업의

8. 박형중은 이러한 견해 차이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참조. 최봉대, 정상화 등은 ‘수령경제’를 비롯한 특권적 기관들의 경제활동을 비공식 경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홍민도 관료들과 국영기업, 정권기관들을 ‘시장세력’으로 간주한다.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08); 정상화, “북한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보연구』 (국가정보학회, 2012);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참조. 이처럼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특권적 정권기관의 시장 활동을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북한 체제 변화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들의 계획 외 활동과 시장의 이용 같은 ‘제3경제’적인 현상은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흔히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탈린 시대 소련경제를 상세하게 연구한 Paul R. Gregor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126~152, 183~212 참조. 또한 이상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리와 실제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 간의 괴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Ed A.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8), pp. 94~220 참조. 물론 오늘의 북한에서 제3경제적 현상은 과거 사회주의국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부분도 체제 변화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VI

시장 활동이 국영기업의 자산과 조직 및 명의를 활용한 특정 개인들의 사익 추구 활동이라면 이 부분은 시장임과 동시에 사경제가 되지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지시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시장을 이용한다 해도 사경제는 아니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⁹에 의하면,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에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과 사익 추구 활동이 공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간에 밀접한 거래관계가 성립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배적·주도적인가 하는 것인데 공적인 목적의 활동이 지배적이고 주도적이라면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익 추구 활동이 지배적·주도적이라면 국영기업이 사실상 사유화되어 사회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국영기업, 특히 특권적 ‘정권기관’ 소속 국영기업의 활동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공식 경제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영기업과 거래하거나 국영기업의 명의를 빌린 개인 기업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경제 활동이므로 비공식 경제의 일부로 간주한다.

경제체제의 구분 기준에 관한 관점 차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전

⁹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 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9);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 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2012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등 참조.

망 또는 변화 동력에 대한 의견 차이로도 나타난다. 과거에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소유제도보다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대안을 ‘시장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국영기업이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이 일반화되면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이 되며, 이를 통해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소유제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국영기업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한 관료적 명령이 계속 개입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게 되며, 따라서 진정한 체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국제학계의 정설은 후자, 즉 소유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런 정설은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후기의 제도적 변화가 낳은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사회주의 후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는 국영기업 개혁으로서 분권화를 통해 국영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경제 부문의 성장이었다. 이 두 측면 중에서 국영기업 개혁보다는 사경제의 성장이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제적 성과를 낳았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장화(자유화)만으로는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시장화와 사유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공식 경제를 계획/시장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영·집단경제/사경제

¹⁰-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 360~368; Janos Kornai,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8), pp. 22~45.

의 이분법에 따라 구분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비공식 경제의 경제적 비중(GDP 중의 비중)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아니라 사경제라는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개념이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 활동에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계획과 시장의 비중을 분명하게 나누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의 비중보다는 사경제의 비중이 더 명료한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경제에는 시장 활동만이 아니라 자가소비용 생산도 포함되는데 북한 같은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자가소비용 생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보다 사경제 개념에 근거해 북한의 비공식 경제를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렇다면 그냥 사경제라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제2경제나 비공식 경제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가? 제I장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사경제는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반드시 불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 내의 사경제는 불법, 합법, 반(半)합법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경우든 공유제도와 계획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공식 제도의 틀 안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이었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비공식 경제는 일반적인 개도국 비공식 경제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비공식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2경제 대신에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한다.

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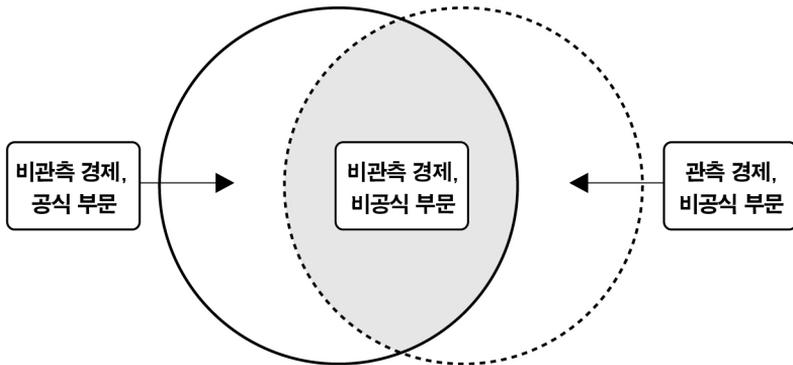
북한 연구에서 비공식 경제 개념의 유용성은 개도국 비공식 경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얻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를 앞에서 본 대로 사경제로 정의할 경우, 경제활동의 실제적 내용은 개도국 비공식 경제와 상당히 비슷해진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개도국 비공식 경제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비공식 경제 개념에 대해 국제 학계에서 완전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 및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¹¹ 이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등 국제기구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비공식 경제 개념을 정리해본다.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표준적 용어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과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인데 비공식 경제는 비공식 부문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식 부문 내 비공식 고용의 경우까지 아우른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비공식 부문 개념은 농업을 배제한 것으로 도시 비공식 부문만을 의미하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농업경제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연구를 위해 채택하는 비공식 경제는 넓은 의미의 비공식 경제인데,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¹¹-Klarita Gerxhani, “The Informal Sector i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 Literature Survey,” *Public Choice*, Vol. 120, No. 3-4 (September 2004), pp. 267~300.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표준적인 비공식 부문 개념이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지하경제나 그림자 경제에 대해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표준적 용어는 ‘비관측 경제(non-observed economy)’인데, UN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함께 펴낸 국민계정 매뉴얼¹²에서는 비관측 경제와 비공식 부문이 겹치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림 II-1>).

● 그림 II-1 비관측 경제와 비공식 부문



자료: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and World Bank,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New York: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World Bank, 2009), p. 471.

비관측 경제란 국민계정 등 공식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되는 기초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¹³ 즉 비관측 경제는 통

¹²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and World Bank,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New York: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World Bank, 2009).

계 편찬의 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비관측 경제가 관측되지 않는 이유는 조세 및 규제 회피, 불법성, 미등록된 비공식 활동, 자가소비용 생산, 통계보고 체계의 미비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비관측 경제와 구별되는 비공식 경제의 개념은 무엇일까? 경제적 비공식성은 경제단위와 고용지위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데 경제단위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비공식 부문이 되고 고용지위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비공식 고용이 된다.

● 표 II-3 비공식 부문 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15차 ICLS 결의)

기준	비공식 부문의 정의
1. 법적 지위	비법인 기업
2. 소유자	가계 구성원(들)에 의해 소유되는 기업
3. 등록 여부	기업 자체 및/또는 종업원의 미등록
4. 규모	상용 근로자 n인 이하 (통상 5인 이하)
5. 회계 계정	대차대조표 등 회계 계정을 갖추지 못한 기업
6. 생산제품의 용처	자가소비용 생산의 경우는 비공식 부문에서 제외
7. 업종	농업 및 가사노동은 비공식 부문에서 제외

자료: ILO, *Measuring Informality: A Statistical Manual on the Informal Sector and Informal Employment* (Geneva: ILO, 2013), p. 22.

먼저 경제단위(생산자 = 기업)의 관점에서 본 비공식 부문의 표준적 정의는 1993년 제15차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CLS)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의 <표 II-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1, 2, 3번인데, 이를 중

¹³ OECD, *Measuring the Non-Observed Economy: A Handbook* (Paris: OECD, 2002), p. 37.

합하면 비공식 부문에 속하는 기업이란 대체로 ‘가계부문의 미등록 비법인 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업은(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라는 가장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1인 기업(‘자영노동자’)도 포함한다. 즉 비공식 부문의 기업은 자영노동자, 가족 단위 자영업, 그리고 가족 외 노동자까지 고용한 소규모 사기업으로 구성된다. 비공식 기업들은 그 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종업원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다. 이처럼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다’는 것이 경제적 비공식성의 본질적 개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것이 합법성이나 법치 준수를 의미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불법성이나 법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도국, 특히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법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면 성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범죄적인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즉 공식성/비공식성의 본질적 의미는 이중적이다. 첫째는 국가권력을 가진 관료기구의 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다.¹⁴ 국영기업은 대체로 관료기구

¹⁴ 1970년대 국제 학계에서 비공식 부문 연구를 본격적으로 촉발한 주역이었던 하트(Keith Hart)는 공식/비공식성의 개념은 ‘공식 = 관료기구의 규칙·지배(form = rule of bureaucracy)’라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Keith Hart, “Bureaucratic Form and the Informal Economy,” Basudeb Guha-Khasnabis, et al. (eds.),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제2경제도 일반적인 비공식 경제에 포함된다. 하트를 비롯해 비공식성 개념을 제기한 초기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John D. Conroy, “Intimations of Keith Hart’s Informal Economy in the Work of Henry Meyhew, P. T. Bauer, and Richard Salisbury,” *Working Paper*,

의 직접적 통제 대상인 반면, 미등록 사기업들, 즉 비공식 기업들은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등록된 사기업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둘째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률과 제도, 즉 재산권과 계약 이행의 보호, 공식 금융 시스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영기업과 등록된 사기업은 대체로 이런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사기업, 즉 비공식 기업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비공식 기업의 비공식 활동은 반드시 불법적(illegal)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법외적(extralegal)’이다.

요컨대 비공식 경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으로 보면 사경제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면서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비공식성의 이런 두 가지 특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비공식 기업들이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두 가지 특성은 상반된 효과를 낳는다. 비공식 기업들은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덕분에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다.

한편 취업자 고용지위의 관점에서는 비공식 고용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공식 고용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비공식 고용은 비공식 부문 기업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식 부문 기업들도 흔히 비공식 고용을 활용한다. 또 비공식 부문 기업 중에도 드물긴 하지만 공

No. 12-05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2) 참조.

식적 지위(사회보험제도 혜택 등)를 가진 취업자들이 있다. 비공식 부문과 비공식 고용을 종합해 보면 <표 II-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① + ②는 비공식 부문, ① + ③은 비공식 고용이며, 이를 모두 합한 ① + ② + ③은 ‘비공식 경제 내의 고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비공식 경제를 비공식 부문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비공식 부문 및 비공식 고용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표 II-4 비공식 부문과 비공식 고용의 구성부분

		취업자의 고용 지위	
		비공식적	공식적
경제단위의 성격	비공식 부문	①	②
	공식 부문	③	④

자료: Jacques Charnes, “The Informal Economy Worldwide: Trends and Characteristics,” *Margin—The Journa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Vol. 6, No. 2 (May 2012), p. 107.

고용지위 외에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비공식 경제를 비공식 부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식 부문 기업의 활동 중에서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은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비공식 부문 기업의 활동 전체와 공식 부문 기업의 활동 중 은폐되는 부분을 합하면 비공식 경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UN,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이 농업을 배제한 도시경제의 관점에서 비공식 부문과 비공식 고용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3>의 기준 6번과 7번이 이를 가리킨다. 즉 비공식 부문의 정의에서 자가소비용 생산과 농업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농업경제도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다는 의미에서 비공식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촌 비공식 경제’라는 개념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비공식 경제를 정의해 볼 수 있다.¹⁵ 북한처럼 농업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처럼 넓은 의미의 비공식 경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 북한의 경우

이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북한의 경우 비공식 경제 개념을 정의해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의하면 비공식 경제는 ‘관료기구의 통제에서 벗어나 법률과 제도의 틀 바깥에 있는 경제’인데, 북한의 경우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비공식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영기업(집단소유제 기업 및 집단농장 포함)과 계획(명령)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 의해 정의되므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경제와 시장 및 가족 내 자급자족의 특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과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영기업이 계획 수행을 위해 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개인 기업가들 또는 관료들이 국영기업의 명외와 자산 및 조직을 이용해 사익 추구 활동(즉 사실상의 사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명치 않은 경우들 때문에 비공식성 개념은 좁은

¹⁵- Jacques Charnes, “The Informal Economy Worldwide: Trends and Characteristics,” *Margin—The Journa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Vol. 6, No. 2 (May 2012); John D. Conroy, “The Idea of a Rural Informal Economy,” *Working Paper*, No. 13-09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3).

I
II
III
IV
V
VI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본 개도국의 경우를 모방하여 비공식성을 좁게 정의할 때에는 ‘비공식 부문’으로 부르고, 넓게 정의할 때에는 ‘비공식 경제’로 부르기로 한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표 II-5>와 같은 도식을 그려보자. 이 도식에서 ⑤와 ⑥은 공식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속하지 않는 분명한 사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공식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비공식 부문은 ‘가계부문의 미등록 비법인 기업’이라는 개도국의 비공식 부문 개념과 비교할 때 실제적 내용이 대체로 합치하며, 다만 거기에 자가소비용 생산의 경우와 농촌 사경제를 추가한 더 넓은 개념이 된다. 그리고 국영 부문(집단농장 포함) 내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 중에서 사익 추구 활동, 즉 국영기업의 자산과 조직 및 명의를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경제 활동인 부분(③과 ④)까지 비공식성 개념에 포함시켜 더 넓은 범위의 ‘비공식 경제(③, ④, ⑤, ⑥의 합)’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

● 표 II-5 북한경제의 구조 이해를 위한 도식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		
		국영기업/국가기관, 협동농장/국영농장		개인/가족
		공적인 목적의 활동	사익 추구 활동	
자원배분 메커니즘	계획 (명령)	①	③	×
	시장	②	④	⑤
	가족 내 자급자족	×	×	⑥

자료: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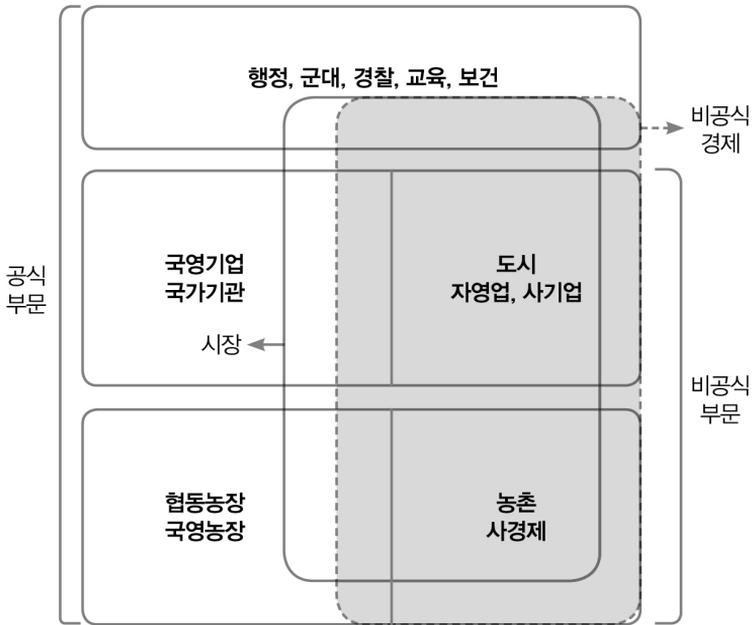
북한경제 연구 문헌에서 흔히 말하는 ‘시장’은 ②, ④, ⑤의 합이며,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비공식 부문 및 비공식 경제와는 개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물론 시장, 비공식 부문, 비공식 경제라는 세 가지 개념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실제의 경제활동 중에는 특성이 분명치 않거나 서로 다른 특성이 결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공식성과 비공식성이라는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한다기보다는 가장 공식적인 것에서 가장 비공식적인 것까지의 연속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달리 말하면 공식성과 비공식성이 겹치는 회색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다.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간의 거래 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공식 부문으로 위장한 비공식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며, 비공식 활동에 대해 관료기구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식 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이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이런 회색 지대는 어느 개도국에나 존재하지만, 국가권력이 강하고 공식 제도가 사회주의인 북한에서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에는 북한경제의 구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II-2>와 같은 또 다른 도식을 그려보자. 이 그림은 북한경제의 구조를 정부 부문, 도시경제, 농촌경제의 3층으로 나타낸 다음, 이를 다시 비공식 부문, 비공식 경제, 시장의 포괄 범위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다. 방금 강조했다듯이 이 그림의 구분선은 분명히 구분되는 선이 아니라 단지 개념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구분선 주변의 영역은 말하자면 회색 지대라고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VI

그림 11-2 북한경제의 구조



자료: 필자 작성.

이 그림에서 정부 부문(행정, 군대, 경찰, 교육, 보건)과 국영기업/국가기관, 협동농장/국영농장은 공식 부문에 속하고, 도시 자영업과 사기업 및 농촌 사경제(사경지 경작과 농민시장)는 비공식 부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식 부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사경제 활동까지 추가하여 더 넓은 범위의 비공식 경제 개념(그림의 음영 부분)을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활동 영역은 비공식 경제에서 가족 내 자급자족을 제외하고, 대신에 계획 수행을 위한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을 더한 것이 된다. 이 그림에서 각 영역의 크기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의 북한경제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가. 비공식 경제의 성장 효과에 대한 논의

1990년대 말 이후 북한경제는 대체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되며 그 중요 요인 중 하나로 비공식 경제의 확산(또는 시장화)이 흔히 거론된다. 이 보고서도 같은 입장에서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개도국과 사회주의국의 비공식 경제에 관한 국제 학계의 선행연구를 보면, 비공식 경제는 경제성장에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의 역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서베이를 제공하고 있는 라 포르타(Rafael La Porta)와 슐라이퍼(Andrei Shleifer)의 연구는 비공식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세 가지 전형적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¹⁶

첫째는 비공식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낭만적 견해(romantic view)’이고, 둘째는 비공식 부문은 기생부문으로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기생부문 견해(parasite view)’이며, 셋째는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과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므로 공식 경제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는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이중구조 견해(dual view)’이다. 라 포르타와 슐라이퍼는 세 가지 견해 중 이중구조 견해가 기존 실증연구들과 가장 잘 합치하는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평가한다. 또한 가장 낙관적인 ‘낭만적 견해’도 비공식 기업들이 공식화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

¹⁶-Rafael La Porta and Andrei Shleifer, “The Unoffici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Fall 2008).

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성 자체의 성장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 즉 제2경제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회주의 후기에 대부분의 사회주의국에서 널리 확산된 비공식 경제는 주민생활에는 상당한 보탬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경제 정체 경향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비공식 경제의 비중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¹⁷

경제적 비공식성의 이런 부정적 측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¹⁸ 이런 경향으로부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비공식 경제 비중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포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공식 경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은 다양하며 각 채널의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¹⁹ 이런 상반된 효과 각각의 강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¹⁷-Byung-Yeon Kim,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f Soviet Households: Size and Dyna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1, No. 3 (2003).

¹⁸-David Kucera and Theodora Xenogiani, "Persisting Informal Employment: What Explains It?," Johannes P. Jutting and Juan R. de Laiglesia (eds.), *Is Informal Normal?: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Paris: OECD, 2009), p. 65.

¹⁹-이하의 논의는 Rafael La Porta and Andrei Shleifer, "The Unoffici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Dan Andrews, Aida Caldera Sanchez, and Asa Johansson,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formal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73 (Paris: OECD, 2011); Guillermo E. Perry, et al., *Informality: Exit and Exclusion*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Ernest Aryeetey, "The Informal Economy, Economic Growth, and Poverty

다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 효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성장 효과의 관점에서 본 비공식 경제의 부정적 측면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 첫째와 둘째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는 비공식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비공식 기업들은 대체로 가계부문에 속하는 소규모 기업들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며 기업가 및 노동자들의 인적자본 수준도 공식 부문보다 훨씬 낮다. 둘째, 비공식성이란 제도적 특성은 투자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비공식 부문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므로 투자를 통해 자본을 증식하려는 인센티브가 부족해진다. 더욱이 비공식 기업들은 공식 금융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 셋째, 비공식 기업들은 조세 회피, 규제 회피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낮춤으로써 공식 부문 기업들에게 불공정 경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넷째,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수입 확보가 어려워지며 통계 왜곡으로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는 정부의 효율성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 첫째, 공식 경제의 왜곡과 규제가 과도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경우, 비공식 경제는 소규모 기업가 활동의 분출을 가능케 해주는 압력분출밸브(pressure relief valve)의 역할을 한다. 즉 비공식 경제는 부적절한 규제를 회피해 유연하게 활동함으로써 효율성 이득을 거둘 수 있다. 둘째, 비공식 경제는 많은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

in Sub-Saharan Africa," *Working Paper* (African Economic Research Consortium, 2009) 등에서 지적된 논점들을 재정리한 것이다.

상시켜 줌으로써 빈곤 퇴치와 인적자본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이처럼 비공식 경제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국제 학계는 그 중 전자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주된 정책적 결론도 제도 개혁을 통해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공식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과거의 예측과 달리 비공식 경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주요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해서 실제의 비공식 경제는 이론적 예측과 다른 성장 추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

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비공식 경제의 장기 추세

지난 30여 년간 개발도상세계의 경제성장과 비공식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자. <표 II-6>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빈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상당 부분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을 보면 성장 실적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오히려 약간 뒷걸음질을 쳤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6 세계 지역별 개도국 연평균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1980~1990	1990~2000	2000~2010
경제성장률			
동아시아	7.5	8.3	9.0
남아시아	5.5	5.3	7.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	2.1	5.2
중동·북아프리카	2.9	3.6	4.6
라틴아메리카	1.4	3.1	4.2
1인당 GDP 성장률			
동아시아	5.8	7.0	8.2
남아시아	3.1	3.3	5.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0.6	2.5
중동 북아프리카	-0.1	1.5	2.9
라틴아메리카	-0.6	1.3	1.9
인구 증가율			
동아시아	1.7	1.2	0.8
남아시아	2.3	2.0	1.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	2.7	2.7
중동·북아프리카	3.0	2.0	1.7
라틴아메리카	2.1	1.7	1.3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주: ① 경제성장률은 GDP(2005년 불변달러), 1인당 GDP 성장률은 1인당 GDP (2005년 불변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

② 연평균 성장률은 복리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그러나 이런 공식 통계는 개도국들의 실제 성장 실적을 크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주요 개도국의 생활수준에 관한 방대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영(Alwyn Young)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공식 통계는 1990~2006년 기간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생활수준 향상 속도를 연평균 2~2.5% 포인트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고,

I
II
III
IV
V
VI

비아프리카 개도국의 경우에도 연평균 1.5% 포인트 이상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한다(<표 II-7>). 이런 추정 결과의 타당성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추계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추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표 II-8>). 인간개발지수는 생활수준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지표인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최빈국 그룹(두 그룹은 서로 많이 겹친다)의 인간개발지수는 이미 1980년대부터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득수준이 약간 하락했다는 공식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 표 II-7 주요 개도국의 1인당 소비 연평균 증가율(1990~2006년)
(단위: %)

	Penn World Table	UN 국민계정	Young 추정치
비아프리카	2.2	2.2	3.8
아프리카	1.1	0.9	3.4

자료: Alwyn Young, "The African Growth Mirac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20, No. 4 (August 2012), p. 719.

주: 29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도국과 27개 기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임.

그렇다면, 같은 기간 중 개발도상지역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어떤 추세를 보였을까? ILO 등 국제기구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최근의 연구²⁰에 의하면, 주요 개발도상지역의 총 GDP에서 비공식 부문(좁은 의미의 비공식 부문 및 농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²¹은 지난 20~30년간 현상유지 또는 상승 추세를 보인 것

²⁰- Jacques Charnes, "The Informal Economy Worldwide: Trends and Characteristics."

²¹- <그림 II-1>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비공식 부문 중 일부는 관측 가능하고 일부는 관측 불가능하다. 관측 가능한 부분은 공식 GDP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UN 등 국제기구의 국민계정 편찬 매뉴얼에서는 관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추정방법을

으로 나타난다(<표 II-9>). 특히 세계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수십 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추정치가 타당하다면, 경제성장 실적이 뚜렷이 개선된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는 뜻이 된다.

● 표 II-8 주요 개발도상 지역별 인간개발지수 추이

	1980	1990	2000	2010
아랍	0.443	0.517	0.583	0.648
동아시아와 태평양	0.432	0.502	0.584	0.673
유럽 및 중앙아시아	0.651	0.701	0.709	0.766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0.574	0.623	0.683	0.736
남아시아	0.357	0.418	0.470	0.55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366	0.387	0.405	0.468
최빈국 그룹	0.290	0.327	0.367	0.443
세계	0.561	0.600	0.639	0.690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The Rise of the South*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3), pp. 148~151.

주: 각 지역 개도국 인간개발지수의 가중평균(가중치는 인구)임. 각 지역 소속 국가 리스트는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The Rise of the South*, p. 198 참조.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추정된 부분을 공식 GDP 통계에 추가한다.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and World Bank,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Ch. 25 참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 특히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비공식 부문의 활동 중 여전히 GDP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표 II-9>의 추정치도 단지 개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하다.

표 II-9 세계 지역별 비공식 부문의 비중 추이
(조사대상 국가 평균치)

(단위: %)

	총 GDP 중 비공식 부문 (농업 포함) 비중			총 GDP 중 비공식 부문 (농업 제외) 비중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8.5	54.5 (66.4)	63.6	22.0	24.1 (24.9)	31.3
중동·북아프리카	38.8	37.9	36.2	23.9	25.6	26.2
인도	-	42.3	54.2	-	25.2	38.4
라틴 아메리카	-	25.9 (32.0)	29.2	-	13.6 (18.8)	24.0
체제전환국	-	23.8	19.5	-	9.9	10.7

자료: Jacques Charmes, "The Informal Economy Worldwide: Trends and Characteristics," p. 128.

주: 괄호 안 수치는 비전형적 국가들을 제외한 경우.

또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GDP 기준이 아니라 취업자 기준으로 측정하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공식 부문 또는 공식 경제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ILO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주요 개도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중 비공식 경제 취업자의 비중은 중진 개도국의 경우에도 20~50%,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50~85%에 이른다고 한다(<그림 II-3>). 또한 비공식 경제 취업자의 주요 부분은 비공식 부문 취업자이지만 공식 부문 내 비공식 취업자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양호한 성장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널리 확산되었으며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대다수 도시 서민들이 비공식 경제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부문까지 비공식 경제에 포함시킬 경우

비공식 경제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수의 저소득 개도국에서 이론적 예측과 달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IV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주요 논점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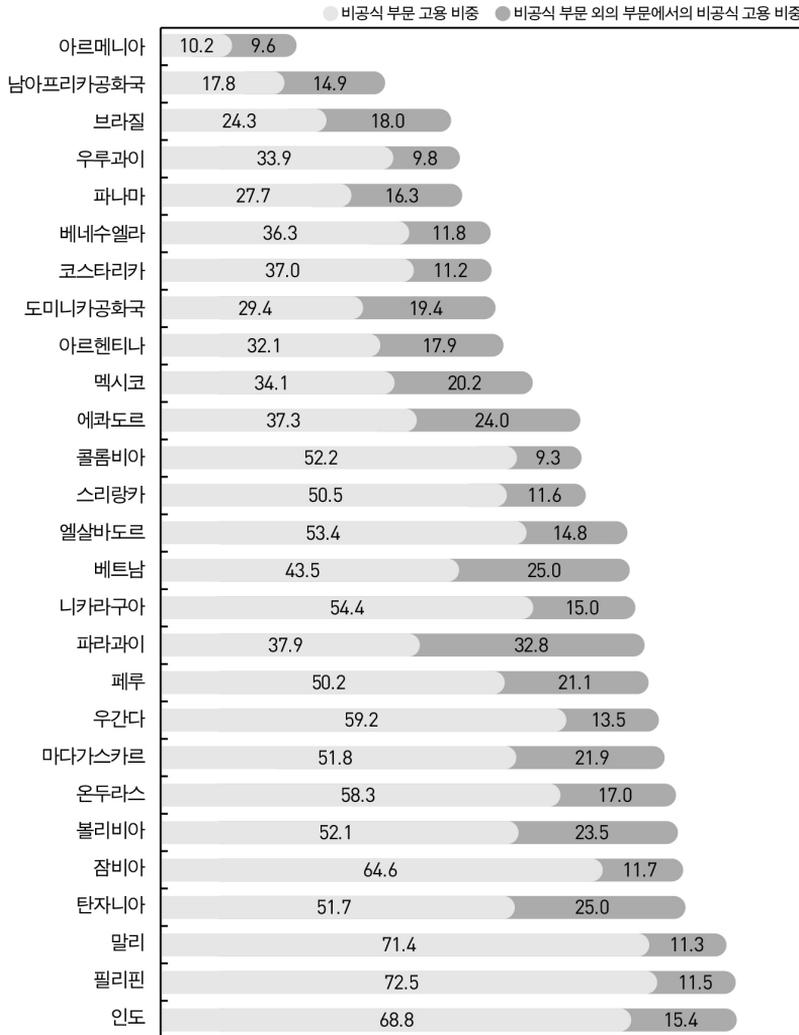
비공식 경제의 부정적 측면은 주로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성격에 기인한 것인데,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성격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이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비공식 경제는 그러한 제도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 면에서 비공식 기업들의 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 둘째, 경제주체의 측면에서 임금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노동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포함)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비공식 경제의 기본적인 성장요인을 이룬다.

또한 기본적 성장요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가적이고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 먼저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개도국들의 대외경협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공식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현대적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 그 중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보급이 비공식 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농촌 사경제도 발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요인들이 최근 저소득 개도국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북한경제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제IV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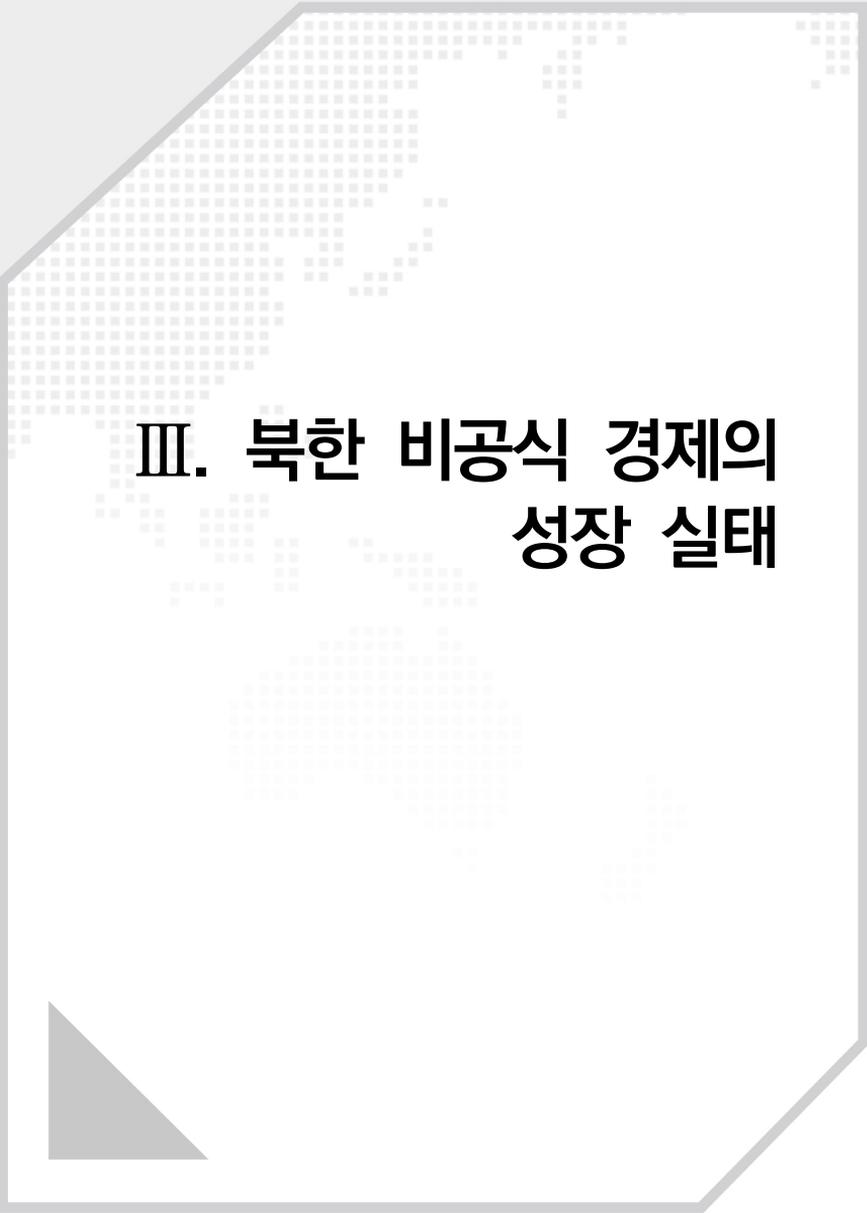
그림 11-3 주요 개도국의 전체 비농업 고용에서 비공식 경제 고용의 비중

(단위: %)



자료: ILO, "Statistical Update on Employment in Informal Economy," (Geneva: ILO, June 2012), Figure 1.

- 주: ① 이용 가능한 최신 연도의 자료.
 ② 일부 소규모 국가들의 자료는 제외.



Ⅲ.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

1. 시장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가. 4대 시장의 형성과 발전²²

이 장에서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해 동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물론 자료의 제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엄밀한 시기 및 단계 구분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보아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특히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른바 시장화의 진전에 대한 보편적 논의에서 출발한다. 시장은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하지만 거래대상에 따라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이른바 4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4대 시장 중에서 북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또 현재도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소비재 시장이다. 북한의 소비재 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은 종합시장(장마당)이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농민시장이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규모 암시장으로 탈바꿈했다.

2000년대 들어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묵인’에서 ‘촉진·활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계획 외 생산·유통’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시장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 또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²² 이 소절은 부분적으로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제5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

I
II
III
IV
V
VI

신규 도입해 최초로 생산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나아가 2003년 3월에는 종합시장이라는 보다 진전된 제도적 공간을 새로 만들어 주면서 종전에 ‘장마당’이라 불렸던 암시장을 합법화해 주는 형태로 소비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7·1 조치를 통해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이 공식 허용되면서 북한의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게,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에게 7·1 조치 이후 ‘시장을 활용한 자력갱생’은 새로운 신념 체계가 되었다. 물론 그 계기는 국가가 제공한 것인데 국가는 7·1 조치를 통해 자력갱생을 공식화, 전면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체계 하에서 가게와 기업은 시장을 활용하는 행위에 일정 수준 정당성을 부여²³ 받게 되었다.²⁴

시장의 합법화로 시장이 확대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북한에서 금융시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 즉 사금융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한 장사의 밀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또한 기업(공장, 농장, 무역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설비와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계획 목표 달성에 대해 압력을 가했고, 따

²³ 2005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어느 주민의 증언은 매우 시사적이다.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을 당시만 해도 장사꾼이란 참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웬만 하면 참고 살려고 했지 장사하려고 안 했다.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98, 99년도 되니까 너도 나도 장사를 시작했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 시작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발표되니까 이제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가 되었다.” “2007 현지르포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 스페셜』 (2007.6.24. 방송).

²⁴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pp. 173~175 참조.

라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공공금융은 경제난에 따른 국고의 고갈, 인플레이션 등으로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그 대신 사적 부문(민간 부문)에서 시장화의 진전으로 화폐자본을 축적한 돈주(錢主)가 성장해 이들이 비공식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주된 공급자로 등장했다.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생산금융이다. 즉 소비 목적의 금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생산 목적의 금융이다. 자금 수요자는 개인과 기업으로 대별된다. 시장화의 진전은 비공식 금융시장의 성장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²⁵

노동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개인 기업가들이 출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용-피고용 관계도 형성된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선박 소유주와 노동자, 광업 분야에서는 개인 광산업자와 노동자, 서비스 부문에서는 상점·식당 소유주와 점원, 농업 부문에서도 불법적 토지 소유자와 소작인 사이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 관계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실상의 실업자군이 존재하고 기업의 ‘더벌이’, ‘8·3 노동자’ 등과 같은 회색 지대의 제도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²⁵ 다만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금융 공급이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대부 자금 미상환의 위험도가 높고, 대부 자금 미상환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시장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시장은 다소 취약하고 그 기능에 제약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등 이른바 4대 시장이 형성되고, 이들 시장이 서로 연계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확대시키고 있다.²⁶ 현재는 이 4대 시장 가운데 소비재 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상대적이지만 제도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나. 소비재 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1) 종합시장의 성장

정은이는 북한 종합시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비공개 영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종합시장의 외형상의 변화·발전을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²⁷

1단계는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외연적으로 확장되지만 단순히 거래를 위한 터(場)만 존재한 단계이다. 2단계는 당국의 ‘시장의 공설시장화’ 방침에 따라 시장에 매탁, 매장,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특히 매대(賣臺)가 매장(賣場: 지붕)으로 확장되어 하나의 매장이 하나의 품목을 대표하는 매장별 분업이 시작되었다. 3단계는 종합시장 정책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이 신·증축되는 단계이다. 특히 지붕이 커지고 담벼락에도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 다만 여전히 매장이 실외에 존재하여 기후의 제약을

²⁶-4대 시장의 형성, 발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를 참조.

²⁷-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비교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pp. 260~262. 물론 전국의 모든 종합시장이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발전한 것도, 또한 현재 4단계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회령시장은 3단계의 모습이 주종을 이루지만 부분적으로 4단계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받았다. 4단계는 2007년 ‘시장의 상점화’ 방침에 따라 매장이 건물 안으로 입주하여 대형마트처럼 건물 형태로 발전한 단계이다. 특히 건축물의 가장 윗부분을 덮고 있는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기후의 제약을 덜 받고, 짐 보관소 등 시장의 편의시설이 증가했다.

이 연구는 또 회령시장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²⁸ 1990년대 초중반 회령시장은 무질서한 형태로 존재한 ‘장마당’이었으나 1998년 당국의 ‘시장의 공설시장화’ 방침에 따라 회령역 앞에 새롭게 세워졌고(역전시장으로도 불리는 구 회령시장), 이는 2007년 ‘시장의 상점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신축되었다(성천시장으로도 불리는 현 회령시장). 위성자료를 통해 이들 회령시장의 외형적 변화를 추적해 보면, 현 회령시장은 구 회령시장에 비해 입지면적도 넓어지고 담장과 지붕 등에서 건축양식이 입체적으로 변하여 시장의 안과 밖의 구획이 명확해졌다. 아울러 지붕의 변화를 통해 각 매장이 확대되고, 우천 시 대책, 채광 등 편의시설이 보강되었다. 특히 구 회령시장에 없던 짐 보관소가 들어서 상인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²⁹

아울러 현 회령시장은 구 회령시장에 비해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이 많아지고 품목도 다양해졌다. 구 회령시장은 쌀, 밀가루 등 먹거리와 관련된 매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 회령시장은 의류 관련 공업품 매장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화장품이나 학용품, 약제사리류, 심지어 모자 매대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²⁸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pp. 258~266.

²⁹ 과거엔 매대 상인들이 매일 저녁 매대 물품을 집으로 날라 갔다가 아침에 다시 날라 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짐 보관소에 맡기면 그만이다. 과거에 비해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

(2) 자전거 시장의 발달

자전거는 1970년대부터 북한 내에서 본격 생산, 보급되기 시작했다. 전국의 여러 곳에서 ‘평양’, ‘명사십리’, ‘성천강’ 등의 자전거가 생산되었다. 대부분 일본제 자전거를 분해, 스케치한 것들이었다. 다만 1980년대 말 자전거는 도시에서 주민 1,000세대당 2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급률을 나타냈다.

자전거는 1990년대에 들어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그 수요가 폭발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998년부터 북한 당국이 시장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다. 상부의 방침을 받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지방공업총국은 중국에서 간단한 자전거 생산설비와 10만 대분의 부품을 수입해 서성구역 내 자전거 공장에서 조립한 후 ‘모란봉’ 상표를 붙여 인민반 배정 공급체계를 통해 배급했다. 약 절반은 지방에도 공급했다. 대당 가격은 1,500여 원으로 당시 근로자 15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고가품이었다. 하지만 자전거는 모두 다 팔려 나갔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전거 등록 및 운전면허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10만 대의 ‘모란봉’은 1년도 되지 않아 파철이 되었다고 한다. 품질이 열악한데다 북한의 도로사정도 좋지 않았고, 과도한 적재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때부터 일본산 중고 자전거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대량 수입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³⁰ 또한 ‘가짜 일본산 중고 자전거’도 북한 내에서 생산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에게 보급되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이에 따라 일본 중고 자전거의 공식적인 수입 루트는 막히게 된다. 이후 “중국 화물선이 일본에서 중고 자전거를 사서 북한에

³⁰- 2000년대 초에 자전거 한 대 가격은 7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들여와 비싸게 팔게 되었다. … 일본산 중고 자전거가 고장이 나도 이제는 부품을 중국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³¹

한편 아래 <표 III-1>에서 보듯이 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전거 수리 및 부속품 시장도 생겨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영 편의봉사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자전거 공장의 자재 공급에 의존하여 수리를 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개인들의 자전거 수리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A시의 경우, 다리목, 골목 교차로 등에 자전거 수리 중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0~60대의 남성들이 20명 이상 모여 앉아 있다. 또한 종합시장 안에는 큼직한 자전거 부속품 전문 매장이 있다. 타이어를 비롯한 자전거 부속품은 70% 이상이 중국제이고 나머지는 일본제라고 한다.³²

● 표 III-1 A시의 여성 자전거 이용자 수 증가 추이

시기	여성 자전거 이용자 비율
1994년	10%
1996년	40%
1997년	50~60%
1999~2000년	70~80%
2005~2008년	80%

자료: 채순, “개인 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제9호 (임진강출판사, 2010), p. 85.

주: A시는 시장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인구는 15만 명 이상. 이용자 비율이란 이 지역의 성인 여성 중 자전거를 탈 줄 알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가리킴.

³¹ 주성하, “행방태지가 설명하는 북 장마당의 분업화,” (2009.12.11), <<http://blog.dong.com/nambukstory>>.

³² 채순, “개인 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제9호 (임진강출판사, 2010), pp. 78~109.

(3) 부동산 시장의 발달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주택 매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돈과 쌀이 필요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과,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주택을 더 사 두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물론 엄밀히 따져 주택은 국가소유이고 주민들은 ‘주택사용허가증(입사증)’만 받지만 거주자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영원한 자기 소유라는 의식을 만들어 냈고, 이것이 주택 매매의 제도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주택은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약한 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집의 면적, 방의 개수, 그리고 수도물 정도였다. 그런데 시장화가 보다 진전되는 1990년대 말이 되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다. 평성시의 경우, 이 시기부터 주택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가격 격차가 큰 폭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철도역 인근 또는 장마당 부근의 주택은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마당과 역전이라는 특성이 시장거래, 상품유통의 편의성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존 주택의 단순 매매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택의 증·개축, 주택의 상가로의 개조, 그리고 이를 통한 매매가 싹트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순천시의 어느 기업소 지배인은 자신의 고급 주택과 도로 옆에 있는 소규모 개인 주택을 교환하고, 그 집을 허문 터전에 단독주택을 크게 짓고, 주차장과 연유(석유제품)창고를 지었다고 한다. 또 40대의 남성은 2005년 150만 원 하던 낡은 집에 150만 원을 투자하여 집을 올리고 높은 울타리까지 쌓고는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그 집은 변전소가 옆에 있어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³³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돈주들이 국가 땅을 임대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고, 이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큰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파트 신축사업이 이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아파트 신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김정일 집권 말기 및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국이 고층 아파트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08년에 평양 10만 호 건설을 발기하고 2012년까지 완공 목표를 설정했다. 김정은은 2012년 만수대 지구에 45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인 창전거리를 완공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 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아파트가 완공되었으며,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 거리와 김책공업대학 교육자 아파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재정 부족 등으로 이러한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각 동별로 각 기관에 할당을 하고 각 기관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4) 평균적 소비수준의 향상

큰 흐름으로 보아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평균적인 소비수준,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먹거리를 보자. 평양시민들은 1960년대 초반 이후 30년 넘게

³³ 손혜민, “부동산 시장의 단맛,” 『임진강』, 제16호 (임진강출판사, 2012), pp. 65~75.

잊어버렸던 생선 맛을 장마당이 활성화된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간부 전용공급소나 외국인 전용상점에서만 있었던 열대과일과 외국제품을 이제 장마당(종합시장)에서는 사시사철 팔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결혼잔치상, 생일상에 파인애플, 바나나 등 희귀한 과일을 올리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다.

자기 집에 일제 중고 자전거와 중국 TV를 갖추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도시의 일반 사람들도 결혼식과 졸업식 때는 당연히 비디오로 기념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 간부나 부자는 자녀들의 성장을 기록하는 비디오 편집물을 제작, 보관하고 있다.³⁴

주거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평안남도 순천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집에 너털너털 꿩진 종이장판을 깔고 있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레자’라고 불리는 고가의 중국 장판을 방바닥에 깔고 있다. 종전에는 간부들을 포함한 40% 미만의 주민이 겨우 흑백 TV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주민 가정에 컬러 TV가, 50% 이상의 주민 가정에 VCD 플레이어기가 있다. 지금은 집에 TV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박막식 TV 정도는 되어야 한다. 불과 수명의 간부 댁에나 있던 집 전화기가 2007년에는 50세대에 1세대의 비율로 설치되었다. 시, 읍과 노동자구의 거의 모든 가정들은 전기를 이용해 밥을 지을 수 있는 전기밥가마(전기밥솥)와 전기로 채소를 볶는 채(菜)가마를 쓰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기적”이 다 시장이 활성화된 덕택이라고 보고 있다.³⁵

³⁴ 계명빈,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임진강』, 창간호 (임진강출판사, 2007), pp. 60~63.

³⁵ 손혜민, “현장취재 <박기원 그 순천 사람>,” 『임진강』, 제5호 (임진강출판사, 2009), p. 61.

다. 시장의 지역적 통합 및 기능분화

시장의 발달은 시장의 지역적 통합과 시장의 기능적 분화를 수반한다.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평안북도 신의주의 채하시장,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 그리고 평안남도 평성의 평성시장이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성장했다.

북한에서 시장화는 그 물적 토대를 주로 대외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교역의 지리적 상황, 특히 중국물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훈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산 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주된 통로는 단둥(丹東)-신의주-평양과 무산·회령-나진·선봉 그리고 청진(-함흥-평양)이며 그 밖에 혜산-길주 또는 함흥의 루트가 있다. 중국산 물품들은 이들 주요 루트의 거점을 이루는 신의주의 채하시장, 혜산의 혜산시장, 회령의 회령시장, 무산의 광산시장, 나진·선봉의 동명시장, 청진의 수남시장, 길주의 합천시장, 함흥의 해상시장, 원산의 갈마시장 등을 거쳐 전국의 300여 개 종합시장으로 확산된다.³⁶

여기에서 신의주는 중국의 단둥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중무역의 50% 이상이 단둥-신의주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에서 북·중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신의주이다.³⁷ 사실 신의주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도시라는 입지 탓에 애초

³⁶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한국은행, 2006), p. 39.

³⁷ 신의주와 청진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장세훈, “체제전환기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전망,”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328~331을 요약한 것이다.

부터 생산보다 교역 기능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었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재개된 1980년대 중반부터는 대중(對中) 무역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그 이전에도 해상을 통한 중국과의 밀무역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제난 이후에는 더욱 늘어났다.

또한 청진은 접경도시는 아니지만 나진·선봉의 개발 이후 나진·선봉에서 유입된 물품이 청진으로 집결되는 한편, 회령, 남양 등 함경북도 접경도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 물품 또한 청진을 거쳐 북한 전역으로 운반된다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 필요한 수산물의 채취가 가능하며, 특히 항구를 통해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도 또 다른 강점이었다. 이로써 청진은 함경북도 최대의 교역도시로서, 특히 함경북도 접경지대와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했다.

한편 평성시장은 나진·선봉, 함북 청진, 평북 신의주 등지에서 들어온 상품들이 북한 최대의 소비지역인 평양으로 가기 직전에 모이는 물류지역이다.³⁸ 물품은 평성까지만 들어오고 평양에 직접 들어오지는 못한다. 따라서 평성은 도매시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³⁸ 평성시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pp. 256~258; 박희진,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으로,” 북한연구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과 접하고 있어 평양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평양의 경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평양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도시로서 많은 유동인구와 이들 사이의 유통, 판매 관련 분업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관들이 조사한 시장가격 통계를 활용해 보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북한의 시장은 더욱 성숙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³⁹ 이 시장가격 통계는 1998년 말에 KDI가 자체 조사한 것과 대북 NGO인 좋은벗들이 2006년 10월에 조사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해 신의주(평안북도), 회령(함경북도), 해주(황해남도), 함흥(함경남도) 등 4개 지역의 장마당(종합시장)에서 판매되는 12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1998년에 비해 각 지역의 시장가격이 평균가격에 수렴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격차가 사라지는 비율이 평균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지역에서 조사된 총 48개의 상품가격 가운데 81%가 이 기간 중 평균가격에 수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기간 동안에 이들 4개 지역만 놓고 보면 북한의 지역별 가격 격차는 매우 뚜렷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종합시장들, 특히 국경도시 및 지방 대도시 종합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³⁹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pp. 122~131.

라. 분업의 발달

시장화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분업의 발달을 수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성하가 흥미로운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

대략 5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당(종합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는 상인이 직접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확보했다. 농촌에 가서 무작위로 돌아봤자 한 번에 걷어오는 돼지는 1~2마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군(郡)에서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들여온다.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 돼지를 ‘행방돼지’라고 부른다. 그 군에는 돼지만 전문적으로 잡아 장마당에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사람은 자기 고장의 누구 집에 몇 kg 나가는 돼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야 합당한지, 심지어 뭘 먹여서 키웠는지까지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장마당 상인은 이제 예전처럼 자신이 직접 농촌을 돌면서 돼지를 구해 올 필요가 없어졌고, 단지 팔기만 하면 된다. … 예전에는 장마당마다 술과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풍을 쳐놓고 풍로를 돌리면서 음식을 데워 파는데 음식 종류는 거기서 거기였다. 어느 집에서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술과 함께 두부, 두부밥, 순대, 생선찌개 같은 것을 안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장마당 입구 개인집 창고들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쓴다. 그리고 집집마다 파는 음식 종류도 다양해지고, ‘저 집은 순대 잘하는 집’ ‘저 집은 인조고기(콩으로 만들어 돼지고기 맛이 나는 음식) 잘하는 집’ 등의 평판을 듣고 있다. 장마당에서 음식을 팔아 돈을 좀 번 사람들의 일부는 아예 시내로 나와 고급 식당을 차리기도 한다. 음식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을 겨냥한 전략도 고급화와 대중화로 차별되는 것이다.⁴⁰

또 다른 사례로 ‘씨래기’라고 불리는 생산·판매상(일종의 매뉴팩처어 운전자)을 들 수 있다.⁴¹ ‘썰다’라는 말은 개인이 원단을 쌓아놓고

⁴⁰ 주성하, “행방돼지가 설명하는 북 장마당의 분업화.”

본에 따라 자르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영공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규모의 의류 생산을 어느 여성 상인이 자기 돈을 투자하여 판을 크게 벌려놓은 것이다. 청년동맹이 태권도 경기대회를 위해 청년학생들에게 단체복 준비를 요구하면 이 정보를 입수한 여성 상인, 즉 ‘씨래기’는 국경 도시의 상인에게 필요한 천(원단)을 주문한다(수입·구매 공정). 그리고 입수한 천을 ‘산(고용한)’ 일군들에게 재단시킨다(썰기 공정). 그리고 재단된 천을 개인 재봉공들에게 맡겨 제품을 완성한다(가공 공정). 이렇게 만들어진 태권도복을 넘겨받으러 온 상인들에게 ‘맞돈치기(즉결)’ 얼마, 후불 얼마로 다 나누어주면(판매 공정), 태권도복은 장마당으로, 집집으로 구석구석 퍼져 나간다. ‘씨래기’가 운영하는 이 의류생산체계는 새로운 수요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또다시 가동한다. 형체를 갖춘 직장도 없이 여성들이 분업적으로 일을 나누어 맡아, 심지어 외국에 천을 주문·수입하여 장마당의 수요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보장해 나가고 있다.

2. 사유화의 진전과 기업가의 출현

가. 사유화의 진전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생산수단의 실질적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유화가 서비스업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광업, 무역업, 나아가 제조업의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⁴²

41- 계명빈,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pp. 57~58.

42- 사적 자본 투입에 의해 제조업 분야 국영기업이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pp. 202~229 참조.

윤인주는 왈더(Andre G. Walder)가 제시한 재산권 재할당 유형에 관한 개념 틀을 원용해 북한의 사유화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⁴³ 첫째, 파트너십 계약형(대부투자)이다. 이는 사적 자본이 국영기업에 대부투자를 하고 나중에 자신이 투자한 몫에 대한 수익금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개인이 공장·기업소에 대해 임가공을 의뢰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공공자산 임차형(명의대여)이다. 이는 사적 자본이 국영기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고 자산을 임차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종업원도 고용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일체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셋째, 사영기업(개인기업)이다. 가내수공업을 비롯한 개인수공업, 소토지 등 개인영농, 개인상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경제적 의미가 큰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이다. 특히 두 번째는 기업가라고 부를 만한 존재이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사적 자본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초기에는 소규모 지방공업에만 사적 자본이 투입되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중앙공업에도 사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다.⁴⁴

한편 윤인주는 생산수단 사유화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탈북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표 III-2>).⁴⁵ 이러한 생산수단을 사실상 사적으

43. 북한에서의 사유화 실태에 대해서는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4. 평양 출신 탈북자는 “공장 입장에서는 국가가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 돈주가 현물이나 현금으로 공급해 주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많다. … 과거에는 큰 공장들에 개인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방직공장, 신발공장, 비누공장, 맥주공장 등과 같은 큰 공장에도 사적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필자 면담.

45. 설문조사는 2012년에 탈북자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탈북 연도는 1996~2002년이 8.0%, 2003~2006년이 17.7%이고 2007년 이후가 74.3%로 매년 15% 안팎이다.

I
II
III
IV
V
VI

로 보유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을 보면 광산은 32.6% 수준에 불과했지만, 어선은 59.0%, 수매상점은 71.2%, 식당은 79.2%, 화물차는 73.8%, 국수공장은 81.8%, 인조고기 공장은 79.4%에 달했다. 또한 이러한 생산수단을 사실상 사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응답만 놓고 보면 광산은 13.0%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어선은 26.9%, 수매상점은 26.6%, 식당은 27.5%, 화물차는 31.7%에 달했고, 특히 국수공장은 47.7%, 인조고기 공장은 45.0%에 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표 III-2 생산수단의 사유화 수준에 관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그저 그랬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들어본 적 없다	합계
수산사업소에 고깃배를 등록하는 사람	36 (26.9)	43 (32.1)	12 (9.0)	11 (8.2)	7 (5.2)	25 (18.7)	134 (100.0)
기관·단체 명의를 빌린 개인광산	18 (13.0)	27 (19.6)	29 (21.0)	11 (8.0)	18 (13.0)	35 (25.4)	138 (100.0)
개인이 운영하는 국수 생산기지	63 (47.7)	45 (34.1)	11 (8.3)	3 (2.3)	5 (3.8)	5 (3.8)	132 (100.0)
개인이 운영하는 인조고기 생산기지	59 (45.0)	45 (34.4)	9 (6.9)	3 (2.3)	8 (6.1)	7 (5.3)	131 (100.0)
기관 명의로 개인이 운영하는 수매상점	37 (26.6)	62 (44.6)	22 (15.8)	8 (5.8)	2 (1.4)	8 (5.8)	139 (100.0)
급양관리소 명의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41 (27.5)	77 (51.7)	8 (5.4)	11 (7.4)	6 (4.0)	6 (4.0)	149 (100.0)
기관·단체에 화물차를 등록하는 사람	46 (31.7)	61 (42.1)	11 (7.6)	10 (6.9)	5 (3.4)	12 (8.3)	145 (100.0)

자료: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pp. 139~162.

나. 기업가의 출현

(1) 광업 및 광산물 수출업

광업은 북한의 대표적 산업이며 본래 국영기업에 의해 경영되지만 국영기업 및 기관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의 개인기업이 출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평성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의 사례를 통해 탄광 및 무역업 분야에서 개인기업이 설립,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자.⁴⁶ 그는 우선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자체 탄광을 개발해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주택 난방용 석탄을 공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탄광 운영권을 따냈다. 사실상 개인 탄광이지만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자체탄광기지’로 이름을 붙이면서 합법성을 획득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퇴직 탄부, 기술자와 함께 탄광 도면을 보면서 폐갱을 선택하는 작업부터 했다. 폐갱을 확보하고 나서는 석탄공업부에 가서 광권을 발급받았다. 이를 위해 3,000달러를 사업비로 지불해야 했다.⁴⁷ 일종의 면허료인데 1990년대부터 석탄 수출 사업의 고수익성에 매료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개인탄광 사업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권 발급 사업비도 이른바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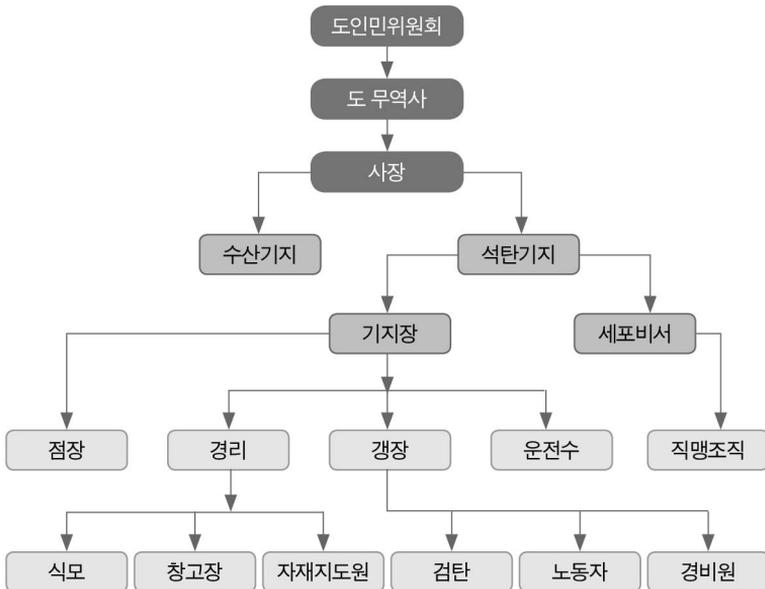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자금과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다. 자금은 자기 자금을 쓸 수도, 이자 돈을 끌 수도 있다. 노동력은 대개 국영 기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국영 기업소 소속이지만 이른바 8·3 노동자라

⁴⁶ 손혜민, “장사의 도가니, 석탄시장.” 『임진강』, 제19호 (임진강출판사, 2013년).

⁴⁷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3,000달러 가운데 일부는 석탄공업부를 거쳐 정식으로 국가 기관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이고, 일부는 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뇌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하여 일정 수준의 현금만 기업소에 바치면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그는 10명의 노동자들을 확보해 6개월 동안 갯을 건설했다. 그리고 1년 만에 석탄이 나오기 시작하자 정식으로 행정조직을 갖추면서 석탄 생산을 시작했다(<그림 Ⅲ-2>). 조직만 놓고 보면 도무지 개인기업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웬만한 지방산업 공장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주로 수출을 했지만 일부는 북한 국내에도 판매되었다.

●그림 Ⅲ-2 개인이 운영하는 도인민위원회 석탄기지 조직도



자료: 손혜민, “장사의 도가니, 석탄시장,” 『임진강』, 제19호 (임진강출판사, 2013), p. 102.

또 다른 사례는 개인이 무역회사 무역 지도원으로 입사해 개인 광산을 운영하게 된 경우이다.⁴⁸ 중고자전거 장사를 통하여 한 밀천 잡은

평양시의 40대 여성은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으로 입사했다. 그녀는 1년에 일정 수익금(달러)을 해당 무역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각 국가기관들의 승인을 얻어 함경남도 △△지구에 자그마한 아연광산(갱)을 하나 획득하였다. 이 갱은 국영 ○○광산연합기업소가 캐다 버린 폐갱인데, 이를 개인자금으로 복구하여 아연 정광을 생산하였다. 그녀가 고용하는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모집한 인력으로 갱에는 갱장, 부갱장, 안전기사 등 광산기술자들과 굴진공, 채광공, 운광공 등 숙련공에 이르기까지 다 있다. 또 세포비서와 당 조직도 있는데, 그들은 모태 기업인 국영 광산에서 원래 일하던 광업 일꾼들이었다.

(2) 수산업 및 수산물 수출업

수산업 부문의 개인 사업은 대체로 조그마한 어선을 한척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⁴⁹ 수산사업소나 수산협동조합에 소속 어선 중에서 기름이 없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배를 임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 자금으로 배를 구입해 국가 기관이나 기업소에 등록시킨 뒤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어선은 공장에 의뢰해서 제작할 수도 있고, 수산사업소 등 기존 기관의 중고 배를 인수할 수도 있으며, 가끔은 해상무역을 통해 중국의 중고 배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배의 임대는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관 명의를 빌리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어선을 확보한 개인 선주는 연료와 각종 어구 및 식량 등을 마련해

⁴⁸ 리규이, “변화하고 있는 ‘조직생활의 나라,’” 『임진강』, 제9호 (임진강출판사, 2009), p. 121.

⁴⁹ 어선을 통한 개인기업의 수산업 활동에 대해서는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pp. 126~128을 참조해 서술하였다.

서 고기잡이에 나가게 된다. 이 때 임금노동자인 ‘삿벌이’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게 되면, 먼저 해당 기업소에서 부여받은 계획 물량분에 대해서는 기업소에 넘기게 되는데, 이때 가격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넘기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목표량을 초과한 물량은 가격을 높게 쳐주는 다른 기관이나 장사꾼에게 팔게 된다. 어획물을 구입한 기업소는 이를 중국의 수입상에게 넘기게 된다.

조개 양식도 개인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이다.⁵⁰ 물론 이 경우도 국가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이나 외화벌이 기지장으로 소속을 만든 뒤 사업을 벌인다. 그런데 양식을 하려면 일정 면적의 바다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도 광산과 마찬가지로 면허료가 필요하다. 바다에서 조개 양식을 하려고 하면 보통 200~300헥타르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쓸모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를 딱 고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헥타르(30만 평)당 1,200달러의 세금을 국토부에 내야 했다(2005년 기준). 이 밖에도 총참모부에 바다 출입 허가를 위해 약 2천 달러, 국가보위부에 바다출입증을 위해 500~600달러, 4군단 경비국에 500달러 정도 바쳐야 했다고 한다. 세금인지 뇌물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엄청난 돈이 사업비로 필요했다.

(3) 제조업

제조업 분야의 개인기업 사례로는 앞 절에서 ‘씨래기’로 불리는 의류 제조업의 경우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식품가공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식품가공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수공장과 인조고기 공장이다. 이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거나 저렴하면서

⁵⁰ 이 부분은 해주 출신 탈북자 K씨와 2014년 7월 필자가 면담한 내용이다.

도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들이다. 이들 품목을 생산하려면 기계 설비도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수공장 및 인조고기 공장은 주요 국영공장의 ‘생산기지’로 등록한다. 이 기지는 통상 해당 국영공장의 ‘더벌이’ 과제 수행이라는 합법적 형태를 띤다.

국수공장 같으면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마른 국수를 생산하는 황해남도의 어느 한 개인기업은 기계공장 산하로 들어갔다.⁵¹ 공장의 건물 일각에 자기의 국수 생산기지를 꾸리고 자기가 선발한 노동자, 자기의 설비, 자기가 구입한 원자재로 국수를 생산하고 이를 대기하고 있는 도매상들에게 팔고 그 이윤의 일부를 공장 측에 이관한다. 개인기업가는 ‘기지장’이라고 불리며 경영상 공장과는 독립이지만 이윤 분배와 자원대여, 법적 수속은 양자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인조고기(콩으로 만든 돼지고기 맛이 나는 음식) 공장 사례도 흥미롭다.⁵² 북한의 B시(농촌 제외 시 인구 20만 명)에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인조고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B시에 거주하는 개인 수공업자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원래 이들은 중국 수입 콩으로 콩기름을 짜서 시장에 팔던 개인 콩기름 제조업자들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인조고기가 큰 인기를 끌자, 그들은 안주에 가서 ‘콩으로 만든 고기’의 생산기술을 배우고 그 생산기계를 모방해 기계를 제작한 후 자체적인 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⁵¹ 립근오,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임진강』, 제8호 (임진강출판사, 2010), p. 49.

⁵² 채순, “인조고기밥: 민중이 만들어내고 즐겨먹는 조선의 대중음식,” 『임진강』, 제10호 (임진강출판사, 2010), pp. 118~128.

인조고기 공장을 꾸리려는 개인은 우선 인맥이 있는 국영공장의 간부와 의논해 공장으로부터 생산기지 설치·운영권을 승인받은 후 자신이 해당 기지 책임자가 된다. 그러면 공장 내의 건물 일부를 생산기지로 분배 받고, 공장의 동력선(전기선)도 분배 받아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리고 개인자금으로 인조고기 생산기계를 구입한다. 본인이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대개 공장 간부의 가족들이 포함된다. B시에서 처음으로 인조고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해(1999년)로부터 9년이 지난 2008년 현재, B시에는 10명 이하 규모인 인조고기 생산기지가 7~8개소로 늘어났다고 한다.

지방산업과 대규모 국영기업에서도 개인사업이 출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⁵³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을 사실상 개인이 인수하여 해당 공장의 구매, 생산, 판매, 심지어는 노동자 고용 등 일체의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또 제조업에서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분공장 혹은 분소의 형태를 취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4) 다업종 개인기업

한편 특정 업종에만 종사하는, 즉 단일 업종의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 걸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업종 개인기업도 존재한다. 물론 출발할 당시에는 단일 업종이었지만 사업이 번성하면서 업종이 다양해지고 업체 수도 늘어나는 경우이다.

박기원이라는 이름의 평안남도 순천시 기업가의 사례를 살펴보자.⁵⁴

⁵³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실패와 작동방식』, pp. 214~215 참조.

⁵⁴ 손혜민, “현장취재: <박기원 그 순천 사람>,” pp. 44~73.

그는 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돌 공예품 가내반에서 출발해 이를 ‘순천 수출 돌 공예품 공장’으로 발전시켰다. 이어 중국의 문화오락산업을 참고로 해서 국가 허가를 받은 종합봉사소를 설립했고, 대동강의 골재를 원료로 하고 순천세멘트공장을 위한 부재(部材)공장도 설립·운영했으며, 아파트 신축 등 건설업에도 뛰어 들었다. 그는 이러한 돌 공예품 공장, 부재공장, 종합봉사소 등의 종합체 ‘금강산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여러 개의 기업소와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권력과의 유착, 과감한 실천력,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선구자적 안목 등이 있었다. 그는 국내자원을 이용한 생산 활동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가 하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건재와 건설, 서비스에도 투자함으로써 종합적 기업을 꾸렸고, 이러한 사업구조는 북한경제의 불안정 구조에도 견뎌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⁵⁵

다. 북한 당국의 정책과 개인기업

이러한 개인기업의 활동에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편으로는 묵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제를 가한다. 실제로 2007년 이후 당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통제를 반복했다. 예컨대 2008년 3월에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이 개인이 투자한 회사 및 편의봉사망에 대한 합동 검열을 실시했다.⁵⁶ 국가보안성 산하

⁵⁵ 하지만 그는 비사회주의 투쟁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던 2007년에 공개처형 당했다고 한다.

⁵⁶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9호, 2008년 4월 9일.

기관의 경제 감찰은 2009년 12월 공장·기업소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 영리기업들을 회수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보안서의 집중단속으로 개인 돈으로 움직이던 외화벌이 사업소와 수산기지, 음식 가공 업소들이 대량으로 폐쇄되기도 했다.⁵⁷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러한 단속·통제는 종전에 자신이 취했던 행동과 다소 모순되는 것이다. 당국은 사실상 사유화의 진전 및 개인기업의 확대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곤 했다. 사실 북한에서 사유화는 일정 수준의 법적·제도적 토대 하에 진행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유화 및 개인기업 활동에 대한 당국의 허용은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하면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화 및 개인기업 활동이 진전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8·3(노동자)’이라든지 ‘더벌이’ 같은 것이다. 기관·기업소의 자산과 전혀 관계없이, 단지 활동시간만을 직장으로부터 허용 받고 그 대가만 입금하는 종업원 또는 그 활동을 ‘8·3’이라 한다. ‘더벌이’는 그 시간은 물론 기관·기업소의 자산도 일부 이용하여 그 대가로 입금을 하는 개인기업 활동이다. 더벌이는 2002년 7·1 조치의 후속 조치로 나온 공장·기업소·단체에 가능한 합법적 시장 부문 경제활동의 한 가지 이름이다. 그 이전에는 8·3(노동자)만 존재했다. 외화벌이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범주이다.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국가 무역기관의 명의를 쓰고 활동하면 외화벌이로 분류되고 기타의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명의를 쓰면 더벌이로 분류된다.⁵⁸

이런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부족 때문이다.

⁵⁷-NK 지식인 연대, 『연대독점뉴스』, 2010년 1월 14일.

⁵⁸- 림근오,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pp. 48~49.

국가가 각 기관·기업소에게 운영 예산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화별이, 더별이, 8·3(노동자) 등의 공간을 열어주면서 각 기관·기업소에 대해 운영예산을 ‘자력갱생’, ‘자체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각급 기관,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 및 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킨 개인기업(개인자본), 즉 외화별이 및 더별이에 의존해야 한다. 산하 개인기업이 창출하는 이윤의 일부를 자신의 예산으로 획득하기 위해 해당 기관·기업소들은 개인기업과 협력한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개인기업을 사실상 장려·촉진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은 2006년에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공표했다. 이 규정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 하에서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⁵⁹

북한에서는 그동안 탄광 개발권이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었고 석탄 생산 관련 대규모 기업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더욱이 비생산 기관·단체에게는 탄광 개발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규정은 이른바 ‘능력 있는 개인’이 탄광 개발·운영에 거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이 규정의 등장 이후 ‘능력 있는 개인’들은 기관·기업소·단체의 명의를 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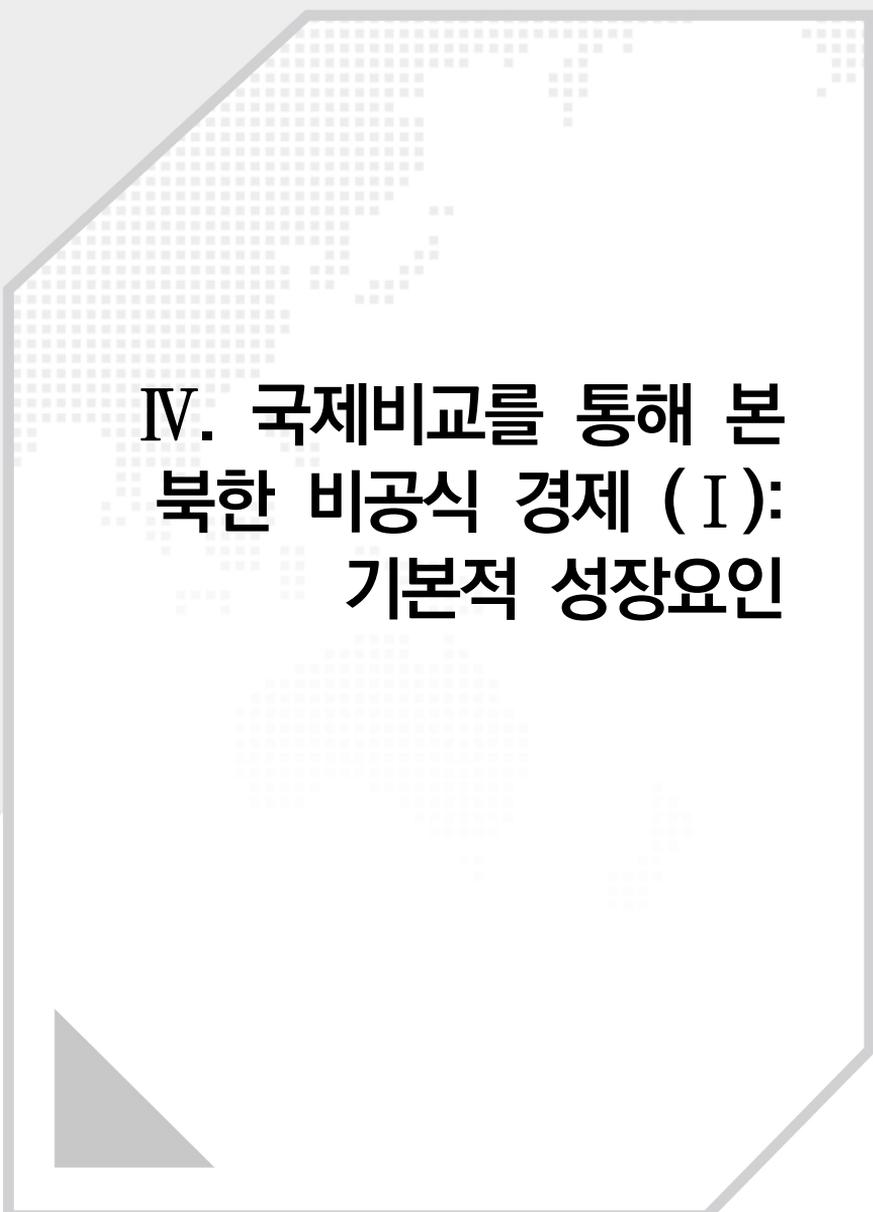
⁵⁹ 『연합뉴스』, 2006년 12월 11일.

사실상의 개인 탄광을 보유하면서 탄광 사업에 대거 진출했다. 여기서 능력이란 주로 자금 및 노동력 동원 능력을 가리킨다. 돈주들은 자금 동원의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고, 노동력 동원은 ‘8·3 노동자’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하면 되었다.⁶⁰

한편 기업의 사유화와 관련, 북한이 201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공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 중에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⁶¹ 제12조(기업소의 조직근거)에는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 조직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13조(기업소 조직 신청)에서는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 명, 급수, 종업원 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각급 기관·기업소가 개인자본을 끌어들이 식당, 상점, 편의봉사업체, 무역회사, 공장·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공식 제도, 특히 법의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⁶⁰ 또한 어느 탈북자는 2004년경부터 국토관리부가 외화벌이 사업소에 광산 개발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해도에 20여 개의 광산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물이 차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광산이 꽤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광산들에게 전기와 원자재를 공급해 줄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광산들은 사실상 방치되는 것이다. 대략 2004년부터인가? 국가가 광산을 외화벌이 사업소에게 떼어 주기 시작했다. 물론 외화벌이 사업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이런 광산에 투자한다. 발전기, 양수기, 수송기재, 마광기 등을 갖추고 광물을 채취해 수출한다. 국가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다. 어차피 운영하지 못하는 광산에서는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정 부분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필자 면담.

⁶¹ 기업소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양문수, “북한의 6.28 방침과 경제개혁,” (북한연구학회 정기 추계학술회의, 2012), pp. 39~40 참조.



IV.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 비공식 경제 (I): 기본적 성장요인

1.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

가. 일반적 논의와 해외 사례

(1) 비공식 경제와 서비스 부문

최근 여러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가 비교적 좋은 성장 실적을 보인 기본적 배경은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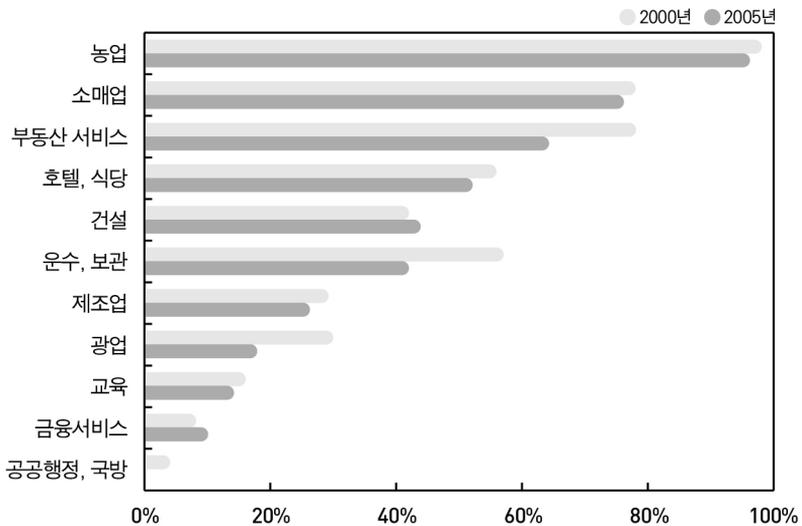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소매업의 4분의 3 이상,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의 약 3분의 2, 음식숙박업 및 운수업의 약 2분의 1은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IV-1>). 반면 제조업과 광업에서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4분의 1 이하이다. 그 결과 인도에서는 농업을 제외할 경우 비공식 경제의 4분의 3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을 비공식 경제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공식 경제의 2분의 1이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IV-2>). 이런 사정은 인도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공식 경제가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국방 및 공공행정은 당연히 비공식 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교육, 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비공식 경제 비중은 낮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 서비스 같은 전통적 민간 서비스에서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다.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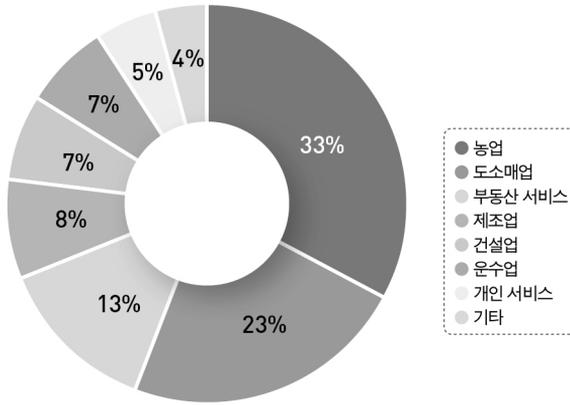
비공식 경제활동이 전통적 민간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광업, 제조업 같은 산업 부문이나 금융 같은 현대적 서비스는 비교적 많은 자본과 큰 조직,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 인기업들이 주된 경제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의 부문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시 비공식 경제가 설 자리가 크지 않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 서비스 등의 전통적 민간 서비스는 적은 자본과 작은 조직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비공식 생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림 IV-1 인도의 부문별 비공식 경제 비중



자료: Neelkanth Mishra and Ravi Shankar, "India's Better Half: The Informal Economy," *Equity Research*, No. 9 (July 2013), p. 6.

그림 IV-2 인도 비공식 경제의 부문별 구성



자료: Neelkanth Mishra and Ravi Shankar, "India's Better Half: The Informal Economy," p. 10.

비공식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 민간 서비스는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커진다. 즉 저소득 국가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의 서비스 부문 비중도 고소득 국가에 비해 낮을 뿐, 절대적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공식 통계상으로도 전체 경제의 약 50%에 이른다(<표 IV-1>). 또한 저소득 국가 비공식 경제 중 일부가 공식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비공식 경제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서비스 부문 비중은 50%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I
II
III
IV
V
VI

표 IV-1 국가 그룹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평균(2010년)

(단위: %)

국가 그룹	서비스업 비중	국가 그룹	서비스업 비중
고소득 국가(OECD)	75	중하위 소득 국가	52
고소득 국가(비OECD)	63	저소득 국가	49
중상위 소득 국가	54	세계 평균	70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서비스 부문 내부 구조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선진국에서는 금융이나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같은 현대적 서비스와 교육, 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전통적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직 저소득 개도국이었던 1960년대 중반과 최근의 서비스 부문 내부 구조를 비교해 보면, 1960년대 중반에 전통적 서비스의 상대적 비중이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표 IV-2>).

전통적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국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제적 비중은 개발 초기에는 상승하다가 나중에는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IV-3>). 개발 초기의 상승은 농림어업의 비중 하락에 따른 상대적 상승의 성격이 강하며, 나중의 장기적 하락은 공공 서비스와 현대적 서비스의 상승에 따른 상대적 쇠퇴 현상이다. 즉 한국의 경험은 서비스 부문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같은 전통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개도국에서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공식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쉬운 전통적 서비스의 경제적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기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표 IV-2 한국의 산업별 생산구조

(단위: %)

산업 분류		부가가치 비중	
		1965	2010
농림어업		40.2	2.3
광업		2.1	0.2
제조업		17.3	31.1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1	2.3
건설업		3.6	5.0
서비스업		35.6	59.1
정부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5.2	7.2
정부+민간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2.1	5.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	4.1
민간 서비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	11.5
	운수창고통신업	4.0	7.5
	금융 및 보험업	1.0	5.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2	15.2
	기타 서비스업	2.3	2.7
합계		100.0	100.0

자료: ① 1965년은 낙성대경제연구소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데이터로부터 재 인용, <<http://www.naksung.re.kr>> (검색일: 2014.6.8).

② 2010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서비스업 내부 세부 분류 중에서 일부를 합하여 분류를 단순화함).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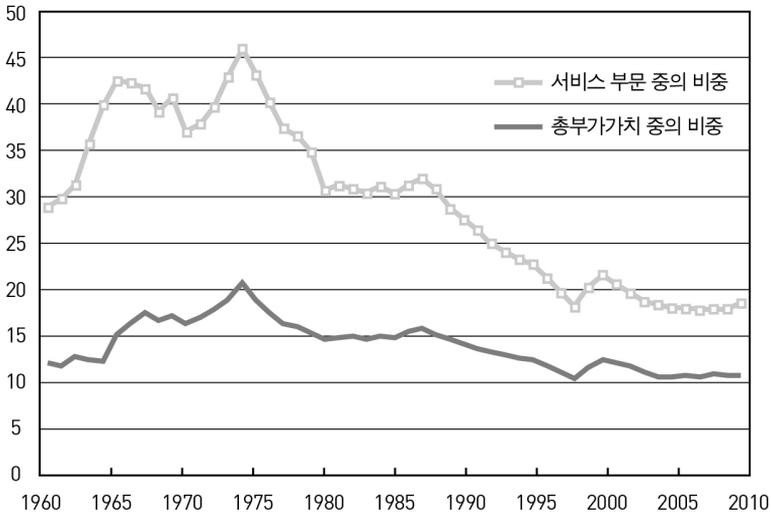
III

IV

V

VI

●그림 IV-3 한국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낙성대경제연구소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데이터 파일로부터 재인용, <<http://www.naksung.re.kr>> (검색일: 2014.6.8).

(2)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 사례

제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30년 동안 저소득 개도국(인도 등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 실적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는데, 그 주된 배경으로 흔히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이 거론된다.⁶²

⁶² 저소득 개도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에 관한 본문의 논의는 다음 문헌들을 참고한 것이다. 인도 등 남아시아에 대해서는 Ejaz Ghani, "Is Service-led Growth a Miracle for South Asia?," Ejaz Ghani (ed.), *The Service Revolution in South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Ejaz Ghani and Homi Kharas, "The Service Revolution in South Asia: An Overview," Ejaz Ghani (ed.), *The Service Revolution in South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참조.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Margaret S. McMillan and Kenneth Harttgen, "What is Driving the 'African Growth Miracle'?", *NBER Working Paper*, No. 20077

개도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지배적인 통념은 제조업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문이며, 따라서 산업화, 즉 제조업의 비중 제고가 주된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선진국들도 18~19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으로써 현대적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20세기 개도국의 주된 성장 사례인 동아시아에서도 역시 제조업 주도 성장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도 부문이 될 수 있다는 통념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훨씬 더 자본·기술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 투자와 기술 향상에 따라 훨씬 더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 여지가 훨씬 작다. 둘째, 현대적 경제성장에서는 대외무역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데, 제조업은 대체로 교역 가능한 상품, 즉 교역재(tradables)를 생산하는 데 비해 서비스업은 대체로 교역 불가능한 서비스, 즉 비교역재(non-tradables)를 생산하므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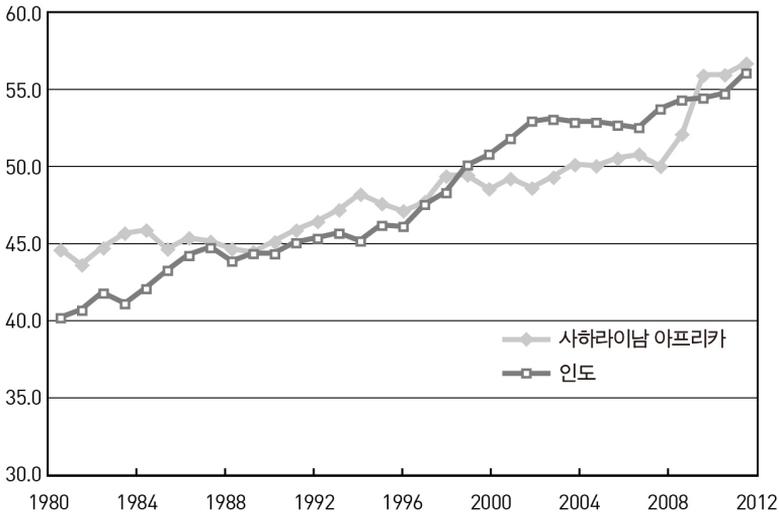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난 20~30년 동안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로 약칭) 지역의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빨리 성장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새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4) 참조.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Marcus Noland, Donghyun Park, and Gemma B. Estrada, "Developing the Service Sector as Engine of Growth for Asia: An Overview," *ADB Economics Working Paper*, No. 320 (Asian Development Bank, 2012); Donghyun Park and Kwanho Shin, "The Service Sector in Asia: Is It an Engine of Growth," *ADB Economics Working Paper*, No. 322 (Asian Development Bank, 2012) 참조.

I
II
III
IV
V
VI

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그림 IV-4>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와 아프리카의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난 30여 년 사이에 40%대에서 55%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⁶³ 또한 <그림 IV-5>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와 아프리카 모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성장속도가 한층 더 빨랐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고 서비스업의 성장속도가 더 빨랐으므로 인도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확실히 서비스 부문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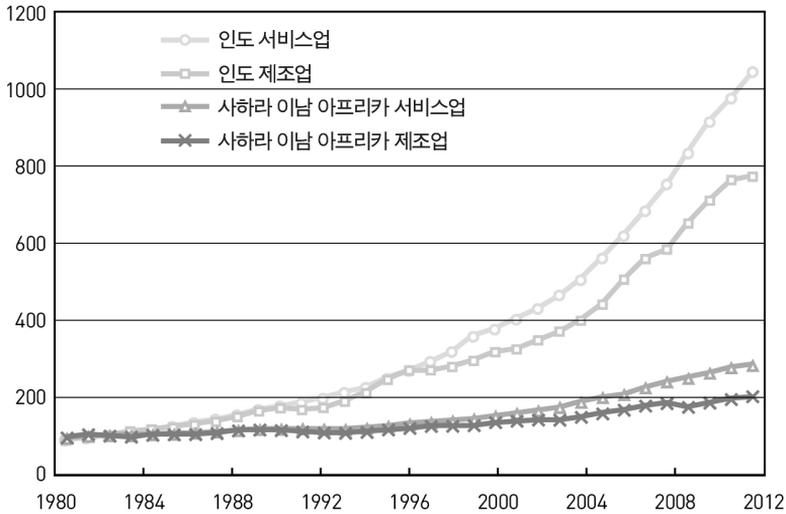
● **그림 IV-4** 인도와 아프리카의 GDP 중 서비스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⁶³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서비스업이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실제 서비스업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V-5 인도와 아프리카의 서비스업 및 제조업 성장지수 추이
(단위: 1980년 = 100)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성장지수로 전환한 것임.

그럼, 인도와 아프리카의 서비스 주도 성장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첫째, 농업 부문의 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은 서비스 부문보다 낮기 때문에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인구 이동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평균 생산성 향상,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제조업도 워낙 낙후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조업 생산성도 서비스업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이농 인력의 다수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흡수되었다. 요컨대 농업과 제조업의 상대적 낙후,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 지체로 인해 서비스 부문이 부각될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제조업보다 작긴 하지만, 저소득 개도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애초에 워낙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

I
II
III
IV
V
VI

문에 세계적 수준을 향해 추격(catch-up)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그리고 이들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의 이륙(take-off)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먼저, 더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전반적 교육·보건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효과가 먼저 서비스 생산성의 향상으로 반영되었다. 더 큰 자본과 조직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네트워크 효과와 클러스터 효과가 나타나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농업과 제조업의 발전을 도움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전통적 서비스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및 운수업 등이 발전하게 되면, 농산물과 공산품의 유통·분배 효율성이 향상되므로, 자연히 농산물과 공산품의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발전은 교육·보건 수준의 향상을 더욱 촉진해 인적자본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통·통신기술의 발전, 그 중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정보통신,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 현대적 서비스의 수출입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관광과 무역업, 국제물류업 등 전통적인 국제적 서비스 거래도 활발해졌고, 국가 간 인력이동에 따라 많은 개도국들이 상당한 규모의 송금 수입을 얻게 되었다. 요컨대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저소득 개도국도 대단히 큰 서비스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재음미해 보자. 저소득 개도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 사례가 제조업 주도 성장이라는 기존의 통념이 잘못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성장 잠재력이 더 크고, 제조업이 성장주도 부문으로 나설 때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개도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은 제조업 주도 성장이 경제성장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준다. 서비스업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상대적 낙후와 성장 지체가 나타나고 있을 때, 이를 대신해 서비스업이 얼마든지 성장주도 부문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 속도는 과거에 제조업 주도 성장을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 보다는 훨씬 낮았다. 하지만 서비스 주도 방식을 통해서도 과거에는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비교적 양호한 성장이 가능하였다.

(3) 체제전환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 사례

북한은 개도국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국 사례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옛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서비스 주도 성장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체제전환 초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불황을 경험해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한층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초기의 대불황을 완화하고 나중의 회복세를 더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제조업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어 장기간 침체되었고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림 IV-6>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체제전환국에서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은 무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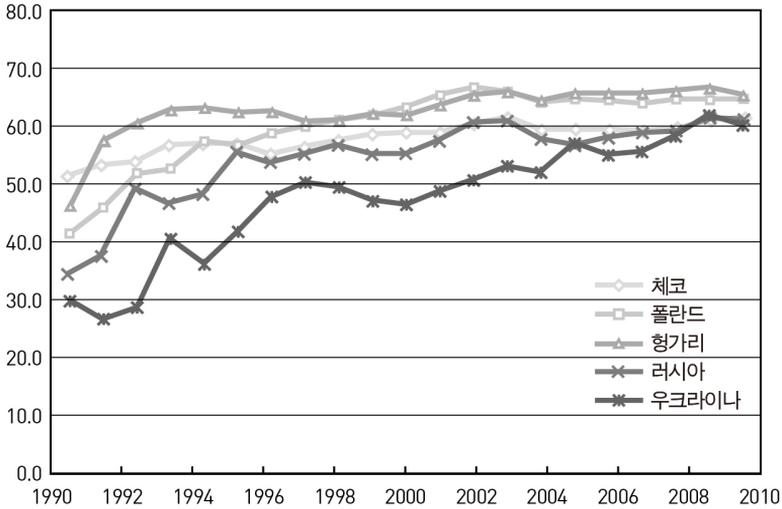
IV

V

VI

려 20~30% 포인트나 상승하였으며, 이런 상승세는 초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⁶⁴

●그림 IV-6 주요 체제전환국의 GDP 중 서비스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옛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주도 성장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⁶⁵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에

⁶⁴ 체제전환국들의 경우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의 장기 시계열 통계가 미비하여 앞에서 본 개도국의 경우와 같은 업종별 성장추세를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대단히 크게 상승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서비스 주도 성장이 나타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업의 비중 상승은 서비스업 성장률이 다른 부문보다 빠르다는 것 외에 서비스의 상대가격 상승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아마도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⁶⁵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William Easterly, Martha de Melo, and Gur Ofer, "Services as a Major Source of Growth in Russia and Other Former Soviet Stat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1994) 참조. 이 논문은 체제전환 초기에 나왔는데, 체제전환국이 서비스 주도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들

서는 산업구조가 크게 왜곡되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너무 낮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시장경제라면 대체로 민간 부문에서 담당할 서비스, 즉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발전이 크게 억제되고 있었다.

왜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업종이 잘 발전하지 못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상품의 유통과 분배를 국영기업과 계획(명령) 시스템에 따라 조직하고, 또 상당수 상품을 배급 또는 준 배급하는 경직적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 이런 업종이 발전할 여지가 작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업종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사경제 활동을 억압하므로 이런 업종의 발전도 억압되었다.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서비스 부문의 상당 부분을 비생산적 부문으로 규정한 이념적 편향⁶⁶도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사경제 활동이 가능해지자 이제까지 억압되었던 서비스 부문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한 과거에 상품(농산물 및 공산품) 중심이었던 소비구조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개도국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제조업의 경우 생산 활동을 조직하기가 쉽지 않지만, 서비스업의 많은 부분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활동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의 예측은 그 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올바른 주장이었음이 판명되었다.

⁶⁶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 경제학에서는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 상품생산 부문과 직결되는 부문은 생산적 업종으로 간주하였지만, 그 외의 개인서비스, 문화관광오락, 교육, 보건, 행정 등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규정하여 국민소득 통계에서 배제하였다.

I
II
III
IV
V
VI

점도 매우 중요하다. 개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문에서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비중도 높다. 즉 체제전환국에서도 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⁶⁷

체제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의 발전은 중요한 간접적 파급효과들을 낳았다. 도소매업과 운수업, 통신업 등 서비스업이 발전하여 시장 인프라가 갖춰짐으로써 나중의 산업 회복⁶⁸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 서비스업에서는 창업이 쉬워 다른 부문보다 먼저 기업가 활동이 분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나중에 산업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겨났다. 서비스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산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생겨난 대규모 실업자 증상당수가 서비스 부문으로 흡수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존된 생산적 인력이 나중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들도 앞에서 본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와 공통점이 많다. 다만 체제전환국에서는 과거의 왜곡된 산업구조가 교정되는 과정에서

⁶⁷ 체제전환국의 비공식 경제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Daniel Kaufmann and Aleksander Kaliberda, "Integrating the Unofficial Economy into the Dynamics of Post-Socialist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691 (World Bank, 1996); Simon Johnson, Daniel Kaufmann, and Andrei Shleifer, "The Unofficial Economy in Transi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97, No. 2 (1997); Yair Eilat and Clifford Zinnes,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Friend or Foe? A Polic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Vol. 30, No. 7 (2002).

⁶⁸ 옛 소련,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 부문 성장실적에 대해서는 김석진·이석기·김계환·이두희,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서울: 산업연구원, 2008), pp. 69~87 참조.

더 빠르게, 더 극적으로 서비스 주도 성장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 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서비스 주도 성장 기간은 저소득 개도국들보다 더 빠르게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북한의 서비스업과 비공식 경제

(1) 비공식 서비스업의 확산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주로 어떤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북한에서도 비공식 경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활발할까? 또 비공식 서비스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흔히 인용되는 한국은행의 자료는 이런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은행의 북한 국민소득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서비스업 비중은 30% 정도로 매우 낮은 데다,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정부 서비스(행정, 국방, 교육, 보건 등)라고 한다(<표 IV-3>). 정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업은 GDP의 10%도 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은의 추정작업에 활용된 기초 자료가 비공식 경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⁶⁹

⁶⁹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비공식 경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북한의 경제 회복세 및 소득수준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김석진,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pp. 35~43 참조.

표 IV-3 북한의 산업별 생산구조(2013년): 한국은행 추정치

(단위: %)

산업 분류	부가가치 비중	산업 분류	부가가치 비중	
농림어업	22.4	건설업	4.1	
광업	13.6	서비스업	30.0	
제조업	22.1		정부	21.7
	경공업	6.8	기타	8.4
	중화학공업	15.4	합계	100.0
전기가스수도업	4.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한국은행이 추정한 산업구조가 대체로 북한의 공식 부문 산업구조와 비슷하다는 점은 북한의 2008년 인구 센서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센서스에서는 “어떤 기관·기업에 재직 중인가? 해당 기관과 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 <표 IV-4>이다. 이를 보면,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농림어업 36%, 광공업 30%, 서비스업 30%, 기타(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 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산업구조의 모습과 잘 부합한다.⁷⁰ 서비스업 취업자 30% 중에서는 행정, 국방, 교육, 보건 등 정부 서비스 종사자가 절반을 넘고, 여기에 금융, 통신, 과학기술, 예술체육 등 북한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까지 합하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3분의 2가 정부 서비스 부문에 소속되어 있으며, 도소매와 운수,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⁷⁰ 환은 추정 산업구조는 부가가치 구성 비율인 데 비해 <표 IV-4>는 취업자 구성 비율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림어업보다 광공업의 생산성이 더 높고 서비스업은 그 중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은이 추정한 산업구조와 북한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업종별 취업구조는 서로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영기업·기관 중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상당수 북한주민들은 소속 기업·기관에 적(籍)만 걸어 놓은 채 개인적으로 비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즉 <표 IV-4>에 나타난 업종별 취업구조는 단지 공식 부문의 업종별 배치 상황을 나타낼 뿐, 비공식 부문까지 포함한 북한경제의 실제 취업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 표 IV-4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업종별 취업자 비중: 인구 센서스 결과 (단위: %)

업종	취업자 비중	업종	취업자 비중
농림어업	36.0	서비스업	29.6
광업	5.9	(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업지원 서비스)	16.9
제조업	23.7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업)	8.6
전기가스수도업	1.8	(금융, 통신, 과학기술, 예술체육, 기타)	4.1
건설업	3.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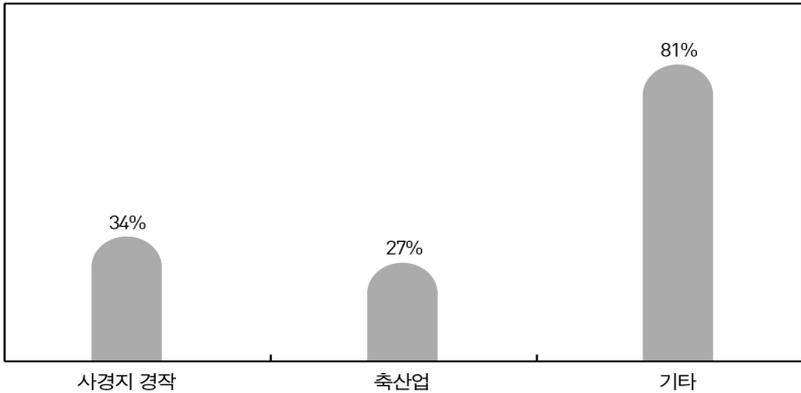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p. 195, Table 36을 이용하여 계산.

주: “재직 중인 기업·기관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답변임.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는 북한에서도 역시 서비스 부문, 그 중 특히 유통업(도소매)에서 비공식 경제가 가장 활발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7~2004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김병연 등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에서 살고 있을 당시 비공식적인 농축산 활동(사경기 경작 및 가축 사육)과 기타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했다고 답하였다(<그림 IV-7>).

I
II
III
IV
V
VI

○그림 IV-7 비공식 경제활동의 구성



자료: Byung-Yeon Kim and Dongho Song,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 No. 2 (2008), p. 371.

주: ① 1997~2004년 탈북자 대상 조사 결과.

② 두 종류 이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합계는 100%를 훨씬 초과.

기타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표 IV-5>에서 볼 수 있듯이 유통(도소매업)과 음식품 가공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음식품 가공은 음식료 제조업이 아니라 ‘장마당’에서의 각종 음식 장사(국수, 두부 및 기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의 음식숙박업에 속하며, 나머지 범주까지 고려해도 기타 활동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속함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거드(Stephen Haggard)와 놀랜드(Marcus Noland)의 연구에서도 유통업 및 기타 서비스가 비공식 경제활동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⁷¹

⁷¹-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p. 59.

표 IV-5 비공식 경제활동(농축산 제외)의 종류

	유통	음식품 가공	밀수	기타 서비스	채취	소비재 생산	횡령	피고용	합계
표본수	256	69	24	17	15	6	4	3	394
비중(%)	65.0	17.5	6.1	4.3	3.8	1.5	1.0	0.8	100

자료: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윤영관·양운철 엮음,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p. 80.

주: 1997~2004년 탈북자 대상 조사 결과.

앞의 결과에서 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2000년대 중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이고 함경북도 등 접경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도 비공식 경제활동의 성격은 비슷할까? 보다 최근에 탈북한 비함경북도·양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3분의 2는 2006년 이후 탈북)을 조사한 곽인옥의 연구에서는 비공식 활동의 업종이 조금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IV-6>). 이 조사에서도 비공식 소득 중에서 ‘장사(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 사금융, 가내 수공업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였다.⁷² 운수와 금융도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이 조사 결과 역시 비공식 활동이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표본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업종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세부 업종까지 조사한다면, 비공식 활동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경우에도 농업을 제외한 비공식 활동은 대체로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⁷² 앞의 조사들과 이 조사는 질문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앞의 조사들에서는 어떤 종류의 비공식 활동을 했느냐를 물었고, 이 조사에서는 해당 종류의 비공식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얼마였느냐를 물었다.

표 IV-6 비공식 소득의 업종별 비중

(단위: %)

서비스				농업		제조업	합계
장사	운수	개인 서비스	사금융	소토지	축산	가내 수공업	
48.8	11.5	9.4	10.0	7.1	2.5	8.7	100.0

자료: 박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3), p. 100.

주: ① 비함경북도·양강도 북한이탈주민 127명(약 3분의 2는 2006년 이후 탈북) 대상 조사 결과.

② 박인옥이 ‘거래비용’, ‘가내 서비스’, ‘짐승 기르기로 표기한 것을 각각 ‘운수’, ‘개인 서비스’, ‘축산’으로 바꾸었음.

최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2012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주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접경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 거주 당시 이들이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표 IV-7>과 같았다고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경제활동은 소매장사, 외화벌이, ‘되거리’ 장사,⁷³ 돈 장사(사금융) 등으로 역시 서비스 부문의 업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7 북한 거주 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의 비중

(단위: %)

소매 장사	외화 벌이	되거리 장사	샅벌이	돈장사	개인 편의봉사	임가공	식당·상점 임대	해외 파견	기타
37.2	11.1	8.0	7.1	6.2	5.3	3.1	0.9	1.3	19.9

자료: 장용석,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소득 분화,”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 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 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 p. 35.

주: 2011~2012년 탈북민을 대상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조사한 결과.

⁷³ ‘되거리’ 장사란 가격이 싼 지역에서 물품을 사서 비싼 지역으로 가져가 되파는 장사를 가리키며 도매업과 운수업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는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북한경제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앞의 연구들이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표본에는 협동농장 소속 농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경기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이 비공식 활동의 주된 형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주민들도 흔히 사경기 경작과 개인 축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의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 전체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비해 비공식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은 더 낮고 농업의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농업을 제외한 도시 비공식 경제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결국 북한에서도 비공식 경제의 업종별 구조가 저소득 개도국의 일반적 경우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경제의 본질이 개인 사경제이고, 개인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기가 가장 쉬운 부문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공식 경제 종사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북 비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 성격과 비공식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회색 지대의 경제 활동이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 중 이러한 활동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이나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여러 정황 정보에 의하면, 국영기업·국가기관의 자산, 조직, 명의를 활용하는 비공식 활동도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I
II
III
IV
V
VI

비서비스업 활동의 비중이 순수 개인 경제활동의 경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런 회색 활동도 광업, 제조업보다는 상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IV-8>에서 보듯이 공장(제조업, 광업)의 경우에는 중앙공장이든 지방공장이든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상점, 식당, 서비스업체, 무역회사 등 서비스 부문 국영기업에서는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 표 IV-8 국영기업의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단위: %)

	중앙공업 공장	지방산업 공장	상점	식당	서비스 업체	무역회사
2005년 조사	11.0	11.5	40.1	54.4	41.5	32.9
2009년 조사	21.4	23.6	51.3	58.5	46.7	41.0

자료: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 129.

주: 2005년 조사는 2002~2005년 탈북민, 2009년 조사는 2007~2009년 탈북민 대상.

(2) 서비스업의 성장이 여타 업종에 미친 영향

북한의 시장 활동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관한 통념 중 하나는 그것이 대체로 생산이 아니라 유통에 불과하므로 경제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 사례는 이런 통념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물질적 재화의 생산만 생산적이고,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서비스 경제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에 기

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재화의 생산만 있고 서비스 활동이 없다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물질적 재화의 유통과 상관없는 순수한 개인 서비스 활동조차도 경제적 복지에 기여한다. 요컨대 서비스 경제활동도 엄연히 경제적 부가가치의 생산이며 국민 소득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더구나 앞에서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서비스업이 발전해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광공업 중심의 공식 경제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많은 도시 노동자들이 유희인력이 되어 버렸는데,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서비스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GDP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개도국에서 농업의 잉여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GDP 증가가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또한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운수업까지 발전해 유통이 효율화되고 상품 판로가 확대되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서도 사회적 및 기술적 분업이 발전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스미스(Adam Smith) 이래의 경제학 연구가 잘 밝혀놓은 진리이다. 북한에서도 시장이 발달해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상품 생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것이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통념, 즉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통념은 이런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정말로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일까? 평양, 해주, 회령 등 3개 지구 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곽인옥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 중 공산품은 중국산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I
II
III
IV
V
VI

북한산의 비중도 아주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표 IV-9>). 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각종 먹거리에서는 북한산의 비중이 훨씬 높다. 그 결과 공산품과 먹거리를 합한 상품 전체에서는 중국산보다는 북한산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 표에서 제시한 추정치는 해당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에 의존한 어림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북한 의 시장에 대한 흔한 통념이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표 IV-9 북한시장 판매 상품의 중국산 대 북한산 비율 추정치

(단위: %)

	평양 당상시장	해주 시장	회령 시장
공산품	70 : 30	70 : 30	60 : 40
농산물	30 : 70	40 : 60	50 : 50
축산물	0 : 100	0 : 100	0 : 100
수산물	10 : 90	0 : 90	0 : 100
가공식품	40 : 60	40 : 60	40 : 60
합계	30 : 70	30 : 70	30 : 70

자료: 광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p. 117.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인들의 사경제 활동은 별다른 기술과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유통업(도소매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에서도 실제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사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사람들이 깨달음에 따라 다른 부문, 즉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도 사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다. 즉 시장 발전과 판로 확대가 물질적 상품의 생산을 자극하는 산업 연관효과와 더불어, 일부 사람들의 사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사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시범 효과(demonstration effect)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면담 조사 및 여타의 정보들을 보면, 비공식 경제활동이 유통업 등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도 퍼져 나갔음을 알려주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산업 부문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배를 사고 선원들을 고용해 고기잡이를 하고 잡은 고기를 무역상, 도매상, ‘되거리’ 장사꾼들에게 파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⁷⁴ 제조업 부문에서는 일명 ‘씨래기’로 불리는 의류 제조업이 유명하다.⁷⁵ ‘씨래기’는 원단을 본에 따라 자르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로, 개인 사업자가 재단사, 재봉사 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중국 원단을 수입해 각종 의류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가리킨다. 이 사업은 무역상, 도매상, 소매상 등 원자재 조달과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업자들과 연계되어 있다. 심지어 광업 부문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노동자들을 고용해 석탄이나 금을 채굴하는 비공식 사업 형태가 보고되고 있으며, 채굴한 석탄이나 금은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시장에서 팔리기도 한다.⁷⁶ 건설업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 파는 비공식 활동이 흔히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상점,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의 영업을 위해 건물을 증축·개축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⁷⁷

⁷⁴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2012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pp. 520~521;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pp. 656~657.

⁷⁵ 계명민,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pp. 57~58;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pp. 249~250.

⁷⁶ 손혜민, “장사의 도가니, 석탄시장,” pp. 94~105;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p. 660;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pp. 527~530.

⁷⁷ 손혜민, “부동산 시장의 단맛.”;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정은이, “북한에서 부동산 투자 현황에 관한 분석: 주택을 중심으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10).

I
II
III
IV
V
VI

이상 여러 업종의 비공식 활동은 대부분 유통업, 운수업, 사금융 등 서비스 부문 비공식 경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유통업을 통해 먼저 돈을 번 사람들이 다른 업종에 투자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발전한 비공식 경제가 여타 업종에서 비공식 경제의 출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2. 기업가 활동의 전개

가. 일반적 논의와 해외 사례

(1) 기업가 활동과 경제성장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⁷⁸이야말로 현대적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라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식이 되었으며, 기업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것은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⁷⁹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살펴봤듯이 북한을 포함한 많은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는 무시할 수 없는 활력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기업가 활동이 중요한 성장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⁷⁸ 'entrepreneurship'은 흔히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가 정신'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조하려고 하는 '정신'만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에 따른 기업가의 활동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글에서는 기업가 활동으로 번역한다. 또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entrepreneur'는 창업가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기업가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므로 이 글에서도 기업가로 번역한다.

⁷⁹ 이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최근의 대표적 문헌으로는 William J. Baumol, Robert E. Litan, and Carl J. Schramm, *Good Capitalism, Bad Capitalism, and the Economics of Growth and Prosper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기업가와 기업가 활동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⁸⁰ 경제학계 및 경영학계에서 기업가와 기업가 활동은 완전히 합의된 일의적 개념이 아니라 연구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즉 사업가 (businessman or businesswoman)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업가 중에서 자기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즉 창업자는 기업가로 간주되지만 창업자가 세운 기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자나 고용된 경영자는 기업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국영기업 경영자도 역시 기업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물론 2세 경영자나 고용된 경영자라도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다면 기업가로 간주할 수 있다.

기업가가 전개하는 비즈니스는 그 규모와 수준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기업가가 창업한 기업은 세계적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에 머무르기도 한다. 첨단 기술과 창의적 조직을 가진 혁신기업도 있지만 단순히 남의 활동을 모방하는 추종기업도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고수익 기업도 있지만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기업도 있다.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도 있지만 비생산적이거나 심지어 범죄적인 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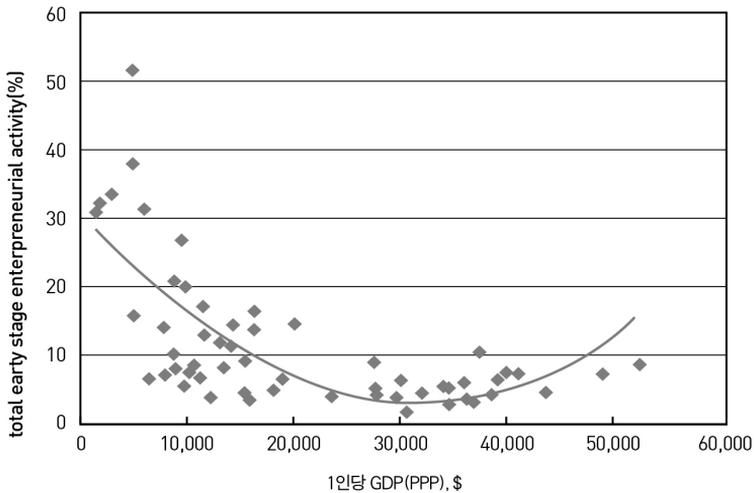
이렇게 기업가와 기업가 활동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활동이 활발할수록 경제가 더 번영한다는 식의 단선적 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⁸⁰ 개발도상국 및 비공식 경제와 관련하여 기업가 활동의 개념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Colin C. Williams and Sara Nadin,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Economy: An Overview,"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 15, No. 4 (November 2010) 참조.

I
II
III
IV
V
VI

예를 들어 ‘세계 기업가 활동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가 조사한 기업가 활동 지표와 1인당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아래 <그림 IV-8>과 같이 그려보면, U자형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업가 활동은 오히려 저소득 개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저조해지며 선진국에서는 다시 약간 활발해지는 관계가 나타난다.

● **그림 IV-8** 기업가 활동과 소득수준 간의 U자형 관계(2010년)



자료: ①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ww.gemconsortium.org/Data>. ②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ashington, D.C.: IMF, 2014).
 주: 세로축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조사한 57개국의 2010년 창업 단계 기업가 활동 지표(18~64세 인구 중 창업단계 기업가의 비율)이고, 가로축은 각국의 2010년 1인당 구매력 기준(PPP) GDP.

이는 기업가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하고 기업 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질적으로 뛰어난 기업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경제적 번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 저소득 개도국에서 기업가 활동은 적극적·능동

적 창업이라기보다는 취업 기회를 찾지 못한 빈민들의 자구적 생계활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기업가 활동은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저발전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기업가 활동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거론할 경우에는 고차적인 활동, 즉 혁신적·생산적이고 기술 및 생산성 수준이 높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고차적 기업가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저소득 개도국에서도 지난 20~30년간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가 활동을 고차적인 것과 저차적인 것의 두 유형으로만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으며, 비교적 저차적이라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기업가 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개도국의 비공식 기업가 활동

제Ⅱ장에서 살펴봤듯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비공식 경제 또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고 지난 20~30년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 비중은 유지되었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였다. 이는 비공식 경제에서도 활발하게 기업가 활동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취업자 중에는 남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도 많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구르투(Anjula Gurtoo)와 윌리엄스(Colin C. Williams)⁸¹가 2006~2007년에 인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비공식 취업자

⁸¹- Anjula Gurtoo and Colin C. Williams,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Sector: Some Lessons from India,"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Vol. 10, No. 1 (February 2009).

의 약 절반은 자영업자로 나타났다(<표 IV-10>).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기업가로 볼 수 있다. 나라마다 시기마다 큰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기업가의 비중은 공식 부문보다는 비공식 부문에서 훨씬 더 높다. 또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비공식 취업자 비중이 높으므로 전체 취업인구 중에서 기업가의 비중도 더 높다. <그림 IV-8>에서 보듯이 기업가 활동이 오히려 저소득 개도국에서 더 활발한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IV-10 인도 비공식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과 월 소득수준

	비중	월 소득(루피)		
		최저	최고	평균
자영업자	49%	1,500	50,000	7,068
임금 노동자	21%	2,000	10,000	2,559
일용 노동자	30%	1,000	10,000	3,883

자료: Anjula Gurtoo and Colin C. Williams,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Sector: Some Lessons from India,"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Vol. 10, No. 1 (February 2009), p. 5.

주: 2006~2007년에 실시된 서베이 결과.

비공식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활동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 문제를 조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업가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하나는 '사업형 기업가(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기업가(necessity-driven entrepreneurs)'이다.⁸² 전자는 다른 방법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돈

⁸²- Colin C. Williams, "Entrepreneurs Operating in the Informal Economy: Necessity or Opportunity Driven?,"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Vol. 20,

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좇아 적극적으로 창업한 사람들이다. 반면 후자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후자가 벌인 사업은 사업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한 마디로 보잘것없는 장사에 불과하고 이들의 소득수준은 최저 생계를 겨우 보장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비공식 부문의 특성상 비공식 기업가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비공식 기업가 활동은 경제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윌리엄스 등 여러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⁸³에 의하면, 기업가의 두 유형은 반드시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개도국의 비공식 기업가 중에는 그 비중이 높진 않지만 사업형 기업가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구르투와 윌리엄스에 의하면, <표 IV-10>에서 보듯이 인도의 비공식 기업가들, 즉 비공식 부문의 자영업자들은 비공식 부문 임금 노동자들 및 일용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 기업가들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

No. 3 (December 2012); Colin C. Williams and Sara Nadin,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Economy: An Overview."; David Smallbone and Friederike Walter, "Entrepreneu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Necessity or Opportunity Driven?," *Paper to the Babson College-Kauffman Founda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Babson, USA, 2003).

⁸³- Colin C. Williams and Sara Nadin,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Economy: An Overview."; Anjula Gurtoo and Colin C. Williams,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Sector: Some Lessons from India."; Colin C. Williams and Youssef Youssef, "Evaluating the Gender Variations in Informal Sector Entrepreneurship: Some Lessons from Brazil,"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 18, No. 1 (February 2013); John Benett, "Informal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Entrepreneurial Stepping Stone or Consolation Priz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4, No. 1 (March 2010).

I
II
III
IV
V
VI

이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 표 IV-11 인도 비공식 취업자의 직업별 자기 평가 결과

지표	일용 노동자 평균	임금 노동자 평균	자영업자 평균	유의수준
직업 만족도	3.2	3.7	1.2	0.00
다른 취업 기회의 부재	1.6	1.8	2.5	0.00
수입 안정성 전망	3.5	3.7	2.7	0.00
지역사회의 지원	1.8	2.3	1.9	0.01
더 높은 사회적 지위	2.4	3.0	1.6	0.00

자료: Anjula Gurtoo and Colin C. Williams,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Sector: Some Lessons from India,” p. 5.

주: ① 2006~2007년에 실시된 서베이 결과.

② 지표별로 ‘매우 그러함(strongly agree)’에서 ‘전혀 그렇지 않음(strongly disagreeing)’까지 1~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같은 조사에서 비공식 부문의 취업자들이 자기 직업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자영업자들, 즉 기업가들은 노동자들보다 직업 만족도가 더 높고, 수입도 더 안정적이며,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 또 노동자들이 다른 취업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이들은 어느 정도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생계형 기업가라 하더라도 얼마간은 사업형 기업가의 성격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⁴

⁸⁴ 탐바다(Jagannadha Pawan Tamvada)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Jagannadha Pawan Tamvada, “Entrepreneurship and Welfar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4, No. 1 (January 2010). 탐바다는 인도 통계부 전국

비공식 기업가들은 어떻게 해서 사업형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베넷(John Benett)과 웹(Justin W. Webb) 등이 흥미로운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⁸⁵ 베넷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가는 대단히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공식 부문에 진입해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기 전에 먼저 비공식 부문에서 사업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비공식 부문은 나중의 더욱 성공적인 기업가 활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웹 등은 비공식 기업가 활동의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배경을 지적한다. 공식 제도와 규제가 기업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한할 때, 기업가들은 또 다른 기회를 좇아 비공식 부문에 진입할 수 있다. 또 비공식 경제에서는 공식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대신, 비공식 기업가들끼리의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즉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요컨대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와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몰린 빈민들만이 아니라 사업형 기업가들도 비공식 부문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가피한 사정에 내몰려 기업가가 된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회지향적 성격을 가진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

표본조사국에서 2003~2004년에 실시한 60차 전국 고용-실업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남을 고용하는 기업가들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고, 남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그 다음이며, 고용된 종업원들의 소비수준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식 기업이 비공식 기업보다 규모가 크므로 이 결과는 공식 기업가들이 비공식 기업가들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비공식 기업가가 고용된 노동자보다 더 소득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⁸⁵- John Benett, “Informal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Entrepreneurial Stepping Stone or Consolation Prize?.”; Justin W. Webb, Laszlo Tihanyi, R. Duane Ireland, and David G. Sirmon, “You Say Illegal, I Say Legitimate: Entrepreneurship in the Informal Econom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4, No. 3 (August 2009).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공식 기업가 활동의 이러한 긍정적 가능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비공식 부문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에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기업가 활동이 활발한 개도국의 소득수준이 공식 기업가 활동이 주도적인 중진국,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또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할 경우 비공식보다는 공식 기업가 활동이 활발한 쪽이 더 우수한 성장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비공식 기업가 활동은 공식 부문의 제도와 정책이 미비해 기업가 활동을 저해할 때 활용되는 차선택이며, 공식적인 기업가 활동에 비해서는 열등한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체제전환국의 비공식 기업가 활동

기업가 활동은 체제전환국에서도 경제성장의 주된 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옛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체제전환국에서는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사회주의 시대부터 존재했던 기업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였다.⁸⁶ 기존 기업들은 사유화를 통해 사기업으로 변신한 후에도 경영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국영기업 대 사기업이라는 구별보다는 기존 기업 대 신규 기업의 차이가 기업 실적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창업 활동, 즉 기업가 활동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경제 실적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⁸⁶ John McMillan and Christopher Woodruff, "The Central Role of Entrepreneurs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3 (August 2002).

기업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려면 시장경제를 향한 제도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각종 법률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 정치 및 거시경제 환경도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체제 전환국(대체로 옛 소련 및 동유럽)에서 제도 개혁은 예상만큼 순조롭지 못하였고 정치적 혼란과 거시경제 불안이 나타나 체제전환 초기에 경제 불황이 심각하였다. 동시에 기존 국영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실질소득도 감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체제전환국에서 소규모 자영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이들 중 많은 수는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공식 기업이었다. 즉 체제전환 초기에 기업가 활동은 공식 부문보다는 비공식 부문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난 비공식 기업가 활동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여기에서도 개도국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공식 기업가들이 사업형 기업가였느냐, 생계형 기업가였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옛 소련과 동유럽에서 체제전환 초기의 비공식 기업가들은 경제 불황과 실직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창업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생계형 기업가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크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에 쓰였다. 스케이스(Richard Scase)⁸⁷는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라기보다는 ‘소유주(proprietor)’에 불과하며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본다.⁸⁷ 적극적 재투자를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이어야 진정한 기업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⁸⁷- Richard Scase, "The Role of Small Businesses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Real But Relatively Unimportan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16, No. 1 (October 1997).

I
II
III
IV
V
VI

그러나 스몰본(David Smallbone)과 월터(Friederike Walter)가 여러 체제전환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제전환국의 기업가들(중소기업인들 및 자영업자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⁸⁸ 이들의 창업 동기 중에서는 ‘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아실현’도 매우 중요하였다. 또 옛 소련과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은 사회주의 시대에 대중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인적자본 수준이 높았고, 체제전환 후에 창업한 사람들 중에는 교육수준이 특히 높은 사람들과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즉 체제전환국의 기업가들은 저소득 개도국의 기업가들에 비해 잠재적 역량이 훨씬 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에는 생계형 기업가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형 기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또 초기의 기업가 활동은 비록 수준이 낮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및 소비수준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체제전환국에서 기업가 활동의 성격과 수준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었으며 시일이 흐름에 따라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정부가 제도 개혁을 얼마나 잘 추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느냐 하는 점과 거시경제 및 대외경제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호전되느냐 하는 데 있었다. 제도 개혁이 잘 추진되고 경제 환경이 안정된 나라일수록 기업가 활동이 질적 및 양적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그 경우 기업가 활동의 중심은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 이동하였다. 반면 제도 개혁이 불충분했던 나라들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수의 기업가 활동이 비공식 부문에

⁸⁸ David Smallbone and Friederike Walter, “The Distin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6, No. 4 (June 2001); David Smallbone and Friederike Walter, “Entrepreneu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Necessity or Opportunity Driven?”

서 진행되었다.⁸⁹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성장 실적을 올린 중국은 기업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업가 활동이 얼마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중반 중국의 경제성장은 ‘향진기업(鄉鎮企業)’이라고 불리는 농촌의 중소기업들이 주도하였다. 향진기업의 대부분은 개혁·개방 이후에 새로 창업된 기업들로서 흔히 ‘집단소유제’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들 중 다수가 사실상의 사기업이었다.⁹⁰

개혁·개방 초기까지는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이 고수되고 있었고 개인 기업가는 ‘자본가’라는 딱지가 붙여져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었으므로,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을 창업하면서 사기업이 아닌 ‘집단소유제’ 기업으로 등록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가리켜 흔히 ‘붉은 모자를 쓴다’고 말하였다. 이런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등록했으므로 공식 부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 성격은 비공식적이었던 셈이다. 또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종업원 7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중국에서는 ‘개체호(個體戶)’라고 부른다)은 허용되었지만, 종업원 8인 이상의 사기업(이 경우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이라고 부른다)은 1988년 예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런데도 이미 1988년 이전에 중

⁸⁹ 윌리엄스와 라운드(John Round)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도 기업가들의 약 절반은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들의 대부분도 사업의 일부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in C. Williams and John Round,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Economy: A Study of Ukraine’s Hidden Enterprise Culture,”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 12, No. 1 (March 2007).

⁹⁰ 황야성(Yasheng Huang)은 중국의 방대한 1차 자료 및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향진기업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사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Yasheng Huang,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50~108.

업원 8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많았으며, 이들도 역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영기업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기업가들은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⁹¹

물론 이상의 논의가 비공식적인 기업가 활동만으로도 장기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내면 기업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업가 활동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이 아니라 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비공식 기업가 활동은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차선책이었지만 이런 차선책도 일정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⁹¹ 니(Victor Nee)와 오퍼(Sonja Oppen)는 중국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수많은 중소 기업들은 법률과 제도의 보호와 뒷받침이 불충분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 기업들은 스스로 비공식적인 제도와 네트워크를 만들어냄으로써 공식 제도의 공백과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Victor Nee and Sonja Oppen, *Capitalism from Below: Market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나. 북한의 비공식 기업가 활동

(1) 생계형 기업가와 사업형 기업가

북한에서도 기업가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단 기업가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즉 해당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1인 기업까지 포함하여 스스로 창업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기업가로 본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도 수많은 기업가들이 출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러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60~80%에 이르며, 비공식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비슷하게 나타난다.⁹² 그리고 비공식 활동의 주요 형태는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주된 비공식 취업 형태는 임금 노동자(일용 노동자 포함)가 아니라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가에 해당하므로 북한주민 중 기업가의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다른 저소득 개도국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가들 대부분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 번째 문제점은 북한의 기업가들 중에서 자기 사업에만 몰두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 IV-12>에서 보듯이 비공식 경제에 참가했던 북한이탈주민 중 절반 정도는 공식 경제에도 참여해야 했다고 한다.

⁹²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문헌 참조.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p. 29~38;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pp. 47~62;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pp. 58~62; 박명규 외, 『북한사회 변동 2012-2013』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p. 90~117.

표 IV-12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참여도

		비공식 경제		
		아니오	예	합계
공식 경제	아니오	78명 (8.9%)	336명 (38.4%)	414명 (47.3%)
	예	132명 (15.1%)	329명 (37.6%)	461명 (52.7%)
	합계	210명 (24.0%)	665명 (76.0%)	875명 (100.0%)

자료: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 30.

주: 1988~2009(대부분은 1997~200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북한의 공식 경제가 상당 부분 기능 부진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국영기업·기관과 협동농장이라는 경제조직 체계는 아직 살아 있으며,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들,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적(籍)만 걸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소속 단위에서 요구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의 기업가들, 즉 장사꾼들 중에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는 북한의 실제 상황보다 비공식 경제 참가자 비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농민은 도시 주민보다 장사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는데,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농민 출신자가 많지 않다. 이 점에서도 실제의 비공식 경제 참가자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북한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기업가 활동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훨씬 수준 높은 사업형 기업가가 많이 나타나야 한다. 사업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도 더 높은 기업,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올려 재투자하는 기업,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발전하는 기업, 이런 기업과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경제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개방 초기의 기업가들은 흔히 영세 자영업자(중국어로는 ‘개체호’)로 출발했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업다운 기업을 발전시켜 ‘사영기업’ 경영자가 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북한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즉 생계형 기업가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한 사람들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북한 이탈주민 중 비공식 기업에 고용되어 임금 노동자로 일해 본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다. 또 남에게 고용되어 일한 경우도 계절노동이나 ‘삿별이’ 같은 임시·일용 노동자가 대부분이며, 상시 노동자 형태로 일한 경우는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⁹³ 사업형 기업가가 많이 출현하게 되면, 기업 규모가 커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므로 비공식 경제 참가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은 떨어지고 임금 노동자 비율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세계적 경험을 보아도 사업형 기업가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발전 수준 및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자영업자 비율이 떨어지고 노동자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공식 경제 참가자들 다수가 자영업자이고 임금 노동자는 소수라면,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가 북한의 사업형 기업가 활동을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하고

⁹³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p. 42~58.

I
II
III
IV
V
VI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시 노동자로서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잘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사업형 기업가 활동이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글에서 개념적 편의상 생계형 기업가와 사업형 기업가의 이분법으로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가들의 실제 상태는 매우 다양해서 생계형 기업가들 중에서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수 있고, 생계형에서 사업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제Ⅲ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높은 수준의 사업형 기업가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도 더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인 기업 상태에서 더 발전해 가족, 친지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사업을 꾸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남에게 고용되어 비공식 임금 노동자로 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북한의 기업가들이 모두 생계형 기업가로서 제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함께 가지는 회색 성격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오늘의 북한에서는 국영기업·기관의 명, 자산, 조직을 활용하거나 국영기업·기관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기업가들, 즉 중국식으로 말해서 ‘붉은 모자를 쓴’ 기업가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⁴ 이런 기업가들은 순수 비공식 경제의 영세 자영업자들에 비해 사업 규모가 더 큰 사업형 기업가일 가

⁹⁴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pp. 288~290;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p. 123~125; 양문수, “사적 자본을 통해 본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서울: 산업연구원, 2010), pp. 202~229.

능성이 높다. 이들은 북한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 조사에서는 이런 기업가들이 과소 대표되고, 이들을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잉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심층 면접 조사,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와 전해 지는 각종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도 기업가 활동의 수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도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들이 많다.⁹⁵ 이런 신흥 부유층을 북한에서 흔히 ‘돈주’라고 부르지만, 돈주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쓰기도 한다. 돈주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금융 업자를 가리킬 때도 있고,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큰 규모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무튼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신흥 부유층이 나타났다면, 이들은 생계형 기업가가 아니라 사업형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출현한 기업가들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번 것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북한의 신흥 부자들이 비생산적인 재분배 활동, 즉 이권 추구(rent seeking) 활동⁹⁶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인가, 아니면 생산

⁹⁵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 분화.”;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3);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126~132;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pp. 513~532; “평양엔 권력형 돈주, 회령엔 장사로 돈 번 달려돈궤 아버지,” 『중앙선데이』, 125호, 2009년 8월 9일.

⁹⁶ ‘이권 추구’는 본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생겨나는 독점권과 여기서 파생되는 이권 또는 이득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떤 체제에서든 특수 이익집단 또는 개인들에 의한 비생산적 재분배 활동

I
II
III
IV
V
VI

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냐 하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신흥 부자들이 기존 엘리트층, 즉 고급 관료(당·정·군의 고급 간부) 또는 그 가족·친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비엘리트층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 가지 쟁점은 서로 연계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비생산적인 이권 추구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비엘리트층 출신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엘리트층 출신 기업가도 얼마든지 생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흥 부자들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많다.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례들은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 그 중 특히 거래 규모가 큰 도매업자들이다. 이들은 무역업이나 운수업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국에서 각종 물자를 수입해 각 지역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도매업, 무역업, 운수업은 서비스 부문의 핵심 경제 활동으로서 모두 GDP 증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또 제Ⅲ장 2절에서 살펴봤듯이, 서비스 부문 외에 농림수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같은 물질적 생산 부문에서도 제법 규모가 큰 사업형 기업가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는 공식 부문과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가들도 많지만, 그런 연계가 약해서 거의 사기업가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들의 출신 성분은 기존 엘리트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비생산적인 이권 추구 활동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권 추구는 기존의 자산 또는 남이 창출한 소득(부가가치)을 이전 받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물자를 빼돌리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을 빼돌리는 경우다. 흔히 전해지는 대로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가 수매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도시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은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량의 식량이 중간에서 빼돌려진다는 뜻이 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원조 식량 중 일부도 마찬가지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⁹⁷ 국영기업의 자재·제품이나 설비를 빼돌리는 경우,⁹⁸ 국영 무역회사에서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상부에 상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료들이 뇌물을 갈취해 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권 추구 활동에 속한다. 이런 비생산적 이권 추구 활동의 주체는 주로 기존 엘리트층인 관료들일 것이며, 이들은 단지 권력형 부자일 뿐, 사업형 기업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북한의 부유층에서 사업형 기업가와 권력형 부자 중 어느 쪽이 더 전형적인 유형일까?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재로서는 단지 양쪽 유형의 부자가 다 존재한다고 추측할 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지는 알기 어렵다. 경제성장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이 보고서의 관점에서는 생산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형 기업가들이 출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북한에서 사업형 기업가 활동은 과거 개혁·개방기의 중국에 비해서는 한결 부진할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형 기업가의 발전

⁹⁷-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p. 108~125.

⁹⁸- 『임진강』에 실린 다음 기사는 국영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를 빼돌려 파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손혜민, “몽당장사의 등에 업힌 세멘트련합기업,” 『임진강』, 제15호 (임진강출판사, 2012).

I
II
III
IV
V
VI

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상 사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은 언제든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비사회주의의 검열’에 걸려 감옥에 가거나 처형 대상이 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⁹⁹ 또 사기업 활동이 합법적이지 않으므로 사유재산권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기업가들은 큰돈을 번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재투자하지 않고 외화자산 등의 형태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 재투자를 통해 사업 규모가 너무 커지면 당국의 주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통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해야 한다는 점도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정치적·이념적 해빙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 덕분에 많은 기업가들이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의 북한에서는 사기업 활동이 훨씬 위험하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규모가 큰 기업가 활동을 하려면, 공식 경제, 즉 국영기업·기관과 모종의 연계를 맺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도 사실상의 사기업이 공식 기업(집단소유제 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 위장하는, 즉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붉은 모자’를 쓸 필요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앞에서 본 두 유형의 부자, 즉 권력형 부자와 사업형 기업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⁹⁹ 예를 들어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소식지 『입진강』 제5호에는 평안남도 순천의 유명한 기업가였던 박기원이 2007년에 처형당한 사건이 상세하게 나온다. 손혜민, “현장취재: <박기원 그 순천 사람>.”

(2) 공식 경제와 비공식 기업가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는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이 제도 개혁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활발한 기업가 활동을 가능케 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의 북한에서는 어떨까? 북한에서도 역시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이 기업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붉은 모자를 쓴 사업형 기업가들을 두 유형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영기업·기관의 경제활동 자체와는 별 상관없이 단지 명의나 자산만을 빌리는 경우이다.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한 건물 및 설비와 명의를 빌려 하위 조직 형식으로 상점, 식당, 공장, 운수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¹⁰⁰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기관이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 조직의 경제활동 일부를 하청 주는 경우다. 외화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국영 무역회사의 수출품 수집 활동, 즉 ‘월천 동원’이 흔히 이런 방식을 취한다.¹⁰¹

첫 번째 유형의 기업가 활동은 공식 부문과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회색 성격의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기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대체로 비공식 경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기업가 활동은 확실히 비공식 경제, 나아가서 경제 전체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임대 대상이 된 건물, 설비 등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유향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많고, 이런 사업에 동원되는 노동자들도 유향인력이었거나 생산성이 더 낮은 생계형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영기업·기관의 자산과 명의를

¹⁰⁰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더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림근오,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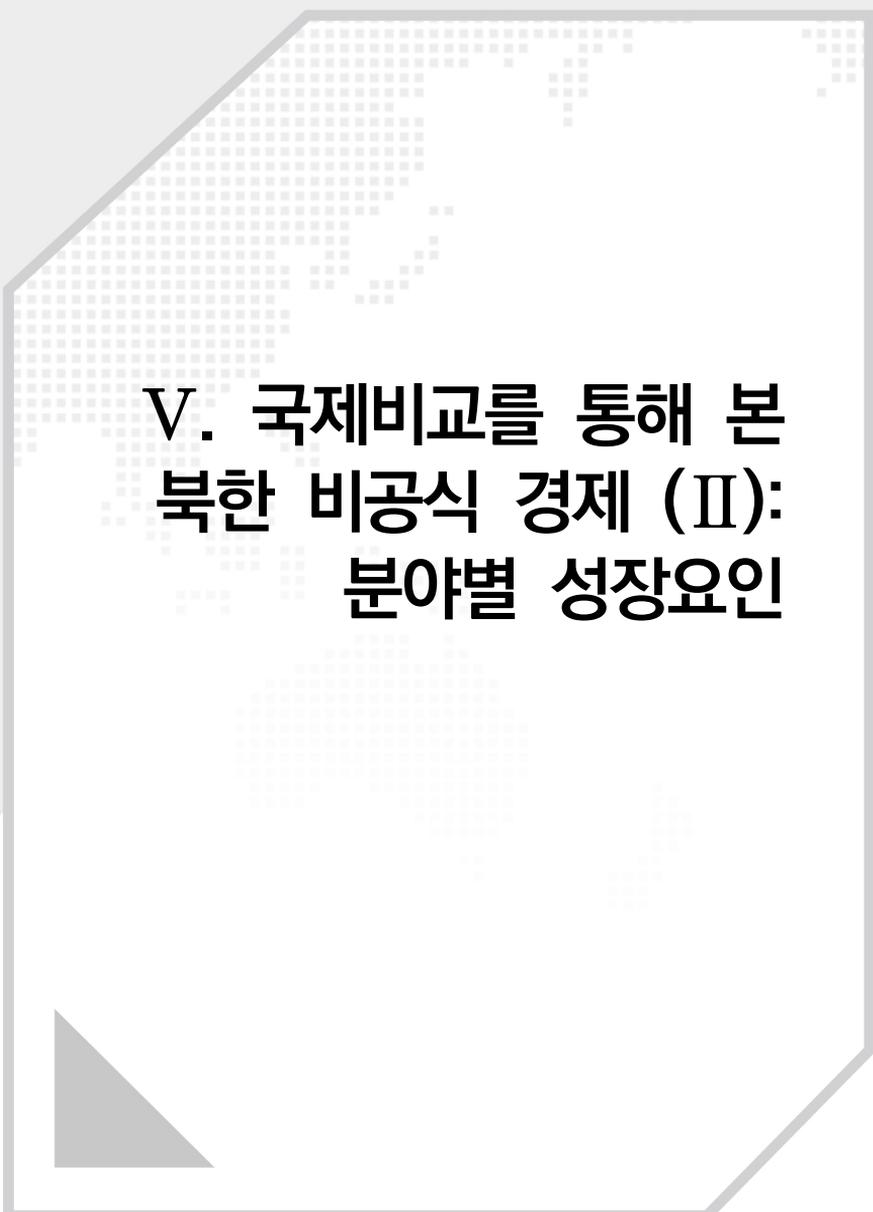
¹⁰¹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빌립으로써 유희 생산요소들을 결합하여 생산성이 더 높은 경제활동을 전개한 셈이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업가 활동은 국영기업·기관, 특히 외화벌이 무역회사의 활동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보다는 공식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진 회색 성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런 활동은 대체로 수출품 생산으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므로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¹⁰² 국영 무역회사들이 직접 자기 조직을 동원해 수출품 생산을 하지 않고 개인 기업가들에게 하청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쪽이 더 효율적으로 수출품을 생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비공식 기업가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상승하는 셈이다. 이런 활동은 우선적으로는 국영 무역회사의 외화벌이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공식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 기업가의 소득 및 여기에 동원된 비공식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에도 역시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 기업가들은 붉은 모자를 씌으로써 공식 부문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기업가 활동을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벌어들인 이익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공식 부문에 뺏기는 부분이 크다면 성장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북한처럼 경직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사회에서 붉은 모자를 써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증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기업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면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¹⁰² 수출품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제V장 1절 나항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한다.



**V.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 비공식 경제 (II):
분야별 성장요인**

1.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가. 일반적 논의와 해외 사례

(1) 사회주의국의 비공식 식품경제

먹는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식품경제는 경제활동 전체의 기초가 된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는 식품경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적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식품경제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이후에도 식품경제는 여전히 중요했고 도시로의 식품 공급과 분배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 문제를 농업 집단화, 농산물의 국가 수매, 국영 상업망을 통한 유통·분배로 해결하였다. 즉 집단농업을 통해 국가가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생산된 농산물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매하여 일부만 농민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도시 주민에게 배급하거나 또는 국영 상업망을 통해 국정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집단농장과 국가계획에 의한 공식 식품경제가 식품경제의 전부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사영 농업과 농산물 시장, 즉 비공식 식품경제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공식 식품경제는 농민과 도시 주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 주민들까지도 소규모 사경지에서 사영 농업에 종사했으며,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남는 것은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소규모 사경지 경작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지만, 농민들 중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보다 훨씬 큰

I
II
III
IV
V
VI

규모의 사경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비공식 식품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다. 소련의 경우 1974년에 농업에 투입된 총 노동시간 중 3분의 1 (경제 전체에 투입된 총 노동시간의 10분의 1)이 사영 농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 사경지의 면적은 총 경작지의 3% 정도에 불과했지만 사경지에서의 농업생산은 농업 총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⁰³ 집단농장의 공동 경작지에서는 주로 주식용 작물을 재배한 데 비해, 사경지에서는 대체로 부식용 농산물을 재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종 부식용 식품 공급에서 사영 농업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도시 주민들도 부식용 먹거리 중 상당 부분은 국영상점이 아닌 농산물 시장에서 구매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였지만, 비공식 식품경제의 비중은 정치 풍향의 변화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 중후반에 농업이 집단화되었으며, 그 직후에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라는 무리한 경제정책까지 실시함에 따라 대기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1960년대 초에 류샤오치(劉少奇)를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집단농장(인민공사)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타협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농업정책은 흔히 ‘삼자일포(三自一包)’라고 불린다. ‘삼자’란 ‘자류지(自留地)’, ‘자유시장’, ‘자부영휴(自負盈虧)’를 가리킨다.¹⁰⁴ 자류지는 사경지라는 뜻이고, 자부영

¹⁰³-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p. 25~26; Alec Nove,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7), pp. 122~126.

¹⁰⁴-중국의 바이두(百度) 백과사전 <<http://baike.baidu.com>> ‘三自一包’ 항목 참조.

휴는 이익과 손해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다. ‘일포’는 ‘포산도호(包產到戶)’로서 ‘호별 생산 청부제’라는 뜻이다. ‘포산도호’는 공산당 지도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개인농 제도로 돌아간 것이었다. 즉 1960년대 초의 농업정책은 농산물(특히 주식용 농산물)의 국가 수매와 국가 유통 제도는 유지하되 집단농업은 상당히 약화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⁵

그 결과 1960년대 중반에 사적인 농업생산은 농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¹⁰⁶ 사경지는 총 경지면적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0%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15%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마오쩌둥(毛澤東)은 1966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을 발동하면서 농촌의 ‘자발적 자본주의 경향’을 비판하고 집단주의 농업정책을 다시 강요하였다.¹⁰⁷ 사경지는 5% 이내로 제한했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으며 부식용 생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공식 식품경제가 불완전했으므로 비공식 식품경제를 아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비공식 식품경제는 주로 부식용 식품의 공급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비공식 식품경제가 확대될 때에는 주식용 농산물, 즉

¹⁰⁵- ‘삼자일포’는 1970년대 말 이후 실시된 농업개혁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70년대 말 이후의 농업개혁은 국가 수매 제도의 변화와 수매가격 인상 등의 정책이 함께 실시되었고 삼자일포 같은 현상도 훨씬 더 널리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중국의 농산물 수매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Yuk-shing Cheng and Shu-ki Tsang, “The Changing Grain Marketing System in China,” *China Quarterly*, No. 140 (November 1994), pp. 1080~1104 참조.

¹⁰⁶- Maurice Meisner,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 263.

¹⁰⁷- *Ibid.*, pp. 355~363.

I
II
III
IV
V
VI

곡물보다 부식용 농산물(축산물 포함)의 생산과 소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70년대 말 이후 중국의 농업개혁은 과거의 공식 식품경제가 해체되고 비공식 식품경제를 공식화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¹⁰⁸ 요컨대 사회주의 시대의 집단 농업 체제에서는 과도하게 주식용 작물 재배를 강조하고 부식용 농산물을 등한시했던 편향이 있었으며, 이런 편향은 시장지향적 농업개혁에 따라 비로소 정정될 수 있었다.

(2)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

저소득 개도국에서도 비공식 식품경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⁰⁹ 물론 오늘의 저소득 개도국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식 식품경제의 정의는 사회주의국의 경우와 같지 않다. 사회주의국의 경우 비공식 식품경제는 사영 농업(사경지 경작 및 개인 축산)과 사영 농산물 시장을 의미했지만,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공식 식품경제나 비공식 식품경제나 모두 사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는 사영 식품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비공식적인 경제주체들, 즉 미등록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 의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리킨다. 제II장에서 이미

¹⁰⁸ Jikun Huang, Kejiro Otsuka, and Scott Rozelle, "Agriculture in China's Development," Loren Brandt and Thomas G. Rawski (eds.),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479, Table 13.3 참조.

¹⁰⁹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에 대한 아래의 서술은 주로 FAO, *Promises and Challenges of the Informal Food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Rome: FAO, 2007)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함께 O. Argenti, S. Francois, and H. Mouawad, "The Informal Food Sector: Municipal Policies for Operators," *Food into Cities Collection*, DT/43-99E (Rome: FAO, 2003)도 참조.

살펴본 것처럼, 개도국의 비공식 부문은 좁은 의미로는 도시 비공식 부문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농촌의 소농들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공식 식품경제도 좁은 의미로는 도시의 비공식 식품경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농촌의 소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와 사회주의국의 경우, 비공식 식품경제의 정의는 다르지만 실제적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든 비공식 식품경제는 국가의 공식 제도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 생산자, 자영업자, 기업체들에 의한 각종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리킨다.

도시 비공식 식품 부문의 경제주체들은 다양하다. 먼저 소생산자들이 있다. 각종 식품의 원천인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자는 농어촌의 농어민들이지만 개도국의 도시 및 그 근교에서도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자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소상인 중에는 각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거리 음식(street food)을 파는 노점들과 소규모 식당도 식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운반·배달하는 운수업자들 중에도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의 비공식 식품가공업체들도 있다.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2000년에 조사한 바 <표 V-1>에 의하면, 개도국 주요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식품경제 종사자의 비중은 적어도 10% 이상이고 많게는 50%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도시 주민에 대한 식품 공급과 유통에서 비공식 부문이 매우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I
II
III
IV
V
VI

표 V-1 개도국 주요 도시의 비공식 식품경제 종사자 비중(2000년)
(단위: %)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식품경제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식품경제 취업자 비중
라고스 (나이지리아)	80	48	과야킬 (에콰도르)	53	32
블랜타이어 (말라위)	50	20	랑가마티 (방글라데시)	79	18
프리타운 (시에라리온)	70	28	마나과 (니카라과)	52	14

자료: FAO Survey (May 2000), O. Argenti, S. Francois, and H. Mouawad, "The Informal Food Sector: Municipal Policies for Operators," *Food into Cities Collection*, DT/43-99E (Rome: FAO, 2003), p. 22에서 재인용.

FAO가 후원한 또 하나의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 식품 공급·분배 중 비공식 부문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30% 정도 되며 50~80%나 되는 도시들도 20%를 넘는다고 한다.¹¹⁰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이 비중이 더 올라가서 도시 식품 공급·분배 중 비공식 부문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35%를 넘고, 50~80%나 되는 도시들은 25% 이상이 된다고 한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공식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가난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비공식 식품경제가 활발한 덕분에 도시 주민 전체가 비교적 값싸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비공식 식품경제는 법률과 제도 및 규제의 틀 바깥에 존재하기

¹¹⁰-Ph. Hugon and F. Kervarec, "Municipal Support Policies for the Informal Food Trade," *Food into Cities Collection*, DT/45-01E (Rome: FAO, 2001), FAO, *Ibid.*, p. 5에서 재인용.

때문에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AO에서도 개도국 정부가 비공식 식품경제를 단속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나. 북한의 비공식 식품경제

(1) 사영 농업의 확대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심각한 기근이 발생한 후 남한과 국제사회는 대규모 식량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원조는 북한이 기근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는 거의 끊겼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식량원조는 계속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다시 기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흔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 통계당국과 함께 조사한 바¹¹¹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 후에도 오히려 조금씩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런 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등이 전하는 정황 정보와도 잘 부합한다.¹¹²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식량사정이 다소나마 나아질 수 있었다면, 이는 북한 내부 식품경제의 활성화, 즉 식량 및

¹¹¹-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National Nutritional Survey 2012* (Pyongyang: CBS, 2013), p. 72.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영유아 영양상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러 국제기구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몇 년에 한 번씩 영유아 영양상태를 조사하였는데, 영양실조 영유아 비율은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¹¹²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76~81; 박명규 외, 『북한 사회 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pp. 36~44.

기타 식품 생산량의 증가 및 유통·분배의 효율성 향상 덕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¹¹³ 이러한 식품경제의 개선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북한의 사경기지 경작이 크게 확대된 것, 즉 일종의 사영 농업이 확산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소규모 사경기지 경작은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도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경기지 경작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농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집단농업에 있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대다수 농민들은 사경기지 경작의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래 합법적인 텃밭의 규모는 30~50평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농촌 출신의 탈북자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텃밭 이외에도 평균 100~300평을, 어떤 경우에는 1,000평 정도의 뚝배기를 경작”¹¹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소도시나 농촌과 가까운 노동자 지구에서 거주했던 도시 노동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도 일반적으로 사경기지 경작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작한 사경기지 면적은 “많게는 2,000평 이상에서 적게는 100평 미만까지 다양했으나 평균 1,000평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⁵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의 사경기지 면적이 협동농장 경지 면적보다 더 넓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¹⁶

¹¹³ 김석진,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pp. 44~46, 73~77에서도 이 점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와 근거를 훨씬 상세하게 보충한다.

¹¹⁴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7호 (평화문제연구소, 2007), p. 263.

¹¹⁵ 정은미, “북한 도시 노동자의 식량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도시 경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동북아경제학회, 2014), p. 271.

¹¹⁶ 회령의 송동리에서 200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동농장 경지는 230 정도인데,

이런 사경지 경작의 확대는 북한 농민들의 자생적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북한 당국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 당국은 사경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경지의 합법화와 사경지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확립을 의미”¹¹⁷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도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소토지를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토지는 흔히 매매 및 증여되고 있다.¹¹⁸

북한의 사경지 규모 및 여기에서의 농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크며 북한 농업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FAO/WFP 조사단의 2013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총 경지 규모는 약 200만 헥타르이며, 그 중 텃밭(household gardens)은 2만 5천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경사지(sloping land)’는 55만 헥타르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¹¹⁹ 그러나 FAO/WFP 조사단은 경사지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텃밭과 경사지의 생산량을 다 합해도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

공식적으로 등록된 ‘소토지’는 120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토지도 많아서 실제 소토지 면적은 250~35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사경지 비중이 높은 것은 국경 근처이며 산악 지역인 회령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 Andrei Lankov, Seok-hyang Kim, and Inok Kwak, “Relying on One’s Own Strength: The Growth of the Private Agriculture in Borderland Areas of North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9, No. 2 (2011), p. 348.

¹¹⁷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p. 271.

¹¹⁸ 정은미, “북한 도시 노동자의 식량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pp. 278~280, 295~298.

¹¹⁹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O/WFP, 2013), p. 23, Table 8. 경사지는 협동농장, 기관·기업이 경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사경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사지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사경지로서 경작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I
II
III
IV
V
VI

는다고 평가하였다. 즉 2013, 2014 양곡연도의 식량(벼, 옥수수, 기타 곡물, 감자, 콩) 총생산량은 약 600만 톤인데, 그 중 텃밭과 경사지의 생산량은 약 3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주식용 식량작물 외에 각종 부식용 농축산물까지 고려하면 사영 농업의 생산 비중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FAO/WFP 조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2013년 현재 각종 식용 가축 사육 마릿수는 1996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 비해서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¹²⁰ 또 채소, 과일 및 그 외 각종 먹거리의 생산·채취량도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식용 식량작물에서도 사경지 생산량의 비중은 FAO/WFP의 평가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옥수수나 감자, 콩 같은 식량작물도 사경지에서 경작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경지의 생산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¹²¹

북한주민들의 사영 농업이 널리 퍼져있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은 2008년에 실시된 북한 인구 센서스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센서스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채소/과일 텃밭 가꾸기’, ‘닭/가축 사육’, ‘딸감 구하기’, ‘물 길기’ 등 가내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표 V-2> 및 <표 V-3>에서 보듯이 16세 이상 인구 중 다수가 참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¹²² 또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농촌 지역의

¹²⁰- *Ibid.*, p. 24.

¹²¹- 소토지는 토질이 척박하고 경사진 곳에 많아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협동농장보다 낮지만, 농민들이 협동농장보다 소토지에서 훨씬 열심히 일하므로 토질 대비 생산성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정은이, “북한 도시 노동자의 식량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p. 275.

¹²²- 센서스 보고서의 해당 표에는 “참가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약 70%로 나와 있으나, 이 수치는 ‘텃밭 가꾸기’에 참가하는 인구 비율만 해도 56%인 것과 모순되며 표 작성 과정의 착오로 판단된다. 이 질문에서는 복수 응답이 허용되었으며, 여러

가내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가내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표 V-2 16세 이상 인구의 자가소비용 가내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텃밭 가꾸기	낚시/가축 사육	딸감 구하기	물 길기	기타
전 지역	전체	56.2	46.5	37.6	22.3	16.0
	남성	49.3	38.8	44.3	15.3	13.7
	여성	62.1	53.0	31.9	28.3	17.9
도시 지역	전체	45.4	37.0	31.4	18.2	15.5
	남성	42.6	33.0	38.8	13.7	12.7
	여성	47.8	40.4	25.0	22.0	17.9
농촌 지역	전체	73.5	61.6	47.6	28.9	16.8
	남성	60.1	48.1	53.1	17.8	15.4
	여성	84.9	73.0	43.0	38.3	17.9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p. 205~206, Table 39를 이용하여 계산.

주: “지난 6개월 동안 자가 소비를 위해 다음 중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비율임. 각 활동에 대해 “예”라고 합한 비율로서 복수 응답이 허용된 것이므로 각 항목을 합한 합계는 100%를 훨씬 초과함.

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를 모두 합하면 56%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지난 1주일 동안 가내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16세 이상 인구의 83%가 일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BS, 2009), p. 205, Table 39, p. 215, Table 41.

표 V-3 16세 이상 인구의 자가소비용 가내 경제활동 주당 투입시간 구성 비율

(단위: %)

	전 지역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일 안함	16.6	21.4	12.5	20.3	24.6	16.6	10.8	16.4	6.0
일함	83.4	78.6	87.5	79.7	75.4	83.4	89.2	83.6	94.0
0~1 시간	39.0	42.4	36.0	40.5	43.0	38.2	36.6	41.4	32.5
1~3 시간	33.8	31.0	36.2	30.0	28.0	31.8	39.9	35.9	43.3
4~6 시간	8.9	4.5	12.6	7.7	3.9	11.1	10.7	5.6	15.0
7~8 시간	1.5	0.5	2.3	1.3	0.5	2.0	1.8	0.7	2.8
9시간 이상	0.2	0.1	0.3	0.2	0.1	0.3	0.2	0.1	0.4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15, Table 41을 이용하여 계산.

주: “지난 1주일 동안 자가 소비용 가내 경제활동을 위해 몇 시간을 일했는가?”에 대한 답변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표 V-2>와 <표 V-3>에 나오는 가내 경제 활동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표 V-3>에서는 가내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는 센서스 조사 시의 질문에 “자가 소비를 위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는 많은 북한주민들은 사경지에서 기른 농산물과 집에서 기른 가축을 자가 소비할 뿐만 아니라 흔히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장 판매용 사영 농업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사영 농업에 투입하는 시간은 <표 V-3>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영 농업은 비록 북한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집단 농업 이념에 맞지 않는 비공식적 현상이므로, 센서스 조사 시 북

한주민들이 투입 시간을 축소하여 답변했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주민들이 시장 판매를 위해 사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형민은 사영 농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 시장만이 아니라 ‘큰 손’인 중간상들을 거쳐 전국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³ 회령 지역을 집중 조사한 란코프(Andrei Lankov) 등의 연구에서도 사영 농업이 초기에는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돈을 벌기 위한 상업용 작물 경작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⁴ 정은미도 “농촌의 사경지에서 나온 농산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이것은 도시 주민들의 주요 생존 식량자원”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¹²⁵

(2) 시장과 도시 식품경제

농업은 식품경제의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앞에서 농민만이 아니라 도시 주민들도 흔히 자가소비를 위한 사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사영 농업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사영 농업을 하더라도 먹거리를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시 주민들에게 어떤 경로로든 각종 먹거리가 추가 공급되어야 한다.

본래 북한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배급제도가 식품공급의 주요

¹²³-Hyung-min Joo,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 Economy in North Korea,” *Economy and Society*, Vol. 39, No. 1 (February 2010), pp. 118 ~120.

¹²⁴-Andrei Lankov, Seok-hyang Kim, and Inok Kwak, “Relying on One’s Own Strength: The Growth of the Private Agriculture in Borderland Areas of North Korea,” p. 344.

¹²⁵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p. 263.

경로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부 계층, 일부 집단에게만 선별적으로 배급이 제공되고 있으며, 보통 주민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O/WFP 조사단 보고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주민의 약 70%(즉 도시 주민)에게는 공공배급제도가 곡물의 주요 공급 채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⁶ 그러나 곡물 배급량은 목표 배급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배급량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배급 실패는 북한 당국의 주장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들은 공공 식량배급이 대다수 도시 주민들에게 기껏해야 부차적인 공급 채널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¹²⁷ 예를 들어 해거드와 놀랜드의 조사에 의하면, 기근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도시 주민들에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식품 공급 채널이었고, 그 다음은 자가 생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²⁸ 이와 달리 정은이의 조사에서는 자가 생산이 식품 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타난다.¹²⁹ 그 외의 공급 채널로는 공공 배급, 소속 기업소나 기관의 배급, 친지·친척의 도움, 물물교환 등이 있다.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시장 및 자가 생산이 주된 식품 입수 방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병연과 양문수의 조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해서 탈북 시기와 상관

¹²⁶-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29~33.

¹²⁷- 조사 대상이 된 북한이탈주민은 협동농장 농장원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 도시 주민 출신이었다.

¹²⁸-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pp. 50~55.

¹²⁹- 정은이, “북한 도시 노동자의 식량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p. 276.

없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의 식품 입수 경로에서 배급과 국영상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³⁰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권적 지위에 있는 계층과 집단에게는 여전히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고려하면, 북한의 도시 주민 전체에서 배급 및 기타 공식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특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보통 주민들에게는 공식 경제가 아니라 비공식 경제가 주된 식품 공급 채널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식량 배급을 받고 있는 계층과 집단도 주식용 식량작물 외의 각종 부식용 식품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시 시장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료품(가공식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평양, 해주, 회령 등 3개 도시지역 시장을 상세히 연구한 곽인옥의 연구에 의하면, <표 V-4>에 나타나듯이 각종 먹거리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공산품을 취급하는 상인들보다 많다고 한다.¹³¹ 이 표에 나타난 수치는 해당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에 의존한 어림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도시 주민들에게 시장이 중요 식품 공급 채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¹³⁰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 35.

¹³¹ 곽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p. 117.

표 V-4 평양 당상, 해주, 회령 등 3개 시장 상인의 취급상품별 구성 비율

(단위: %)

	평양 당상	해주	회령
공산품	45	41	43
농산물	19	16	26
축산물	5	2	4
수산물	5	20	7
식료품	27	21	22
합계	100	100	100

자료: 관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p. 117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주: 2009~2012년 기간 중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에 의존한 어림 추정치이며, 합계에 약간의 오차가 있음.

각종 식품은 도시의 시장에 어떻게 공급될까? 기본적인 방법은 도시 근교 농촌의 농민들이 각종 사경지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영세상인들이 도시 시장으로 운송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식품의 유통은 단거리만이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거래는 ‘큰 손’, 즉 대규모 도매상들이 주도한다고 한다. 협동농장 소속 농민들은 도시 시장에 팔기 위해 개인적으로 각종 부식용 농산물을 활발하게 경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닐하우스 농사까지 짓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개인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영 농업과 비공식 유통·운수업은 각종 식품의 중요 공급 채널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공식 식품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은 소규모 부업 농사와 영세 상인의 소규모 장사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도 높은 기업형 사업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소식지 『임진강』은 흥미로운 돼지 축산업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¹³² 2000년대 중반 이후 돼지 축산에서는 종축, 사육, 도살, 유통, 판매에 이르는 분업 체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고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공식 부문의 식품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주형민의 연구에 의하면, 공식 농업, 즉 협동농장 공동 경작지에서 생산된 주식용 식량작물도 일부가 시장으로 빼돌려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원조식량도 흔히 시장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¹³³

시장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음식 장사도 널리 성행하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장사는 장마당에서 국수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것이다.¹³⁴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수준도 높은 음식 장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영기업·기관 소속 건물의 일부를 빌려 사실상의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김병연·양문수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당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은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³⁵ 윤인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당 운영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식당을 꾸릴 생각을 하고 2005년에 급양관리소로 직을 옮겨 5년간 운영했다. 사회급양관리소에서 준 간판을 달고서 인근 지역에서 꽤나 큰 국수집을 경영했다. 식당 규

132. 손혜민, “생계업에서 개인기업으로 발전한 돼지 축산업,” 『임진강』, 제8호 (임진강출판사, 2010), pp. 72~91.

133. Hyung-min Joo,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 Economy in North Korea,” pp. 118~123.

134. 전형적인 사례로는 백순남,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의 장사 경험 1,” 『임진강』, 제11호 (임진강출판사, 2011); 백순남, “겨울철 국수장사 도전: 나의 장사 경험 2,” 『임진강』, 제12호 (임진강출판사, 2011) 참조.

135.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p. 123~125.

모는 8명이 앉는 테이블이 22개 정도이고 접대 1명, 카운터 1명, 주방 4명(아내 포함)으로 사장인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일했다. 사회급양관리소 식당을 시작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종의 권리금이 북한돈 800만원이었다. 또 수입에 관계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한 달에 150만원씩 일정액을 입금했다.¹³⁶

식품가공업도 비공식 식품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진강』이 보고하고 있는 ‘인조고기’ 생산·유통 실태가 흥미롭다.¹³⁷ 인조고기는 콩기름을 짜고 난 콩찌꺼기를 이용해 만든 고기 비슷한 모양과 맛을 가진 가공식품이다. 인조고기 생산업자는 국영 기업소의 한 부분을 임차해 생산기지를 꾸리고 10명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콩기름과 인조고기를 생산한다. 인조고기밥 가게는 인조고기 생산자에게서 인조고기를 받아다가 인조고기밥을 짓는다. 인조고기밥 가게에서 지은 인조고기밥은 장마당 음식장사들이 받아다가 장마당에서 판다. 이는 비공식 사기업 활동으로서 식품가공업과 음식업이 연계되어 도시 주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채널이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비공식 식품경제의 발전, 즉 사영 농업, 유통업, 운수업, 식품가공업 및 음식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의 생산, 유통, 분배가 더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각종 농수산물 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변질·손실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지고,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고,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이 제고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¹³⁶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p. 524.

¹³⁷ 채순, “인조고기밥: 민중이 만들어내고 즐겨먹는 조선의 대중음식.”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앞(제Ⅲ장 2절 (3)항 제조업 부분)에서 소개한 내용 참조.

2. 대외무역과 비공식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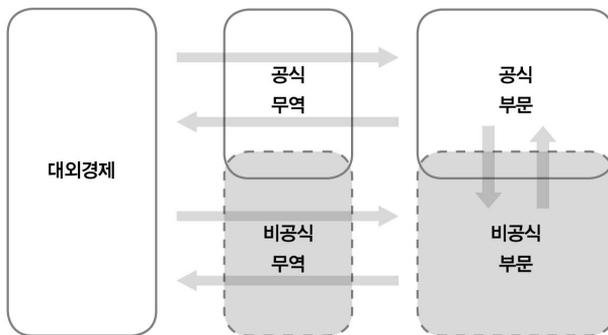
가. 일반적 논의와 해외 사례

(1) 공식/비공식 경제와 대외경제

대외무역은 비공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외무역이 확대되면 비공식 경제도 성장하게 될까? 아니면 대외무역 덕분에 공식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비공식 경제는 쇠퇴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공식/비공식 경제가 대외경제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그림 V-1>). 공식 부문의 기업들, 즉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대체로 공식 무역을 통해 대외경제와 거래한다. 그들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과하고 통계에 기록되며 무역 관련 규제를 따르고 관세를 납부한다. 반면 비공식 기업들, 즉 미등록 기업들은 대체로 비공식 무역에 종사한다. 그들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거나, 통과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무역 관련 규제를 따르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는다.

● **그림 V-1** 공식/비공식 경제와 대외경제 간 관계 개념도



자료: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하지만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겹치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듯이 공식 무역과 비공식 무역 사이에도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표 V-5>에서 보듯이 공식 부문 기업의 무역 중 일부분은 세관을 피하거나 또는 세관을 통과하되 과소 신고를 통해 비공식화되기도 한다. 반대로 비공식 기업이 공식적 절차를 거쳐 대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 경제에서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상호 거래 관계를 맺으므로, 이를 통해 한 부문의 무역 거래가 다른 부문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표 V-5 비공식 국경무역의 유형

범주 A	범주 B	범주 C
비공식(미등록) 무역업자 또는 기업이 전적으로 공식 경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	공식(등록된) 기업이 무역 관련 규제 및 관세를 완전히 피하는 경우(예를 들어 공식 국경 검문소를 피하는 경우)	공식(등록된) 기업이 무역 관련 규제 및 관세를 부분적으로 피하는 경우(예를 들어 과소 신고)

자료: Caroline Lesser and Evdokia Moise-Leeman, "Informal Cross-Border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Reform in Sub-Saharan Africa,"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86 (OECD, 2009), p. 10.

이상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대외무역은 비공식 경제에 여러 경로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⁸ 해

¹³⁸ 대외무역과 비공식 경제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 및 실증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가설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어떤 가설 하나가 옳다기보다는 여러 가설이 상호보완적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증연구 결과를 보아도 대외무역과 비공식 경제 간 관계의 방향은 뚜렷하지 않으며, 나라마다 시기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 참조. Anushree Sinha, "Trade and the Informal Economy," Marion Jansen, et al. (eds.), *Trade and Employment: From Myths to Facts* (Geneva: ILO,

외시장 수요 증가, 외교통상 관계의 변화 등 어떤 이유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공식 수출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비공식 부문 취업자가 공식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식 경제가 성장하고 비공식 경제는 위축될 수 있다. 반면 무역 자유화로 외국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비용 절감 압박을 받은 공식 기업들이 비공식 경제와의 하청 거래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비공식 경제와 비공식 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약화되어 있다면, 대외무역 확대 기회가 생겼을 때 공식 기업 내 행위자들이 일부 거래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해 세금을 회피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할 수 있으며, 비공식 기업들의 비공식 무역도 늘어날 수 있다. 공식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 및 제품 공급 능력이 증가한 공식 경제가 비공식 경제와의 거래 관계를 늘릴 수도 있다.

이처럼 대외무역은 비공식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외무역이 상당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양쪽이 모두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Ⅱ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요 저소득 개도국에서 전반적 경제성장에 따라 비공식 경제도 함께 성장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 시기는 또한 이들 국가의 대외무역이 꾸준히 빠르게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비공식 경제도 대외무역의 이득을 함께 누렸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011); Marco Fugazza and Norbert Fiess, "Trade Liberalization and Informality: New Stylized Facts," *Study Series*, No. 43 (Geneva: UNCTAD, 2010); Marilyn Carr and Martha Alter Chen, "Globalization and the Informal Economy: How Global Trade and Investment Impact on the Working Poor," *Working Paper* (Cambridge: WIEGO, May 2001).

(2)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무역

이번에는 비공식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공식 무역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보자. 비공식 경제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무역도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비공식 무역은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소득수준이 낮고 정부의 행정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더 흔히 일어난다.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무역은 얼마나 활발하며, 비공식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비공식 무역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어나며 무역통계에도 잡히지 않으므로, 그 규모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15개국)의 경우 비공식 무역의 비중은 남부 아프리카 역내 총 무역의 30~40%를 차지하며, 동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와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가나 등 15개국)에서도 역시 비공식 무역이 활발하다고 한다.¹³⁹

<표 V-6>에서 보듯이, 비공식 무역은 일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주요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주식용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 가축, 각종 광물, 목재, 수공업품, 저급 소비재 공산품 등이 주된 거래 대상이 되며, 이들 상품의 건당 거래 금

¹³⁹-Jean-Guy Afrika and Gerald Ajumbo, "Informal Cross-Border Trade in Africa: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frican Economic Brief*, Vol. 3, Issue 10 (African Development Bank, November 2012), pp. 1~13.

액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 활동 자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표 V-6 아프리카의 비공식 국경무역 거래 품목 주요 유형

지역	1차산품	공산품	재수출품	거래금액
동아프리카	식료품, 비식료품, 가축	저급 공산품	아시아산 저급 제품, 밀수품, 모조품, 저급제품	US\$ 50~1,000
서아프리카	식료품, 비식료품, 가축			
중앙아프리카	광물, 보석, 목재, 식료품, 비식료품			
남아프리카	수공업품, 식료품, 비식료품			

자료: Jean-Guy K. Afrika and Gerald Ajumbo, "Informal Cross-Border Trade in Africa: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frican Economic Brief*, Vol. 3, Issue 10 (November 2012), p. 3.

비공식 무역은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공식 무역은 관세 회피 행동이므로 해당 국가의 조세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제품 수입은 국내 공식 부문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른 한편,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부문 기업들과 소생산자들, 도소매업자들,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소득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 비공식 무역을 통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도 떨어지므로 소비자들도 대체로 이익을 보게 된다. 비공식 무역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이런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능가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비공식 무역이 저소득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¹⁴⁰

I
II
III
IV
V
VI

나. 북한의 대외무역과 비공식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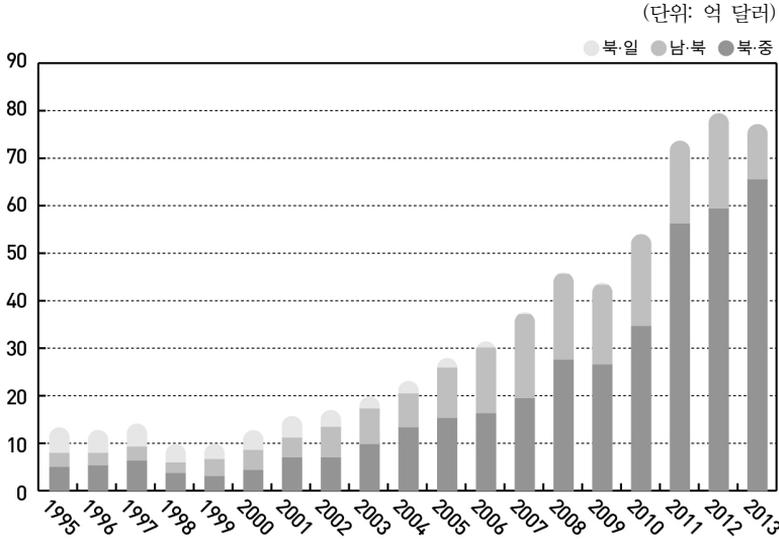
(1) 대외무역과 공식 경제의 비공식화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난 2000년대 초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한·중·일 3국과의 교역¹⁴¹은 <그림 V-2>에서 보듯이 1990년대 말 10억 달러 수준에서 2011년 이후에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대북한 제재로 2000년대 후반 북·일교역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마저 중단되었지만 북·중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은 계속 확대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에는 개성공단 교역이라는 예외만 제외하면, 사실상 북·중경협이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¹⁴⁰ 다음 자료들을 참조. *Ibid.*; Caroline Lesser and Evdokia Moise-Leeman, “Informal Cross-Border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Reform in Sub-Saharan Africa,”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86 (OECD, 2009).

¹⁴¹ 과거에 UN이나 KOTRA가 보고한 북한 무역통계는 세계 각국이 남한과의 무역을 북한과의 무역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 한·중·일 3국의 무역통계는 북한과의 무역을 대체로 정확히 보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대평가 편향을 제거하여 북한 무역통계를 재구성해 보면, 1990년대 초 이후 한·중·일 3국과의 교역은 대체로 북한 대외무역의 80% 내외를 차지했으며 기타 국가를 통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제외하면 90%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석진, “북한 무역통계: 해설과 평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편,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참조.

그림 V-2 북한과 한·중·일 3국 간의 교역 추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KOTRA, 북한무역통계;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주: 2001년 북·일교역 총액은 UN이 아니라 KOTRA 통계의 수치를 채택함.
KOTRA는 2001년 일본의 대북한 쌀 지원(50만 톤) 금액을 일본 국내가격에서 국제가격으로 재평가하였음.

북·중경협이 이처럼 활발해질 수 있었던 기본적 배경은 북한 측 요인이 아니라 중국 측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¹⁴² 고도성장을 구가한 중국의 해외 자원 수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 북한이 대중국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중국의 산업기반이 크게 확충되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를 중국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점도 중요하다.

북·중경협을 비롯한 대외무역¹⁴³ 확대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어떤

¹⁴² 김석진, “북중경협 확대 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¹⁴³ 대외경협은 대외무역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거래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영향을 미쳤을까? 앞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대외무역 확대는 공식 경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비공식 경제의 확대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는 대외무역 덕분에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 이는 원리적·이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사정이 어떠했을까? 북한 내부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대외무역은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양쪽 모두의 성장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부문의 관할 아래 있으므로 대외무역 확대는 공식 경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무역은 독점적 무역권을 가진 소수 국영 무역회사들에 의해 수행되며 중앙정부가 수립한 무역계획을 따른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여러 차례의 분권화 조치를 통해 무역권을 가진 무역회사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영기업·국가기관만이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당과 군부 등 특권적 정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⁴

이들 국영 무역회사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무역 면허 및 쿼터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자본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광산물을 비롯한 수출품 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대외무역으로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외무역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¹⁴⁴ 북한 대외무역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아래의 논의는 다음 문헌들을 참고한 것이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pp. 129~175;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pp. 635~678;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pp. 213~237.

있다. 이런 워크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당 및 여러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 중 상당 부분은 상부기관에 상납해야 하며, 상납해야 할 외화금액을 미리 계획지표로 하달 받는다. 특히 특권적 정권기관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정권 최고위층의 통치자금 및 군사비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안정적이고 좋은 수출품 생산기지는 힘 있는 무역회사들에게 배정된다. 즉 수출품 생산자와 무역회사가 연계되는 방식도 명령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비공식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비공식 경제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또는 달리 말하면 대외무역 과정에서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서로 겹치는 회색 지대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영 무역회사들은 수출품을 수집하는 과정과 수입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상인들을 흔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상인들은 해당 무역회사에 적을 걸어놓고 활동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무역회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

무역회사들이 수출품을 수집하는 과정을 북에서는 흔히 ‘원천 동원’이라고 부르는데, 직속 수출품 생산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역회사들은 원천 동원을 개인 상인들에게 위탁한다.¹⁴⁵ 개인 상인들은 자기 자금을 투자하고 자기 연줄을 이용해 원천을 동원하며, 이 과정은 대체

¹⁴⁵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pp. 149~153;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pp. 655~661;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pp. 61~74.

I
II
III
IV
V
VI

로 시장 거래와 사경제 활동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생산자도 역시 무역회사에 적을 걸고 ‘외화벌이’ 명목으로 활동하는데, 생산품 전부를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국내 시장에 팔기도 한다.

또 무역회사들은 수입품 중 일부를 국내 시장에 팔고 있다. 무역회사의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물자교류시장이 생겨나고 도매업자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물건을 도매해 전국 각지의 시장으로 공급한다. 그 결과 “무역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화벌이가 활발해질수록, 물류가 국내에 많이 유입될수록 거래가 많아지고 소비재 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¹⁴⁶ 무역회사들이 수입품 일부를 국내 상인들에게 판다는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이 ‘와크’로 상징되는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무역 규모의 축소 신고, 무역 품목의 거짓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일종의 비공식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중 상당 부분이 국가로 집중되지 않고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풀려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가치가 불안한 북한 화폐 대신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가 고액 거래를 매개하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화폐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외화통용 현상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며, 비공식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⁴⁷

¹⁴⁶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p. 662.

¹⁴⁷ 이석기·김석진·양문수,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2).

(2) 비공식 무역과 비공식 경제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공식 기업들에 의한 공식 무역 외에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⁸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 비공식 무역의 비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통제 능력이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중후반에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흔히 북·중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그 후 점차 통제가 강화되어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훨씬 어려워졌다.

하지만 순수한 밀무역은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해도 비공식 무역 전체 규모는 계속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식 무역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합법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비공식 무역의 기회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무역회사들이 일부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⁴⁹ 이런 경우는 공식 무역 회사가 수행한 거래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국가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무역에 해당한다. 또 합법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사람들, 즉 중국 상인, 북한 화교, 북한 기업 관계자, 친척 방문자 등

¹⁴⁸ 이종운·홍이경,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이석·이종규·정은이, “북중무역 과정 분석: 현지 서베이의 설계와 결과 해석,”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손수운, 『북중 변경무역 향후 전망과 시사점』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7).

¹⁴⁹ 이를 통해 “무역회사 지도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 [수산물] 100톤을 중국에 넘기기로 되어 있으나 중국 회사와 짜고 150톤을 넘기고는 100톤을 넘긴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p. 650.

많은 사람들이 허용 한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물품을 반출입하고 있고, 이 중 많은 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⁰ <표 V-7>에서 보듯이 북·중무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단동의 경우, 북한주민 방문자 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들 중 다수가 비공식 무역 거래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표 V-7 북한주민 단동 방문자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방문자 수	36,343	46,305	49,923	53,860	110,158	157,653	188,306

자료: 丹東年鑑, 각호.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경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공식 무역의 확대는 곧바로 비공식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비공식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들은 대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비공식 무역 확대는 직접적인 생활수준 향상 효과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들은 수산물, 농산물, 광산물 등 각종 1차 산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수출품은 개인 사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유통된다. 따라서 비공식 수출의 증가는 북한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증대를 의미한다. 비공식 무역을 통한 수입품은 대체로 식량, 기타 식료품 및 각종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전역의 시장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

¹⁵⁰ 이중운·홍이경,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pp. 73~74.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소비재 공산품은 주로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무역통계에서 대북한 소비재 수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중국산 소비재 중 상당 부분은 비공식 무역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공식 물자 수입의 증가는 시장 거래 확대, 유통업 및 운수업의 발달, 물가 안정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통신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

가. 일반적 논의와 해외 사례

교통·통신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필수적 수단이어서 흔히 경제의 혈맥으로 불린다. 즉 교통·통신이 발달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역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교통·통신도 발달할 수 있다.

교통·통신은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상당 부분 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맡기더라도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정부가 제구실을 못해 교통·통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는 공식 부문에서 운영되는 교통·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성장해 왔는데, 이는 전반적인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의 교통·통신 접근권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비공식 경제는 교통·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

I
II
III
IV
V
VI

(1) 비공식 교통 서비스의 역할

저소득 개도국은 교통 인프라가 부실하며 수송기기도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표 V-8>에서 보듯이 저소득 개도국들의 인구 1천 명당 자동차(이륜차 제외) 보유대수는 대체로 30대 이하이고, 심지어 10대에 못 미치는 나라들도 꽤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500~1,000대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 개도국들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¹⁵¹ 또 전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교통수단과 부실한 공공 교통체계의 틈을 메우고 있는 것은 비공식 교통 서비스이다.¹⁵² 많은 개도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비공식 운수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개도국의 개인 운수 사업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식 교통체계와 상관없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부문에 속한다. 이들은 대체로 저렴한 자동차를 이용해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¹⁵¹ 다르케이(Joyce Dargay) 등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소득수준은 선형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최빈국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고, 소득수준 증가 속도보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속도가 더 느리다. 하지만 최빈국에서 벗어나 중진국에 접어들게 되면, 자동차 대수가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Joyce Dargay, Dermot Gately, and Martin Sommer, "Vehicle Ownership and Income Growth, Worldwide: 1960~2030," *The Energy Journal*, Vol. 28, No. 4 (January 2007).

¹⁵² 이하 개도국의 비공식 교통에 대한 서술은 다음 문헌의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Robert Certero, *Informal Transport in the Developing World* (Kenya Nairobi: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2000); Robert Certero and Aaron Golub, "Informal Transport: A Global Perspective," *Transport Policy*, Vol. 14, Issue 6 (July 2007); Laetitia Dablanc, *Freight Transport for Development Toolkit: Urban Trans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표 V-9>에서 보듯이 비공식 교통은 소득수준이 낮고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더 활발한 경향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제법 높은 중진국 중에도 비공식 교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있다.

● 표 V-8 주요 저소득 개도국 인구 1천 명당 자동차 수

(단위: 대)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방글라데시	-	2.1	2.3	2.5	2.9	-
캄보디아	18.3	19.4	21.3	-	-	-
카메룬	-	-	17.7	18.3	18.8	-
에티오피아	1.7	2.0	-	3.0	-	-
가나	-	21.4	16.6	34.0	29.8	-
인도	9.9	11.6	13.4	-	17.6	-
케냐	16.2	16.9	18.0	19.9	22.7	24.7
네팔	-	-	-	5.2	-	7.1
나이지리아	-	-	-	31.0	-	-
미얀마	5.4	5.5	5.7	6.2	6.8	7.2
탄자니아	-	-	-	3.6	4.5	-
르완다	-	-	-	7.4	-	-
우간다	-	-	5.8	6.6	7.8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주: 이륜차는 제외.

I

II

III

IV

V

VI

표 V-9 주요 개도국 대도시의 대중교통(여객수송) 분담 비율

(단위: %)

	공식 교통	비공식 교통		공식 교통	비공식 교통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비장(1998)	37	67	멕시코시티	27	73
알제(2004)	6	94	아시아		
카이로	48	52	자카르타	66	34
케이프타운	74	26	마닐라	24	76
다카(2003)	5	95	테헤란	44	56

자료: X. Godard, "Coping with Para-transit in Developing Countries: A Scheme of Complementarity with Institutional Transport," *paper presented at Future Urban Transport Conference* (Gothenberg, Sweden, 2006), Robert Cervero and Aaron Golub, "Informal Transport: A Global Perspective," *Transport Policy*, Vol. 14, Issue 6 (July 2007), p. 447에서 재인용.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에 대한 접근권이 부족한 비공식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원활유 역할을 한다. 개도국에서는 화물 수송을 전문 운수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비공식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송하는 경우가 더 흔한데, 이것 역시 비공식 교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또 비공식 교통은 주로 도로 수송 부문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비공식 교통은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공식 교통이 간선 교통을 담당한다면, 비공식 교통은 지선 교통을 담당한다. 또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보다 교통수단과 서비스 내용이 훨씬 다양하고 신축적이다. 이런 점에서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공식 교통은 절실한 교통 수요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개도국의 공식 교통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교통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비공식 교통은 개인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이며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훨씬 효율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뛰어나다.

셋째, 비공식 교통은 그 자체가 비공식 경제의 일부로서 상당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효과를 갖는다. 개도국에서는 공식 교통보다 비공식 교통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흔하고, 운수업 취업자(사업자 및 노동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비공식 운수업에 종사한다.¹⁵³ 비공식 부문 취업자 중에서 운수업 종사자의 비중은 10% 전후이다.

물론 비공식 교통에는 여러 단점도 있다. 비공식 교통은 정부의 규제 바깥에서 활동하므로 사고 위험과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하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에서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동전화와 비공식 경제

최근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 그 중 특히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이다. 과거에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네트워크 설치비용 및 통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전력망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¹⁵³Chris Bonner, *Organizing Informal Transport Workers: Overview Report* (London: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2006).

그런데 아래 <표 V-10>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 최빈국들에서도 이동전화의 보급이 빠르게 시작됐다. 이동전화는 유선 네트워크가 필요 없고 일정 지역을 커버하는 기지국 장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건설이 훨씬 쉽다. 또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충전만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표 V-10 주요 저소득 개도국의 이동전화 보급률 추이

(단위: 총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방글라데시	1.0	6.3	23.5	34.4	55.2	67.1
캄보디아	3.9	8.0	18.8	44.3	94.2	133.9
카메룬	6.3	12.4	23.8	39.8	49.6	70.4
에티오피아	0.1	0.5	1.5	4.8	15.8	27.3
가나	3.9	13.4	33.8	63.8	85.3	108.2
인도	3.1	8.0	20.2	44.1	73.2	70.8
케냐	4.7	12.9	30.1	48.6	66.8	70.6
네팔	0.3	0.9	12.6	21.1	49.2	71.5
나이지리아	2.4	13.3	27.4	48.0	58.0	73.3
미얀마	0.1	0.3	0.5	1.0	2.4	12.8
탄자니아	3.5	7.6	20.1	40.0	55.4	55.7
르완다	1.4	2.4	6.4	23.1	39.9	56.8
우간다	2.9	4.6	13.7	28.6	47.5	44.1
북한	0.0	0.0	0.0	0.3	4.1	9.7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이동전화는 당초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보급되었지만 기술 발달에 따라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장비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된 반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여 이제는 개도국의 소득수준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이 최빈국의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빈국에서도 이동전화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동전화는 비공식 경제에서는 더욱 요긴하게 사용된다.¹⁵⁴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중진국, 선진국보다 개인사업자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기업가들이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없어 비공식 기업가들은 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이동전화의 급속히 보급되면서 비공식 비즈니스에서도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V-11>는 2011~2012년에 아프리카 주요국 비공식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목적 통신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 비공식 기업가들이 유선전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동전화는 일반적으로 사용하

¹⁵⁴ 이동전화의 개도국 경제 및 비공식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Jenny C. Aker and Isaac M. Mbiti, "Mobile Ph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4, No. 3 (summer 2010); Mariama Deen-Swaray, Alison Gillwald, and Ashleigh Morell, "Lifting the Gender Veil on ICT Indicators in Africa," *Policy Paper*, No. 13 (University of Cape Town: Research ICT Africa, 2012); Mariama Deen-Swaray, Mpho Moyo, and Christoph Stork, "ICT Access and Usage among Informal Business in Africa," *Info*, Vol. 15, No. 5 (2013); Deloitte LLP, "What is the Impact of Mobile Telephony on Economic Growth?," *A Report for the GSM Association* (November 2012); Christine Zhen-Wei Qiang, "Mobile Telephony: A Transformational Tool for Growth and Development,"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Issue 4 (November 2009); 홍일선, "모바일 혁명이 아프리카를 바꾼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1).

I
II
III
IV
V
VI

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전화는 여성 기업가보다는 남성 기업가가, 그리고 생계형 기업가보다는 사업형 기업가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성과 생계형 기업가들의 이용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동전화 보급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거의 모든 최빈국의 비공식 기업가들 대부분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V-11 아프리카 주요국 비공식 기업가 중 비즈니스 목적의 전화 사용자 비율

(단위: %)

	유선전화 사용자 비율					이동전화 사용자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사업형 기업가	생계형 기업가	전체	남성	여성	사업형 기업가	생계형 기업가
우간다	6.9	8.0	6.1	11.5	1.5	67.9	68.9	63.9	67.4	68.5
탄자니아	1.0	1.7	0.0	0.8	1.1	44.4	46.6	39.8	46.0	43.2
르완다	1.3	1.2	2.0	2.2	0.5	53.4	54.5	44.9	43.0	61.9
에티오피아	0.3	1.8	0.4	0.5	0.3	12.3	46.4	3.2	19.6	11.1
가나	0.7	1.4	0.2	1.4	0.1	44.9	57.3	35.7	57.3	34.5
카메룬	1.3	0.6	0.3	1.7	1.0	56.2	68.0	40.9	61.7	52.4
나이지리아	0.2	0.2	0.1	0.1	0.3	44.2	57.3	37.2	57.2	35.2
나미비아	4.1	5.9	2.7	5.1	3.7	51.9	60.5	45.3	74.6	44.8
보츠와나	3.0	1.0	1.6	4.5	1.9	44.9	51.1	37.6	47.2	43.3

자료: Mariama Deen-Swaray, Alison Gillwald, and Ashleigh Morell, "Lifting the Gender Veil on ICT Indicators in Africa," *Policy Paper*, No. 13 (Research ICT Africa and University of Cape Town, 2012),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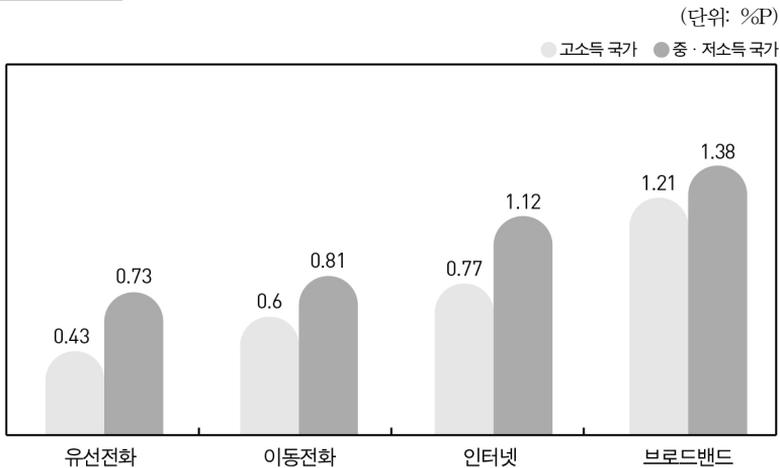
주: ① 연구기관 Research ICT Africa가 2011~2012년 중에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② '사업형 기업가'는 'pull factor'에 의한 기업가를 의미하며, '생계형 기업가'는 'push factor'에 의한 기업가를 의미함.

이동전화 보급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은 경제성장에 플러

스 효과를 미치며,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림 V-3>에서 보듯이 이 연구에서 이동전화 보급률 10% 포인트 상승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을 0.6% 포인트, 개도국에서는 0.81%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3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성장 효과



자료: Christine Zhen-Wei Qiang, “Mobile Telephony: A Transformational Tool for Growth and Development,”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Issue 4 (World Bank, November 2009), p. 8.

주: 각 통신기술 보급률이 10% 포인트 상승할 때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

또 다른 연구¹⁵⁵에서는 1995~2010년의 15년간 74개 개도국 데이터를 이용해 이동전화 이용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이동전화 보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생산성 상승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보급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동전화 보급률 10% 포인트 상승이 장기적으로

¹⁵⁵-Deloitte LLP, “What is the Impact of Mobile Telephony on Economic Growth?.”

10% 이상의 생산성 상승효과를 가져왔고, 조사 대상 개도국 전체 평균으로는 4.2%의 생산성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동전화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상승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점, 비공식 비즈니스에서 이동전화의 사용이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동전화의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와 교통통신

(1) 비공식 교통의 확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교통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교통 사정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까?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 북한의 교통은 철도 중심이었으나 전력 공급 부족과 철도시설 및 기차의 노후화로 인해 철도 교통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철도 교통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북한의 교통에서 도로 교통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의 교통 사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려면, 먼저 자동차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¹⁵⁶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주로 일본에서 자동차를 수입했으나 일본의 대북한 제재로 북·일교역이 중단되어 그 후로는 주로 중국

¹⁵⁶ 대북 투자 기업인 평화자동차가 2006년부터 북한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체로 수입 부품을 최종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생산대수도 소규모이다.

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해 자동차 생산·수출 능력이 크게 강화된 덕분에 북한은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의 자동차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표 V-1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수입이 특히 활발해 연간 수입 대수가 1만 대를 넘겼지만, 과거에도 수입 규모는 상당해 연간 1만 대를 넘거나 근접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일본에서 수입된 자동차 중 상당 부분은 북한 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⁷ 반면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거의 전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수입처 전환은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수입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수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화물 및 여객 수송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I

II

III

IV

V

VI

¹⁵⁷ “일확천금 노리는 중고자동차 밀무역,” 『NK조선』, 2001년 10월 24일;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 체제변동의 정치경제』, pp. 114~115 참조.

표 V-12 북한의 대중국 및 대일본 자동차 수입 대수 추이
(1992~2013년)

(단위: 대)

	대중국 수입 대수				대일본 수입 대수				총계
	승용차	버스	트럭	소계	승용차	버스	트럭	소계	
1992	38	10	206	254	1,682	79	239	2,000	2,254
1993	26	14	286	326	8,989	110	387	9,486	9,812
1994	29	15	184	228	493	40	551	1,084	1,312
1995	16	27	203	246	2,514	85	474	3,073	3,319
1996	52	107	845	1,004	3,823	164	583	4,570	5,574
1997	723	107	1,369	2,199	6,854	207	792	7,853	10,052
1998	248	15	703	966	4,119	195	1,185	5,499	6,465
1999	21	6	465	492	4,681	135	1,263	6,079	6,571
2000	1,529	337	770	2,636	7,804	286	1,334	9,424	12,060
2001	629	233	677	1,539	5,040	276	1,550	6,866	8,405
2002	23	14	955	992	5,287	254	1,943	7,484	8,476
2003	65	38	1,401	1,504	1,456	231	2,672	4,359	5,863
2004	146	83	2,181	2,410	2,500	280	3,406	6,186	8,596
2005	244	89	2,446	2,779	1,506	485	3,297	5,288	8,067
2006	582	286	1,996	2,864	1,468	501	2,935	4,904	7,768
2007	684	546	3,312	4,542	-	48	213	261	4,803
2008	980	437	1,551	2,968	-	1	-	1	2,969
2009	2,773	330	3,111	6,214	-	-	-	-	6,214
2010	3,183	934	4,015	8,132	-	-	-	-	8,132
2011	3,413	685	5,894	9,992	-	-	-	-	9,992
2012	3,599	879	6,788	11,266	-	-	-	-	11,266
2013	3,860	946	6,381	11,187	-	-	-	-	11,187
합계	22,863	6,138	45,739	74,740	58,216	3,377	22,824	84,417	159,157

자료: UN Comtrade Database 및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주: 자동차(HS 87) 중에서 트랙터(HS 8701)와 특수용도차량(HS 8705)은 제외한 수치임.

북한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러 정보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비공식 교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흔히 ‘서비차’(또는 ‘씨비차’)라고 불리는 화물차 및 기타 차량이 대표적인 비공식 교통수단이다.¹⁵⁸ 서비차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국영기업·기관에 소속된 차량이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차비를 받고 사람과 화물을 운반해 주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상품들이 이런 서비차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서비차를 통한 비공식 운수업은 처음에는 늘고 있는 기업·기관 소속 차량들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요가 늘어나 돈벌이가 되자 흔히 ‘돈주’라고 불리는 사업가들이 기업·기관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인 운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기업·기관에 등록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해당 기업·기관에 상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개인이 갖는 방식이다. 즉 북한의 비공식 운수업은 공식 부문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도국의 비공식 운수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시외버스 교통망이 발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별이 버스’들이 열차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다녀 교통난을 풀어주고 있다. …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이 교통망은 2000년대 초에 돈 있는 개인들이 별이 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한다.¹⁵⁹ 북한이탈주민

¹⁵⁸ “북 씨비차란 무엇인가? 주민경제의 동맥,” 『데일리NK』, 2010년 10월 26일; “신부 유증 돈주 군 간판 걸고 운수회사 운영,” 『데일리NK』, 2011년 8월 16일;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호 (2006년 9월 17일), 3호 (2006년 9월 21일), 261호 (2009년 1월 13일) 등 참조.

¹⁵⁹ “개인 운영 ‘별이 버스’ 북한 만성 교통난 해소,”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6월 2일 보도. 과거에 장거리 버스 사업이 국영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영회사 형식으로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3년에 보안성이 베이징(北京)의 한 운송회사와 합작으

들도 서비차와 시외버스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흔히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북·중 무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트럭 및 버스 수입 증가 추세와 잘 부합한다(<표 V-12>). 이상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공식 교통 대신에 개인 사업자에 의한 비공식 교통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공식 교통의 발전은 비공식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간주할 수 있다.

(2) 이동전화의 보급과 비공식 경제

최근의 북한경제에서 가장 주목을 끈 현상 중 하나는 이동전화의 빠른 보급이다. 이동전화는 1990년대에 선진국에서 먼저 보급되기 시작한 데 이어, 2000년대 중후반에는 최빈국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세계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수단이 되었다. 북한도 2000년대 말부터 뒤늦게나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¹⁶⁰

북한은 2002년에 태국 록슬리사(社)의 투자를 받아 평양과 나진·선봉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후에는 중국 이동전화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중 무역거래 및 기타 용도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와 평양 등 일부 지역

로 평양 운림운송합영회사를 설립해 장거리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6호, 2006년 9월 21일. 그러나 최근에 전해지는 바로는 장거리 버스는 개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¹⁶⁰ 이하 북한의 이동전화 도입 경위 및 보급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되었는가?”, 『특별 보고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미국의 소리(VOA), 2014);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에서 일부 외국인 거주자들끼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 내부 경제에서는 이동전화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은 유선전화 보급률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통신 사정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은 2008년에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이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라스콤과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는 각각 75%와 25%의 지분으로 합작회사 ‘체오(CHEO)’를 설립하고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부터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동전화 네트워크 설비 및 휴대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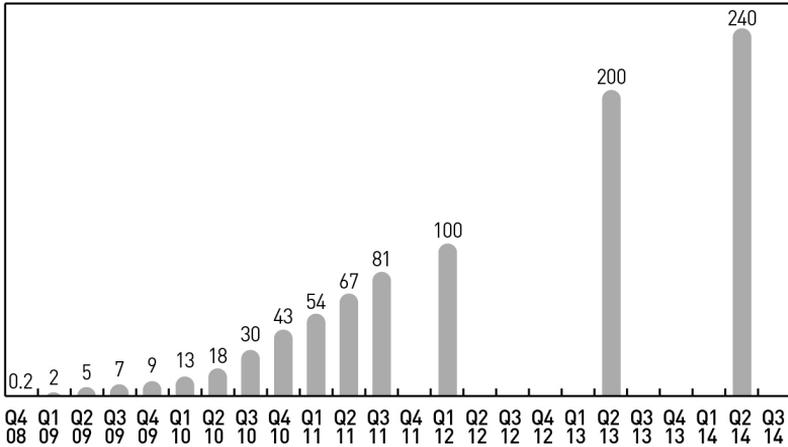
오라스콤의 발표에 따르면, 고려링크 가입자 수는 <그림 V-4>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3분기에 30만 명, 2012년 1분기에 100만 명, 2013년 2분기에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4년 6월 말에는 2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2014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는 약 2,460만 명이므로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률(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은 10% 정도에 이른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가입자 수가 이렇게 많을 수 없으므로 오라스콤의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표 V-10>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아프리카 최빈국들에서도 대부분 이동전화 보급률은 50~100%에 이른다. 이동전화는 최빈국의 소득수준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오히려 최빈국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통신수단이다. 북한도 뒤늦게나마 이런 최신 추세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동전화는 다른 최빈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I
II
III
IV
V
VI

◀그림 V-4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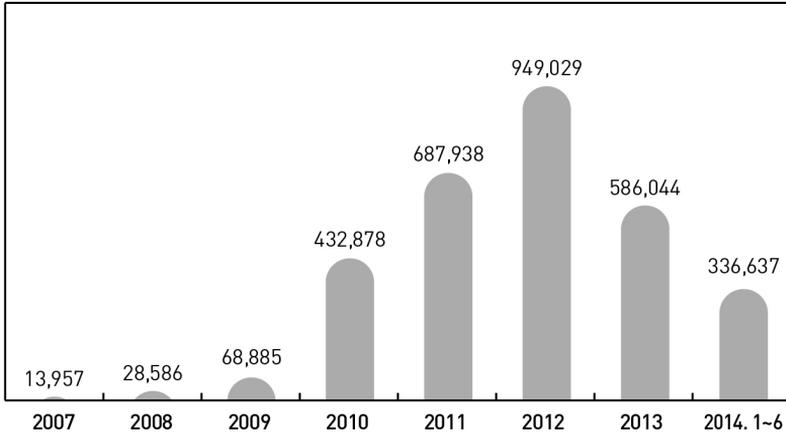
자료: Orascom Telecom, 2008~2011 Earnings Press Release; OTMT Press Releases,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 50;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되었는가?,” 『특별 보고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미국의 소리(VOA), 2014), p. 12; North Korea Tech, “Koryolink Subscriptions Hit 2.4 Million,” (September 8, 2014)에서 재인용.

주: 각 분기 말 기준(단, 100만 명 돌파는 2012년 2월, 200만 명 돌파는 2013년 5월).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 실태는 <그림 V-5>에서 보듯이 북·중 무역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대중국 휴대폰 수입 대수는 201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의 수입 대수 누계는 약 300만 대 정도이다. 이 중 일부는 대체수요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 대수 통계는 오라스콤이 발표한 가입자 수 통계와 잘 부합한다.

그림 V-5 북한의 대중국 휴대폰 수입 대수 추이

(단위: 대)



자료: UN Comtrade Database (2014년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주: 휴대폰의 품목 코드는 HS 85171210.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려링크 이동통신망은 북한의 거의 전 지역, 즉 대부분의 도시와 주요 도로 및 일부 농촌에까지 설치되었다.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3분기 말 현재 고려링크 이동통신망은 북한 영토의 14%를 커버하며, 해당 지역에는 북한 총인구의 94%가 살고 있다고 한다.¹⁶¹ 즉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북한 방문자들이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했는데, 이로 보아 오라스콤의 발표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의 보급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조사

¹⁶¹- 김연호, 위의 글, p. 11.

- I
- II
- III
- IV
- V
- VI

한 김연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장마당의 도소매 상인들은 시장 정보를 전례 없이 빠르게 수집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물건이 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전화상으로 흥정을 끝내는 일이 많아졌다. … 휴대전화는 장거리 장사꾼들(속칭 ‘달리기 장사꾼’)에게도 편리한 통신수단이 됐다.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만날 필요 없이 가격과 수량뿐만 아니라 운송과 배달 방법까지 전화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소비자들 역시 … 덕을 보고 있다. 이동통신망을 통해 장사꾼들은 각 지역의 가격 차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결국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 휴대전화는 북한의 사적 송금체제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신의주의 도매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기차로 평양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다고 하자. 평양의 도매상은 이 물건을 받아 지역 장마당 상인들에게 팔고 판매대금을 평양의 ‘이관집’(‘돈주’가 운영하는 송금집)을 통해 신의주의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다. … 신의주의 도매상은 [신의주의] 이관집에서 이 돈을 받고, 평양의 거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수취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관집 들끼리는 별도의 청산 시스템이 있으며 물건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송금 서비스도 해준다.¹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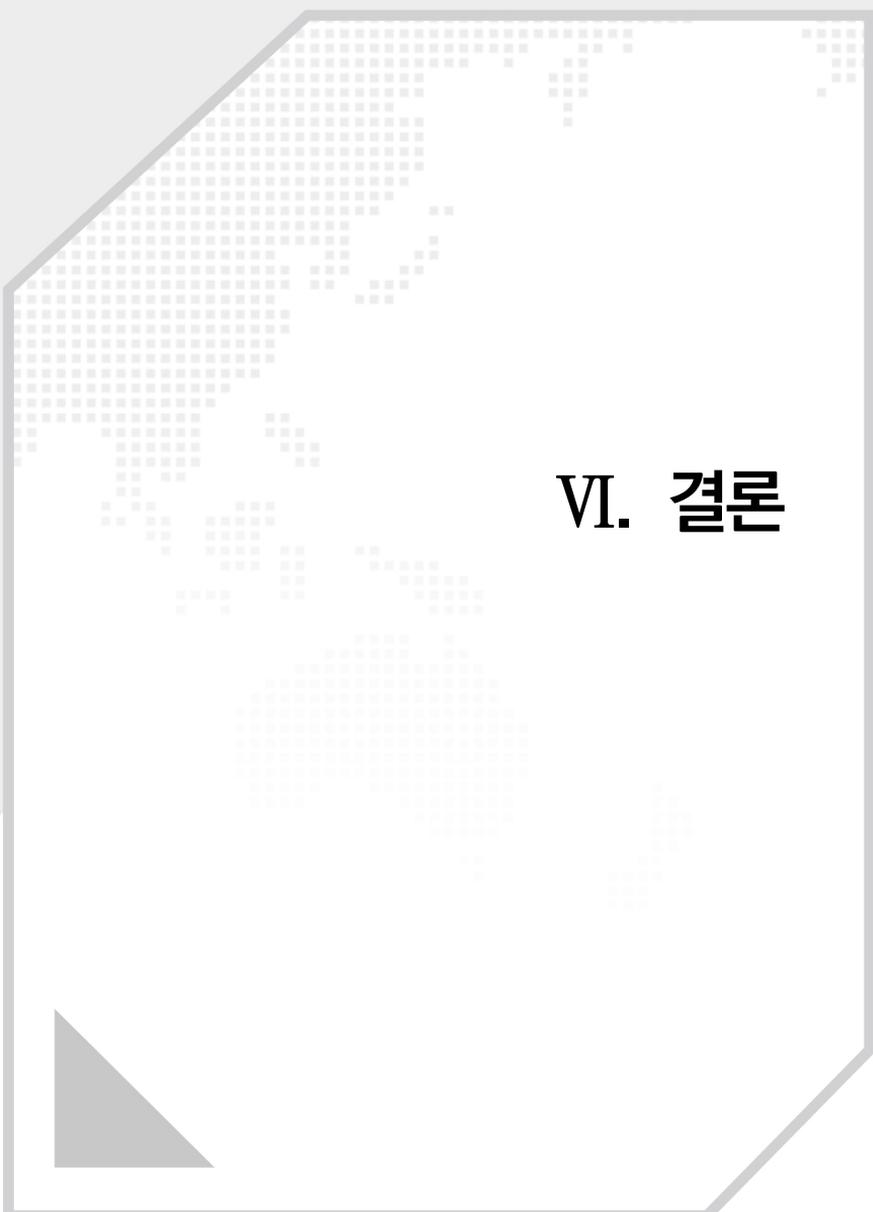
북한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이동전화 매입 대금과 통화 요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도 이동전화의 급속히 보급된 것은 대다수 주민의 생계 수단인 비공식 경제에서 이동전화의 이처럼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¹⁶³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동전화의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갖는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제품의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¹⁶² 김연호, 위의 글, pp. 29~31.

¹⁶³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동전화의 신분의 상징이자 부의 표시이고 과시성 소비의 전형적인 예라는 것이다. 김연호, 위의 글, p. 13.

현상을 말한다. 이동전화도 사용자가 많을수록 유용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즘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는 “손전화 없이는 장사를 못한다”¹⁶⁴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정을 가리키고 있다. 이동전화의 보급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북한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통업과 운수업을 비롯해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가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¹⁶⁴ “손전화 없으면 장사 못함네다,” 『시사저널』, 1264호, 2014년 1월 8일.



VI. 결론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의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는 심각한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 북한주민들은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했지만, 그 대신 기본적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식량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많은 국영기업들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국가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야 했다.

북한주민들의 이런 노력은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 불충분하나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러 정보와 자료를 종합해 보면, ‘비교적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에서는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이 꾸준히 출현·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느리게나마 개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북한경제 연구 문헌에서는 이런 변화를 ‘시장화’로 개념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화’ 대신에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시장 대신에 비공식성을 중심 개념으로 삼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자원배분 메커니즘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경제주체의 소유제적 성격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 합치하는 국영기업, 국가기관, 협동농장의 활동은 공식 경제에 속하며, 사경제·사기업 활동은 비공식 경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거래를 활용하는 국영기업의 활동은 시장화 현상이고 시장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경제주체의 소유제적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에

I
II
III
IV
V
VI

서 보면, 국영기업의 활동은 시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식 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활동은 사경제·사기업 활동이든 시장 활동이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아직 한참 미달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활동은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경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 경제는 옛 사회주의국(체제전환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에 이러한 비공식 경제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공식 경제는 사경제·사기업 활동이고 대체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이행을 보호받지 못하므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공식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의 생계형 활동이 전형적이었으며, 이런 후진적인 부분은 경제개혁에 따라, 즉 공식 법률과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전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사라져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공식 경제는 단지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최근 20~30년 동안 많은 저소득 개도국이 과거보다 양호한 성장실적을 달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좋은 성장실적을 보였다. 북한의 경우에도 비공식 경제는 대체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보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중요한 제약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은 기본적 요인과 분야별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본적 성장요인은 서비스 주도 성장과 기업가 활동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서 서비스 주도 성장이 나타났는데,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서비스 부문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서비스업 비중 상승이라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간 것이다. 비공식 경제활동이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활발한 것은 비공식 경제의 전형적인 주체인 소규모 사기업(1인 기업 포함)이 가장 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 부문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공식 경제의 붕괴로 실질적 실업 상태에 놓인 많은 주민들이 도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사경제 활동을 개척하였으며, 그 결과 농림어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여타 부문에서도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흔히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유통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서비스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이다. 유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경제적 복지와 GDP의

I
II
III
IV
V
VI

증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며, 다른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둘째,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중요 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기업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였다. 비공식 기업가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더 수준 높은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비공식 경제에 뛰어들어 많은 북한주민들도 스스로 창업해 자기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업가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소수는 사업형 기업가로 성장해 신흥 부유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서는 공식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정치적 억압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사업형 기업가들은 공식 부문의 국영기업이나 관료기구와 연계하여 ‘붉은 모자’를 쓰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의 사기업이 ‘붉은 모자’를 쓰고 공식 기업처럼 위장하는 관행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

이상의 두 가지 요인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촉진하였는지를 주요 분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중요한 분야별 성장요인으로는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확대, 교통·통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과 식량배급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대다수 농민과 상당수 도시 주민들은 사경지(텃밭, 패기밭, 다락밭 등)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영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포함)은 비공식 유통업

자들과 운수업자들에 의해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비공식 식품가공업과 음식숙박업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활동 전체를 가리켜 비공식 식품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보통 주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대외무역 확대도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북한의 경우 대중국 무역이 대외무역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대중국 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북·중무역이 증가세를 보인 기본적 이유는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은 공식 기업에 의한 공식 무역과 비공식 기업에 의한 비공식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경제에 속하지만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비공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공식 무역은 국영 무역회사만이 할 수 있고 국가계획이나 수출입 면허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국영 무역회사들은 수출품 생산과 수집 과정에서 사실상 사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수입품 중 일부를 비공식 유통업자들을 통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비공식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비공식 무역과 국내 비공식 경제는 상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통·통신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소득 개도국과 북한의 비공식 경제도 현대적 교통·통신수단의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교통 측면을 보면, 저소득 개도국과 북한

I
II
III
IV
V
VI

에서는 공식 교통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비공식 운수업자들이 출현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서비차’로 불리는 트럭 및 각종 차량이 비공식 거래를 매개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200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개인 기업가들에 의해 장거리 시외버스 네트워크까지 발전하여 여객과 화물 수송에서 중요한 진전이 나타났다. 또 선진국에서 발명·보급된 이동전화는 최근에는 세계 최빈국에도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 기업가들에게 요긴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2008년 이후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투자로 전국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이동전화 시대가 열렸으며, 비공식 경제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 및 요인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북한경제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력과 창조력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공식 제도와 이념, 그리고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만 살펴보아서는 북한경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북한 당국이 충분한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공식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조해내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아래로부터 일어난 보통 사람들의 자생적 활동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둘째, 북한경제를 분석할 때, 대외적 요인만이 아니라 대내적 요인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통념은 대내적 요인에 비해

대외적 요인을 과도하게 더 증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한과 중국을 비롯한 외부 사회가 북한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대외적 요인은 중요하며, 외부의 행위자들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체적인 변화와 성장의 동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셋째, 이 보고서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추세를 특별히 강조하였지만, 새로운 경제활동이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성장 전망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비공식 부문만이 아니라 공식 제도와 이념에서도 충분한 개혁이 뒤따라야만 고도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변화는 과거보다 양호한 실적을 낼 수 는 있지만 장기적 고도성장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넷째, 비공식 경제로 대표되는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공식 경제는 공식 제도와 이념, 정책에서 벗어나는 활동으로서 북한 권력집단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 점에서는 체제 기반을 침식하는 작용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의 성장 덕분에 민생 경제가 안정됨으로써 체제 안정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비공식화 과정은 장기적으로는 체제 변화의 중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부터 조만간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이 유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I
II
III
IV
V
VI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김석진·이석기·김계환·이두희.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서울: 산업연구원, 2008.
-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명규 외. 『북한 사회 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손수윤. 『북중 변경무역 향후 전망과 시사점』.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7.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0.
- _____.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교육원, 2013.
- 이 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이석기·김석진·김계환·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 이석기·김석진·양문수.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2.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종운·홍이경.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 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0.
- 조정아·김영운·박영자.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Baumol, William J., Robert E. Litan, and Carl J. Schramm. *Good Capitalism, Bad Capitalism, and the Economics of Growth and Prosper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Bonner, Chris. *Organizing Informal Transport Workers: Overview Report*. London: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2006.
- Cervero, Robert. *Informal Transport in the Developing World*. Nairobi Kenya: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2000.
- Dablanc, Laetitia. *Freight Transport for Development Toolkit: Urban Trans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 Ellman, Michael. *Socialist Planning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FAO. *Promises and Challenges of the Informal Food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Rome: FAO, 2007.
- Gregory, Paul R.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Haggard, Stephen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Hewett, Ed A.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8.
- Huang, Yasheng.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ILO.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second edition)*. Geneva: ILO, 2012.
- _____. *Measuring Informality: A Statistical Manual on the Informal Sector and Informal Employment*. Geneva: ILO, 2013.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8.
- Meisner, Maurice.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 Nee, Victor and Sonja Oppen. *Capitalism from Below: Market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Nove, Alec.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7.
- OECD. *Measuring the Non-Observed Economy: A Handbook*. Paris: OECD, 2002.
- Perry, Guillermo E., et al. *Informality: Exit and Exclusion*.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The Rise of the South*. New York: UNDP, 2013.
-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and World Bank.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New York: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World Bank, 2009.
- World Bank.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Extending Reach and Increasing Impa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2. 논문

- 계명빈.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임진강』. 창간호 (임진강 출판사), 2007.
-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곽인옥. “북한 시장의 실태 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3.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2008~2011.”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2.
- _____.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3.
-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윤영관·양운철 역음.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9.
-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북한 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8.
- 김석진.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개념적 검토”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 _____. “북중경협 확대 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 리뷰』. 2013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 _____. “북한 무역통계: 해설과 평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편. 『통계를

- 이용한 북한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되었는가.” 『특별 보고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미국의 소리(VOA)), 2014.
-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리규이. “변화하고 있는 ‘조직생활의 나라.’” 『임진강』. 제9호 (임진강출판사), 2010.
- 림근오.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임진강』. 제8호 (임진강출판사), 2010.
- 박영자. “북한의 시장화와 노동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 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9.
- _____.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 박희진.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로.” 북한연구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백순남.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의 장사 경험 1.” 『임진강』. 제11호 (임진강출판사), 2011.
- _____. “겨울철 국수장사 도전: 나의 장사 경험 2.” 『임진강』. 제12호

(임진강출판사), 2011.

손혜민. “현장취재: <박기원 그 순천 사람>.” 『임진강』. 제5호 (임진강출판사), 2009.

_____. “생계업에서 개인기업으로 발전한 돼지 축산업.” 『임진강』. 제8호 (임진강출판사), 2010.

_____. “몽당장사의 등에 업힌 세멘트 연합기업.” 『임진강』. 제15호 (임진강출판사), 2012.

_____. “부동산 시장의 단맛.” 『임진강』. 제16호 (임진강출판사), 2012.

_____. “장사의 도가니, 석탄시장.” 『임진강』. 제19호 (임진강출판사), 2013.

양문수. “사적 자본을 통해 본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서울: 산업연구원, 2010.

_____. “북한의 6.28 방침과 경제개혁.” 북한연구학회 정기 추계학술회의, 2012.

_____. “북한의 시장화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_____. “2014년 상반기 북한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2012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_____.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 논문, 2013.

이석·이종규·정은이. “북중무역 과정 분석: 현지 서베이의 설계와 결과 해석.”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

- 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한국은행), 2006.
- 장세훈. “체제전환기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전망.”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장용석.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소득 분화.”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 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
- 정상화. “북한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 (국가정보학회), 2012.
-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7호 (평화문제연구소), 2007.
-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2012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 _____.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비교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 _____. “북한 도시 노동자의 식량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토지 경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동북아경제학회), 2014.
- _____. “북한에서 부동산 투자 현황에 관한 분석: 주택을 중심으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 주성하. “행방돼지가 설명하는 북 장마당의 분업화.”
<blog.donga.com/nambukstory>.
- 채 순. “개인 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제9호

- (임진강출판사), 2010.
- _____. “인조고기밥: 민중이 만들어내고 즐겨먹는 조선의 대중음식.” 『임진강』. 제10호 (임진강출판사), 2010.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08.
- _____.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 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8.
- _____.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 홍 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_____.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 홍일선. “모바일 혁명이 아프리카를 바꾼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1.3.3.
- Afrika, Jean-Guy and Gerald Ajumbo. “Informal Cross-Border Trade in Africa: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frican Economic Brief*. Vol. 3, Issue 10. African Development Bank, November 2012.
- Aker, Jenny C. and Isaac M. Mbiti. “Mobile Ph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4, No. 3, 2010.

- Andrews, Dan, Aida Caldera Sanchez, and Asa Johansson.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formal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73, 2011.
- Argenti, O., S. Francois, and H. Mouawad. "The Informal Food Sector: Municipal Policies for Operators." *Food into Cities Collection*. DT/43-99E, 2003.
- Aryeetey, Ernest. "The Informal Economy,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Framework Paper for African Economic Research Consortium Project Workshop on Understanding Links between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Africa*. Nairobi: AERC, 2009.
- Benett, John. "Informal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Entrepreneurial Stepping Stone or Consolation Priz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4, No. 1, 2010.
- Carr, Marilyn and Martha Alter Chen. "Globalization and the Informal Economy: How Global Trade and Investment Impact on the Working Poor." *Working Paper*. Cambridge: WIEGO, May 2001.
- Cervero, Robert and Aaron Golub. "Informal Transport: A Global Perspective." *Transport Policy*. Vol. 14, Issue 6, 2007.
- Charmes, Jacques. "The Informal Economy Worldwide: Trends and Characteristics." *Margin—The Journa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Vol. 6, No. 2, 2012.
- Cheng, Yuk-shing and Shu-ki Tsang. "The Changing Grain Marketing System in China." *China Quarterly*. No. 140, November 1994.

- Conroy, John D. “Intimations of Keith Hart’s Informal Economy in the Work of Henry Meyhew, P. T. Bauer and Richard Salisbury.” *Working Paper*. No. 12-05.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2.
- _____. “The Idea of a Rural Informal Economy.” *Working Paper*. No. 13-09.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13.
- Dargay, Joyce, Dermot Gately, and Martin Sommer. “Vehicle Ownership and Income Growth, Worldwide: 1960~2030.” *The Energy Journal*. Vol. 28, No. 4, 2007.
- Deen-Swarrray, Mariama, Alison Gillwald, and Ashleigh Morell. “Lifting the Gender Veil on ICT Indicators in Africa.” *Policy Paper*. No. 13, 2012.
- Deen-Swarrray, Mariama, Mpho Moyo, and Christoph Stork. “ICT Access and Usage among Informal Business in Africa.” *Info*. Vol. 15, No. 5, 2013.
- Deloitte LLP. “What is the Impact of Mobile Telephony on Economic Growth?.” *A Report for the GSM Association*. Deloitte LLP, November 2012.
- Easterly, William, Martha de Melo, and Gur Ofer. “Services as a Major Source of Growth in Russia and Other Former Soviet Stat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ashington, D.C.: World Bank, 1994.
- Eilat, Yair and Clifford Zinnes.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Friend or Foe? A Polic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Vol. 30, No. 7, 2002.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 Assessment Mission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me: FAO/WFP, 2013.
- Fugazza, Marco and Norbert Fiess. "Trade Liberalization and Informality: New Stylized Facts." *Study Series*. No. 43.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0.
- Gerxhani, Klarita. "The Informal Sector i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 Literature Survey." *Public Choice*. Vol. 120, No. 3-4, 2004.
- Ghani, Ejaz. "Is Service-led Growth a Miracle for South Asia?." Ejaz Ghani (ed.). *The Service Revolution in South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Ghani, Ejaz and Homi Kharas. "The Service Revolution in South Asia: An Overview." Ejaz Ghani (ed.). *The Service Revolution in South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Godard, X. "Coping with Para-transit in Developing Countries: A Scheme of Complementarity with Institutional Transport." *paper presented at Future Urban Transport Conference*. Gothenberg, Sweden, 2006.
- Grossman, Gregory.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1977.
- Gurtoo, Anjula and Colin C. Williams.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Sector: Some Lessons from India."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Vol. 10, No. 1, 2009.
- Hart, Keith. "Bureaucratic Form and the Informal Economy." Basudeb Guha-Khasnobis, et al. (eds.). *Linking the Formal*

-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Huang, Jikun, Keijiro Otsuka, and Scott Rozelle. "Agriculture in China's Development." Loren Brandt and Thomas G. Rawski (eds.).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ILO. "Statistical Update on Employment in Informal Economy." Geneva: ILO, June 2012.
- Johnson, Simon, Daniel Kaufmann, and Andrei Shleifer. "The Unofficial Economy in Transi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97, No. 2, 1997.
- Joo, Hyung-min.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 Economy in North Korea." *Economy and Society*. Vol. 39, No. 1, February 2010.
- Kaufmann, Daniel and Aleksander Kaliberda. "Integrating the Unofficial Economy into the Dynamics of Post-Socialist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691, 1996.
- Kim, Byung-Yeon.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f Soviet Households: Size and Dyna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1, No. 3, 2003.
- Kim, Byung-Yeon and Dongho Song.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 No. 2, 2008.
- Kucera, David and Xenogiani Theodora. "Persisting Informal Employment: What Explains It?." Johannes P. Jutting and

- Juan R. de Laiglesia (eds.). *Is Informal Normal?: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Paris: OECD, 2009.
- Lankov, Andrei, Seok-hyang Kim, and Inok Kwak. "Relying on One's Own Strength: The Growth of the Private Agriculture in Borderland Areas of North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9, No. 2, 2011.
- La Porta, Rafael and Andrei Shleifer. "The Unoffici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Fall 2008.
- Lee, Keun and Hong-Tack Chun. "Secrets for Survival and the Role of the Non-State Sector in North Korean Economy." *Asian Perspectives*. Vol. 25, No. 2, June 2001.
- Lesser, Caroline and Evdokia Moise-Leeman. "Informal Cross-border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Reform in Sub-Saharan Africa: Final Report."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86, 2009.
- McMillan, John and Christopher Woodruff. "The Central Role of Entrepreneurs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3, 2002.
- McMillan, Margaret S. and Kenneth Harttgen. "What is Driving the 'African Growth Miracle'?" *NBER Working Paper*. No. 20077, 2014.
- Mishra, Neelkanth and Ravi Shankar. "India's Better Half: The Informal Economy." *Equity Research*. No. 09, July 2013.
- Noland, Marcus, Donghyun Park, and Gemma B. Estrada. "Developing the Service Sector as Engine of Growth for

- Asia: An Overview.” *ADB Economics Working Paper*. No. 320, 2012.
- O’Hearn, Dennis. “The Consumer Second Economy: Size and Effects.” *Soviet Studies*. Vol. 32, No. 2, April 1980.
- Park, Donghyun and Kwanho Shin. “The Service Sector in Asia: Is It an Engine of Growth?.” *ADB Economics Working Paper*. No. 322, 2012.
- Qiang, Christine Zhen-Wei. “Mobile Telephony: A Transformational Tool for Growth and Development.”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Issue 4, November 2009.
- Scase, Richard. “The Role of Small Businesses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Real But Relatively Unimportan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16, No. 1, October 1997.
- Sinha, Anushree. “Trade and the Informal Economy.” Marion Jansen, et al. (eds.). *Trade and Employment: From Myths to Facts*. Geneva: ILO, 2011.
- Smallbone, David and Friederike Walter. “The Distin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6, No. 4, 2001.
- _____. “Entrepreneu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Necessity or Opportunity Driven?.” *Paper to the Babson College-Kauffman Founda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Babson, USA, June 2003.
- Tamvada, Jagannadha Pawan. “Entrepreneurship and Welfar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4, No. 1, 2010.

- Webb, Justin W., Laszlo Tihanyi, R. Duane Ireland, and David G. Sirmon. "You Say Illegal, I Say Legitimate: Entrepreneurship in the Informal Econom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4, No. 3, 2009.
- Williams, Colin C. "Entrepreneurs Operating in the Informal Economy: Necessity or Opportunity Driven?."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Vol. 20, No. 3, 2012.
- Williams, Colin C. and John Round.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Economy: A Study of Ukraine's Hidden Enterprise Culture."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 12, No. 1, 2007.
- Williams, Colin C. and Sara Nadin. "Entrepreneurship and the Informal Economy: An Overview."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 15, No. 4, 2010.
- Williams, Colin C. and Youssef Youssef. "Evaluating the Gender Variations in Informal Sector Entrepreneurship: Some Lessons from Brazil."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 18, No. 1, 2013.
- Young, Alwyn. "The African Growth Mirac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20, No. 4, August 2012.

3. 기타자료

『데일리NK』.

『시사저널』.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중앙선데이』.

『NK조선』.

『NK Vision』.

“2007 현지르포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 스페셜』.

“김정은 2년, 북한은.” 『KBS 파노라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무역통계』.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_____. 『중국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2009.

_____. *National Nutritional Survey 2012*. Pyongyang: CBS, 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www.gemconsorium.org/data>.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ashington, D.C.: IMF,
2014.

UN Comtrade Databas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丹東年鑑』.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원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기 타

비매품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